

제9회 지방선거 정의당 정책공약집

내란 너머, 회귀가 아닌 전환

**공존을 위한
5대 사회계약으로
누구나 마음 놓고 사는 지역**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의당

인사말

**이제, 같이 삼시다!
같이 갑시다!
공존을 위한 사회계약,
정의당이 여러분의 동네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정의당 대표 권영국입니다.**

2024년 12월, 시민의 힘으로 내란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지켜졌어도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노동자, 월세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청년, 극한 기후 앞에 무방비로 놓인 지역 주민들. 거대양당은 서로 싸우느라 바쁘지만, 불평등을 방치하는 일에는 한 몸입니다.

정의당은 2025년 대선에서 ‘불평등 세상을 갈아엎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여러분이 사는 바로 이 동네에서 실현하려 합니다. 나만 살겠다는 사회에서 같이 살겠다는 사회로, 혼자 가겠다는 정치에서 같이 가겠다는 정치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이번 지방선거입니다.

정의당은 다섯 가지 ‘공존의 사회계약’을 약속드립니다.

어디에 살든 살던 곳에서 살 수 있도록 기본을 보장하고 지역격차를 줄이는 지역 공존, 기술 전환 시대에 노동을 보호하는 동시에 변화에 적응하도록 돕는 기술-노동 공존, 지구의 한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지구-인간 공존, 지역공공은행과 지역돌봄으로 경제를 살리는 공존경제, 다양한 시민과 문화를 존중하는 다양성 공존.

이 약속의 바닥에는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시민은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이며, 지방정부는 그 권리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인구전환, 기술전환, 생태전환이 복합적으로 진행될 때 정치는 시민에게 이로운 전환을 만들기 위한 전망과 전략을 제시해야 합니다.

**무상급식도, 공공의료도, 공공교통도 진보정당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항상 변방에서 시작됩니다.**

복합전환 시대에 시민을 각자도생의 정글에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불평등이 삶을 떠밀 때 기본서비스로 받쳐주고,
기술이 일자리를 위협할 때 일자리보장제와 기술이 만든 수익을 공적으로 배분함으로써 대응하고,
기후가 삶을 흔들 때 에너지자립과 자원순환을 제도화함으로써,
우리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 구조를 다시 만들겠습니다.

그 새로운 전망과 전략을 5대 사회계약에 담았습니다.

정의당은 이 약속을 여러분이 사는 바로 이 동네에서부터 지키겠습니다.

정의당과 함께 시작해 주십시오.

이제, 같이 삽시다. 같이 갑시다.

2026년 5월 정의당 대표 권영국



“같이 살고, 같이 가는” 새로운 사회계약에 대하여

지금 여기 우리의 삶은 근본적인 변화의 물결, 그 한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것도 아니고, 이미 지나간 것은 더욱 아니며, 지금 여기 우리의 자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들은 기존 질서와 기존 가치를 의심하고, 도전하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기존의 것들에게는 위기를 의미합니다. 인구구조와 가족구조, 생태계와 기후, 노동관계와 같이 기존에도 있어왔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반면, 플랫폼 경제,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등과 같이 새로운 것들이 등장하여 나머지 세상에 변화를 추동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 전에 해결했어야 하는 과거의 숙제들로부터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서울의 팽창과 지방소멸, 각자도생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정글이 되어버린 경제구조, 다양성이 늘어나고 있으나 끝내 다양한 존재들을 인정하지 않는 경직된 인식의 문제들은 오래된 우리 사회의 문제이지만 어느 것하나 쉽사리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변화와 위기에 대한 대응에는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뿌리깊은 문제를 기존의 질서와 기존의 사회계약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면, 이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합니다. 우리 당은 끝내 해소되지 않는 기존의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새롭게 등장하는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각자도생과 무한 경쟁을 넘어 ‘같이 살고, 같이 가는’ 공존의 해법을 다섯 개의 새로운 사회계약의 이름으로 제시합니다.

“같이 살고, 같이 가는”

지역공존 사회계약

서울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 어디든 살만한(livable)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공존의 사회 계약입니다. 주거, 교통, 의료부터 시작하여 돌봄, 통신, 교육, 고용, 먹거리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필요로 하는 필수 서비스를 공공이 중심이 되어 공급합니다. 이를 통해 일하는 보통 사람은 그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만한(affordable) 수준으로 낮추겠습니다. 지역 어디든 일자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서울로, 서울로, 끝없이 집중되는 자원과 기회를 지역에 머물게하고, 에너지, 쓰레기 처리, ‘기피시설’ 등 서울의 부담을 더이상 지역이 떠맡지 않는 상생과 공존의 지역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약속입니다. 지역의 문제를 지역의 주민들이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약속입니다.

기술-노동 공존 사회계약

플랫폼과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등으로 대표되는 급속한 기술전환, 특히 디지털전환의 국면에 인간이 소외되지 않고 공존할 수 있기 위한 사회계약입니다. 특히 노동이 중요합니다.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디지털전환의 전 과정이 소수의 거대자본과 산업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과 노동의 번영을 위한 유용한 수단과 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한 약속입니다. 노동권은 일관되게 보호될 것이며, 기술사회 생산력의 발전에 맞추어 노동시간도 줄어들 것입니다. ‘기술 봉건주의’라고까지 불리우는 지금 시대에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과 정보인권을 보호하고 디지털 방어권을 강화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이들이 기술과 공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의 약속도 포함합니다. 기술이 그 자체로 권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사람과 노동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한 약속입니다.

지구-인간 공존 사회계약

부인할 수 없는 기후위기의 시대, 사람과 지구가 오랫동안 공존하기 위한 사회계약입니다. 이는 곧 미래세대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기후위기와 생태계 멸절의 위협에 비해 너무나 더디게, 너무나 미미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거대한 거인의 한 발을 내딛기 위한 사회계약입니다. 한편으로는 인류의 생존을, 다른 한 편으로는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해야 하는 ‘도너츠 모형’의 구현이 필요합니다. 서울이든 지방이든 지역을 막론하고 에너지는 지산지소의 원칙 아래 탈원전 탈탄소 재생에너지로 빠르게 전환되어야 합니다. 건물을 포함한 각종 생활 용품과 제품은 탈탄소를 최우선 가치로 하여 재사용reuse과 고쳐쓰

새로운 사회계약에 대하여

기reform, 리모델링remodel 중심으로 재활용의 프레임을 넘어서 순환경제로 전환할 것입니다. 교통과 냉난방, 먹거리 등의 영역에서는 탈방사능, 탈탄소와 친생태, 친지구의 원칙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방사능과 미세먼지를 태양과 바람으로 바꾸어나갈 것입니다. 지구와 사람의 오랜 공존을 지키기 위한 약속입니다.

공존경제 사회계약

각자도생과 무한 경쟁을 넘어 모든 경제주체가 상생과 공존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계약입니다. 각자도생과 무한 경쟁은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의 다른 모습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존을 위해 이들 사이에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약속입니다. 모세혈관처럼 골목골목에 자리잡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대자본의 막강한 힘에 밀려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약속입니다. 지역 순환 경제가 지역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게 하고, 돌봄 경제가 사람들의 존엄한 삶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반이 되게 하는 공존의 경제를 위한 약속입니다.

다양성 공존 사회계약

존재 자체가 소중한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배경과 특성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공존을 도모하는 사회계약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과 배제, 혐오가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발디딜 공간이 없게 하고, 모든 사람이 마땅한 존엄함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약속입니다. 젠더 폭력을 포함한 일체의 폭력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을 포함,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약속입니다. 비인간존재와의 공존을 모색하고, 다양성이 꽃 피는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약속입니다. 진정한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약속입니다.

목차

01 5대 사회계약

지역 공존 사회계약	11
기술-노동 공존 사회계약	50
지구-인간 공존 사회계약	70
공존 경제 사회계약	87
다양성 공존 사회계약	118

02 대상별 공약

아동	142
청소년	144
청년	147
여성	149
중장년	151
어르신	153
장애인	155
성소수자	158
이주민	159
소상공인·자영업자	161
농어민	163
예술인	166

03 지방정치의 약속

지방자치	169
지방재정	170

04 지역별 공약

서울	173
전남광주	178
인천	181
대전	183
부산	185
대구	186
울산	188
경기	190
강원	200
충북	204
충남	207
전북	209
경북	210
경남	213
세종	215
제주	216

01 5대 사회계약

지역 공존 사회계약

기술-노동 공존 사회계약

지구-인간 공존 사회계약

공존 경제 사회계약

다양성 공존 사회계약

01 5대 사회계약

지역 공존 사회계약

전국 어디서든 살 만한 지역으로
당신이 살던 곳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기본서비스

지역 일자리보장제

서울과 지역의 상생

① 기본서비스

: 필수재는 시민의 권리, 공공의 책임
주거, 교통, 먹거리, 의료부터

- [주거] 세입자 계속거주권 보장
- [주거] 전월세 상한제 강화, 한시적 0% 추진
- [주거] 주택 공공선매제 도입
- [주거] 공공임대주택 20% 확보
- [주거] 빈집·유휴시설 공공전환으로 사회주택 공급
- [주거] 최저주거기준 미달 및 노후주택 수리 지원
- [주거] 부동산 시장 안정화 위한 재산세 강화
- [교통] 대중교통 무상화
- [교통] 버스 완전 공영제
- [교통] 우리동네 생활권을 잇는 이음버스
- [교통] 어르신과 임산부, 영유아, 장애인 대상 택시비 지원
- [교통] 틈새를 메꾸는 공유자동차와 공공택시
- [의료]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어린이부터 시작
- [의료] 내 건강 전담, 동네 주치의제 실시
- [의료] 주민이 만드는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지원
- [의료] 간병 서비스 확대 및 질 높이기
- [의료] 노인 만성질환 관리 및 약값 지원
- [먹거리] 도시 먹거리 보장 조례 제정
- [먹거리] 공공급식, 학교를 넘어 모든 공공영역으로
- [먹거리] 로컬푸드 공공 유통 인프라 구축
- [먹거리] 기후 인플레이션 속 시민 식탁 지키기
- [먹거리]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

기본서비스 보장

현황

보편적 기본서비스(Universal Basic Services, UBS)

모든 시민이 지불능력과 무관하게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사회보장의 원칙이자 방식입니다.

- 시혜나 잔여적 복지가 아니라 필수재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 현금이전이 아니라 현물과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시장을 통한 개인의 소비를 넘어 일자리 창출과 사회 공공의 인프라 및 자원을 확대합니다.
- 서비스 공급을 위해서는 권한과 역할이 중앙에서 지역으로 분권화 되어야 하며, 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과 이용자나 주민이 주체로서 참여해야 합니다.
- 특히 기후위기 시기에 소비와 성장 중심 경제를 필요와 삶의 질 중심 경제로 전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본서비스의 7개 영역(영국 UCL세계변영연구소, 2017)

모든 시민에게 물리적 안정, 기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고 대체불가능한 영역으로 주로 다음의 7개 영역이 제시됩니다. - 주거, 먹거리, 교통, 의료, 돌봄, 교육, 정보통신

복합전환과 기본서비스

정의당은 복합전환의 비용을 시장에 맡기면서 시민 개인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돌파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7대 필수재를 시민의 권리로 보장하는 기본서비스 체제, 이것이 전환의 시대를 통과하는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약속

첫째, 보편적 기본서비스 보장 조례 제정

기본서비스를 규정하고 이를 시민의 권리이자 공공의 책임으로 규정하겠습니다. 우선 주거, 먹거리, 교통, 의료부터 기본서비스로 보장하기 위한 전달체계와 재원을 명시하겠습니다.

둘째, 기본서비스 특별회계 신설 및 공공 중심 운영

불필요한 대형 토건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하여 기본서비스에 우선 투입하는 특별회계를 운영하겠습니다. 민간 위탁이 아닌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직영 및 사회연대경제와의 협력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셋째, 주민 주도 기본서비스 위원회 운영

우선 필요한 기본서비스 항목과 운영 방식을 주민이 직접 결정하고 감시하는 ‘주민 기본서비스 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 운영과 함께 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주거] 세입자 계속거주권 보장

현황

“2년마다 이사 걱정… 내 집이 아닌 이상, 언제든 나가야 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세입자가 원하면 1회 계약 연장(2+2년)은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집주인의 의사에 따라 거주를 지속할 수 없습니다. 결국 많은 세입자들이 4년마다 이사를 고민해야 하는 불안정한 삶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에 악용, 세입자는 협상력 없는 ‘을’”

현재 제도는 세입자를 바꿔 임대료를 올리는 방안으로 악용되거나, 정보 비대칭과 공급 부족 속에서 세입자가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해외는 ‘계속 거주’가 기본, 세입자 권리의 시작”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 주거안정을 이룬 국가의 핵심은 세입자 권리 보호이고, 이는 계속거주권 보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심지어 독일은 세입자가 고령이거나 저소득층일 경우 이 집주인이 새로 이사할 집을 알아봐주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약속

첫째, ‘세입자 계속거주권’을 법과 조례로 보장하겠습니다.

임대차 조례를 만들어 세입자 권리를 명시하고, 전월세 상한제, 표준임대료 산정,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공공임대 주택 확대 등과 함께 계속거주권 실질적 보장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부당한 임대 계약종료시 강력히 제재하고 손해배상을 부과하겠습니다.

세입자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세입자의 입장에서 집 구하기, 계약하기, 계약갱신권 청구하기 등을 지원합니다. 집주인의 계약 종료 사유(실거주, 중대한 계약 위반 등)가 사실인지 엄격히 확인하고, 거짓일 경우 강력한 손해배상과 제재를 부과하겠습니다.

셋째, 세입자 조합 설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세입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도록 세입자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세입자 조합 설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주거] 전월세 상한제 강화, 한시적 0% 추진

현황

“전월세 상한? 새로 이사 갈 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현재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을 한 번 연장할 때 전월세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완전히 끝나 새로 이사를 가야 하거나, 집주인이 바뀌어 신규 계약을 맺을 때는 집주인이 부르는 게 값입니다.

“높은 주거비 부담… 서울 평균 원룸 월세 67만원”

최근 통계에 따르면 가구당 쓰는 돈의 약 12.3%가 주거비로 나갑니다(통계청, 2025년 가계동향조사). 밥값(31.3%) 및 교통비(11.5%)와 함께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특히 월세 가구는 23%로 주거비 부담이 2배 이상인데, 이를 액수로 비교하면 자가 가구 주거비는 한 달 약 29만원, 월세 가구 주거비는 한 달 약 58만원입니다. 월세 가구가 최소 30만원의 비용을 더 내고 있습니다.

약속

첫째, 고물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전월세 인상 한시적 0%’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자체 권한으로 5% 내에서 임대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적극 활용하여 한시적으로 전월세 인상 0%를 추진하겠습니다. 안정적 추진을 위해 임대차 조례를 제개정하여 반영하겠습니다.

둘째, 신규 계약시에도 전월세 상한제 적용하도록 인센티브를 도입하겠습니다.

기존 계약을 연장할 때만 적용되던 인상률 제한을 새로운 세입자와 맺는 신규 계약에도 똑같이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재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셋째, 물가 상승률과 연동한 합리적인 ‘표준 임대료’ 제도를 정착시키겠습니다.

한시적 0% 동결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지자체가 지역별·주택별 적정 임대료 기준을 제시하는 ‘표준 임대료’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임대료 인상폭은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강력히 통제하겠습니다.

[주거] 주택 공공선매제 도입

현황

“공공임대주택, 새로 짓기만 기다리기엔 너무 오래 걸립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이 많아져야 합니다. 하지만 새로 땅을 파고 아파트를 짓는 방식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이 걸립니다. 매입임대를 늘려야 합니다.

“시장에 나온 집을 시민의 주거로 되돌릴 통로를 마련해야 합니다”

갭투기로 수십, 수백 채를 쌓아 둔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아도, 그 집은 시민의 거처가 되지 못한 채 또 다른 자산 증식의 도구가 됩니다. 청년과 무주택 세입자들이 집을 사기 어렵다면 공공이 대신 사서 공급해야 합니다.

“거래의 결정적 순간에, 공공은 자리에 없습니다”

주택 거래의 단계에서 시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이 먼저 매물로 나온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이미 주택 공공선매제를 시행 중입니다.

약속

첫째, 다주택자 매물에 대한 ‘주택 공공선매제’를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공공선매제’란 시장에 집이 매물로 나왔을 때, 국가나 지자체(LH, SH 등 공공기관)가 투기 세력이나 민간보다 ‘먼저 적정 가격에 사들일 수 있는 우선권’을 갖는 제도입니다. 법 제정을 추진하고, 조례와 제도를 통해 인센티브 등을 설계하겠습니다.

둘째, 사들인 집은 도심 속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즉시 전환하겠습니다.

공공이 선매한 주택은 새로 아파트를 지을 필요 없이 리모델링만 거쳐 무주택 서민, 청년,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즉각 공급하겠습니다.

[주거] 공공임대주택 20% 확보

현황

“공공임대주택 6%,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여전히 8% 수준이나 이 중 분양전환 주택 등을 제외하면 6% 수준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이 시장의 20%는 차지해야 임대료 및 주거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 주거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로 가는 것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입니다.”

집을 소유하는 사회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유해야만 살 수 있는 사회는 반대합니다. 소유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질 때 집은 부동산이 아니라 주거로 기능하게 됩니다.

약속

첫째, 대한민국 전체 주택의 2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채우겠습니다.

전체 주택 5채 중 1채(20%)를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시장에 저렴하고 안정적인 공공의 집이 20% 이상 풀리면, 민간 집주인들도 함부로 전월세를 올릴 수 없어 대한민국 전체의 주거비가 획기적으로 낮아집니다.

둘째, 공공택지 100% 공용개발과 공공매입임대 예산 2배 확대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습니다.

공공택지 절반은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절반은 토지비를 절감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지자체의 공공매입임대 예산을 2배로 확대하여 매입을 통한 공공임대도 늘려가겠습니다.

[주거] 빈집·유휴시설 공공전환으로 사회주택 공급

현황

“마을의 안전을 위협하는 ‘유령의 집’이 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전국 빈집(미거주 주거)은 160만호에 달합니다(2024, 통계청, 주택총조사).

“천정부지 주거비, 공공임대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위주의 공공임대 공급은 부지 확보와 건설 비용 문제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심 내 이미 존재하는 공간을 활용하는 ‘전환의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유휴 공공시설, 민간 매각이 정답은 아닙니다”

폐교, 이전한 파출소, 낡은 동사무소 등 활용도가 낮아진 공공시설들이 수익성 논리에 밀려 민간 개발업자에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세워진 자산은 다시 시민의 주거권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약속

첫째, 빈집·유휴시설을 전수조사하여 ‘공공 자산 뱅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자체별로 방치된 민간 빈집과 저활용 공공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지역 자산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방치된 지 일정 기간이 지난 빈집에 대해서는 공공 매입이나 장기 임대 계약을 통해 우선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둘째, 사회적 경제 주체가 운영하는 ‘커뮤니티형 사회주택’을 대량 공급하겠습니다.

공공이 매입하거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 건물을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에 위탁 운영하겠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잠만 자는 곳이 아닙니다. 1층에는 마을 카페나 공유 주방을, 옥상에는 주민 정원을 배치하여 입주자와 인근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마을형 주거 모델’을 안착시키겠습니다.

셋째, 빈집 리모델링 시 ‘용도 변경 및 건축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겠습니다.

낡은 여관, 고시원, 오피스 건물을 주거용 사회주택으로 바꿀 때 걸림돌이 되는 주차장 설치 의무나 용적률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대신 이를 통해 얻은 이득은 저렴한 임대료(시세의 50~80% 이하)와 장기 거주 보장으로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주도록 법제화하겠습니다.

[주거] 최저주거기준 미달 및 노후주택 수리 지원

현황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생존을 위협받는 아슬아슬한 거처들”

햇빛 한 줍 들어오지 않는 곰팡이 핀 반지하, 여름엔 찜통이고 겨울엔 얼음장 같은 옥탑방,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고시원. 이른바 ‘지옥고’라 불리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여전히 수많은 시민과 청년들이 살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폭우와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이러한 노후·불량 주택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의 최전선이 되었습니다.

“고치고 싶어도 돈이 없고, 집주인은 외면합니다”

벽이 갈라지고 물이 새도, 하루하루 먹고살기 바쁜 저소득 가구에게 수백만 원이 드는 집수리는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일입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해도 “싫으면 나가라”는 차가운 대답이 돌아오거나 수리비를 핑계로 월세를 올리기 일쑤라, 결국 테이프로 창문을 막고 추위를 견뎌야만 합니다.

“구멍 난 집으로 새어나가는 에너지, 난방비 폭탄의 원인입니다”

단열이 전혀 되지 않는 노후 주택은 아무리 보일러를 틀어도 밀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이른바 ‘에너지 빈곤층’은 추위에 떨면서도 부유층보다 소득 대비 훨씬 더 많은 난방비와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역설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약속

첫째,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안심 집수리 바우처’를 전면 지급하겠습니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지은 지 오래된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자가 및 세입자 모두 포함)에게 도배, 장판, 방수, 곰팡이 제거 등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의 ‘집수리 바우처’를 지원하겠습니다. 세입자가 직접 바우처를 신청해 집을 고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치고, 집주인에게는 수리를 조건으로 일정 기간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게 하는 상생 협약을 맺겠습니다.

둘째, 기후위기에 맞서 집의 체질을 바꾸는 ‘그린 리모델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단순한 땀질식 처방을 넘어, 노후 주택의 창호를 고효율 이중창으로 바꾸고 친환경 보일러와 단열재를 설치하는 ‘에너지 효율 개선(그린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집이 따뜻해지

면 시민들의 난방비 시름이 덜어지고,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도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셋째,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저주거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강제하겠습니다.

임대차 조례를 통해 비현실적인 최저주거기준(면적, 채광, 환기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ی겠습니다. 이 기준에 미달하는 불법 쪼개기 방이나 재난 위험 거처를 임대 시장에 내놓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겠습니다.

[주거] 부동산 시장 안정화 위한 재산세 강화

현황

“집은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보금자리여야 합니다”

집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상식이지만, 그동안의 부동산 세금 제도는 잦은 개편과 각종 ‘꼼수 감면’ 혜택으로 누더기가 되어 다주택자들의 투기를 제대로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세금을 피해가는 투기 대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방세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세 탄력세율을 50% 내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주택 투기에 대한 재산세를 강화하겠습니다.

약속

첫째, 다주택자의 투기성 보유에 보유세를 강하게 부과하겠습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 특히 투기 과열 지역의 갭투기 세력에 대해 재산세를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둘째, 걷은 세금은 시민의 주거 권리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확충, 노후주택 수리, 주거 취약계층 주거비 지원 등에 사용하겠습니다.

[교통] 대중교통 무상화

현황

“내 월급 빼고 다 올랐는데, 교통비까지...”

최근 통계에 따르면 가구당 쓰는 돈의 약 11.5%가 교통비로 나갑니다(통계청, 2025년 가계동향조사). 밥값(31.3%)과 주거비(12.3%)에 이어 큰 부담이죠.

“지역 차별 없는 혜택이 필요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K-패스는 쓴 만큼 돌려받는 방식이라 편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프라가 잘 갖춰진 수도권 이용자가 전체의 약 80%에 달합니다(나라살림연구소, 2026년).

“이미 세계는 무상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독일의 ‘9유로 티켓’과 ‘49유로 티켓’은 저렴한 정액권이 대중교통 이용을 늘릴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룩셈부르크는 아예 대중교통을 무상화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중교통이 해답입니다”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을 막으려면 자가용 대신 버스와 지하철을 타야 합니다.우리나라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여전히 약 37.6%에 불과합니다(국토교통부, 2023년).

약속

첫째, 우리 아이와 어르신부터 ‘무상 대중교통’

아동·청소년(7~18세),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부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지하철을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 시내버스, 마을버스, 도시철도

2단계 : 광역버스

3단계 : GTX, 신분당선 등 민자 철도 포함

둘째, 농어촌과 도서지역부터 ‘무상 대중교통’

고령 인구가 많은 군단위 농어촌지역과 도서지역에서부터 버스 무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공유 자동차, 공공택시, 이음버스 등 부족한 대중교통을 메우는 정책과 병행하겠습니다.

셋째, 국가가 책임지는 ‘2030 대중교통 완전 무상화 로드맵’

대중교통 운영을 지자체에만 맡기지 않겠습니다. ‘대중교통 공익서비스 의무법(PSO법)’을 만들어 중앙정부가 유류세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대중교통 예산을 든든히 지원하게 하겠습니다.

[교통] 버스 완전 공영제

현황

“세금은 붓는데, 혜택은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버스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적자를 메워주면서 운영은 민간 버스 회사가 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일부 민간 업체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와 이윤 챙기기로 인해 정작 시민을 위한 서비스 개선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안 되면 버스타도 끊깁니다”

민간 업체는 기본적으로 ‘수익성’을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용객이 적은 농어촌 지역이나 변두리 동네의 노선은 자꾸만 줄어들거나 배차 간격이 길어집니다. 결국 차가 없는 학생, 어르신,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피곤한 기사님, 불안한 승객들”

이윤을 남기기 위해 무리한 배차 시간표를 짜거나 노동 환경을 제대로 개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약속

첫째, 세금 낭비 없는 ‘버스 완전 공영제’를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버스는 이윤을 남기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입니다. 지자체 산하에 공공 교통 법인을 설립하여, 버스를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며 주민에게 필요한 노선을 짜는 ‘완전 공영제’로 전환하겠습니다.

둘째, 이윤보다 ‘시민의 필요’에 따라 노선을 촘촘히 짜겠습니다.

돈이 안 된다고 노선을 없애는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수익성과 관계없이 시민이 살고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버스가 닿을 수 있도록,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노선을 복원하고 배차 간격을 줄이겠습니다. 우리 동네 구석구석을 잇는 진정한 ‘발’이 되게 하겠습니다.

셋째, 버스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안전한 친절 버스’를 만들겠습니다.

버스 노동자의 안전이 곧 시민의 안전입니다. 완전 공영제를 통해 버스 운수 종사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겠습니다.

[교통] 우리동네 생활권을 잇는 이음버스

현황

“집 앞부터 정류장까지, 그 ‘1km’가 고비입니다”

지하철역이나 주요 간선버스가 다니는 큰길까지 나가는 길, 누군가에게는 가벼운 산책길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고된 길입니다. 좁은 골목이나 언덕이 많은 동네, 혹은 정류장 간격이 넓은 외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대중교통을 타러 가는 과정 자체가 이미 큰 노동입니다.

“동네 병원 가고 장 보는 ‘생활 이동’이 불편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먼 거리를 오가는 출퇴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네 병원에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거나, 복지관에 들르고,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등 내가 사는 ‘생활권’ 안에서의 짧은 이동이 훨씬 빈번합니다.

“기존 마을버스는 배차 간격이 너무 깁니다”

적자를 이유로 기존 마을버스들은 노선을 줄이거나 배차 간격을 30분~1시간씩 늘리고 있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어르신들이나 하교하는 아이들이 길가에서 하염없이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열악한 환경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약속

첫째, 15분 생활권을 묶는 소형 ‘우리동네 이음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동네 안의 주요 거점(복지관, 보건소, 전통시장, 학교 등)과 주요 환승역을 촘촘하게 순환하는 친환경 전기·소형 버스를 투입하여 우리 동네 전용 ‘발’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부르면 달려오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을 확대하겠습니다.

정해진 노선만 도는 것이 아니라, 앱이나 전화로 호출하면 비슷한 경로의 승객을 모아 실시간으로 노선을 만들어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버스(DRT)’를 생활권 거점마다 전면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이음버스 또한 ‘대중교통 무상화’에 포함하여 부담을 없애겠습니다.

마을 단위로 움직이는 이음버스 역시 정의당이 약속한 ‘대중교통 무상화’ 혜택을 100%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어르신과 임산부, 영유아, 장애인 대상 택시비 지원

현황

“버스를 타고 싶어도 탈 수가 없습니다”

대중교통 무상화가 시행되어도,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임산부, 유아차로 이동하는 영유아 부모들에게 정류장까지의 먼 거리, 높은 계단, 뽀비는 출퇴근길 지하철은 여전히 거대한 장벽입니다.

“병원 한 번 가려면 하루를 다 써야 합니다”

장애인 콜택시(특별교통수단)를 부르면 평균 40분에서 길게는 2시간 이상을 길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은 차량 대수 자체가 부족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비싼 일반 택시, 주머니 사정이 발목을 잡습니다”

결국 급할 때는 일반 택시를 타야 하지만,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어르신과 임산부, 장애인 가구에게 택시비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이동의 제약이 곧 건강의 악화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약속

첫째, ‘안심 택시 바우처’를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만 70세 이상 어르신과 중증·경증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를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의 택시비 바우처(이용 보조금)를 지원하겠습니다. 전용 카드로 일반 택시를 호출하고 결제할 때 요금의 상당 부분을 공공이 지원합니다.

둘째, ‘장애인 콜택시’의 대기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바우처’를 통해 일반 택시(바우처 택시)를 저렴하게 이용하게 되면,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장애인 콜택시)는 꼭 필요한 휠체어 이용자에게 집중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콜택시 대기 시간을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셋째, 유아차, 휠체어가 바로 타는 ‘유니버설 디자인 택시’를 확대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영국의 ‘블랙캡’처럼 휠체어나 유아차를 접지 않고도 그대로 탈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모두를 위한 디자인) 택시 도입을 지자체와 협력해 지원하겠습니다. 누구나 눈치 보지 않고 탈 수 있는 택시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교통] 틈새를 메꾸는 공유자동차와 공공택시

현황

“무거운 짐이 있거나 심야 시간에는 막막합니다”

대중교통이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무거운 짐을 옮겨야 하거나 아이를 급하게 병원에 데려가야 할 때, 혹은 대중교통이 끊긴 심야 시간에는 결국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민간 공유차는 비싸고 특정 지역에만 몰려 있습니다”

앱으로 쉽게 빌려 타는 민간 공유자동차(카셰어링) 서비스가 있지만, 철저히 수익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요금이 비싸고 주로 수도권이나 번화가 위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플랫폼 독점 택시, 기사도 승객도 지쳐갑니다”

거대 IT 기업이 장악한 민간 택시 호출 플랫폼은 골목길 단거리 호출은 배제하고, 수익이 나는 장거리 위주로 배차하는 ‘알고리즘 갑질’을 일삼고 있습니다.

약속

첫째, 동네마다 저렴하게 이용하는 ‘공공 공유자동차’를 도입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주민센터, 공공임대주택 단지마다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친환경(전기·수소) 공공 공유자동차’ 배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둘째, 플랫폼 독점을 깨는 ‘착한 공공 호출 택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거대 플랫폼의 독점을 막고 수수료를 없앤 ‘통합 공공 택시 호출 앱’을 전국 단위로 고도화하겠습니다. 목적지에 따른 승차 거부나 알고리즘 차별을 원천 차단하고, 택시 노동자에게는 정당한 수익을, 시민에게는 빠르고 공정한 배차를 보장하겠습니다.

셋째, 버스조차 들어가지 않는 오지 마을에 ‘공공형 1000원 택시’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마을버스조차 타기 힘든 농어촌 및 산간벽지 주민들을 위해, 전화 한 통이면 1000원만 내고 읍내까지 나갈 수 있는 ‘공공형 마을 택시’를 늘리겠습니다.

[의료]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어린이부터 시작

현황

“건강보험이 있어도 ‘비급여’ 폭탄에 눈앞이 캄캄합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는 우수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 항목이 너무 많습니다.

“아플 때,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족이 아프면,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간병을 하려면 직장을 계속 다니기는 어려운 이중고 속에서, 온 가족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각자도생의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특히 아픈 아이들은 공공이 책임져야 합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비용’이자 ‘리스크’로 여겨지는 사회입니다. 최소한 아이가 아플 때 돈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거나 온 가족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비극은 국가가 막아야 합니다.

약속

첫째,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를 즉각 실시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든, 입원비, 수술비, 비급여 항목까지 모두 포함하여 1년에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병원비를 최대 100만 원으로 제한하겠습니다. 100만 원을 초과하는 모든 병원비는 지방정부가 부담하겠습니다.

둘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2023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성은 65%입니다 이를 80% 이상으로 확대하고, 입원 진료비의 경우 90% 이상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잉 비급여 진료를 강력히 통제하고, 필수 의료 항목들을 건강보험의 테두리 안으로 모두 끌어들이겠습니다.

[의료] 내 건강 전담, 동네 주치의제 실시

현황

“얼굴 한 번 쓱 보고 처방전만 내어주는 ‘3분 진료’에 지칩니다”

오랜 시간 대기해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도 진료는 3분을 넘기기 힘듭니다. 환자가 평소에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지, 식습관은 어떤지 찬찬히 들어줄 시간이 없습니다. 많이 진료할수록 병원에 수익이 돌아가는 현행 제도(행위별 수가제) 탓에, 의사도 환자도 쫓기듯 진료실을 나서야 합니다.

“병이 커진 뒤에야 병원을 찾는 ‘사후약방문’ 의료”

현재 우리의 의료 시스템은 ‘병이 났을 때 치료하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병이 나기 전에 미리 막거나, 가벼운 증상일 때 일상을 관리해 주는 ‘예방’ 시스템은 턱없이 부족하여 결국 더 큰 병과 막대한 병원비를 치르게 됩니다.

약속

첫째, 온 가족의 건강을 꿰뚫고 있는 ‘나만의 동네 주치의’를 두겠습니다.

원하는 동네 단골 의원(내과, 가정의학과 등)을 나의 주치의로 등록하는 제도를 전면 실시하겠습니다. 주치의는 나와 우리 가족의 병력, 생활 습관, 직업적 특성까지 모두 파악하여, 가벼운 질환부터 평소 건강 관리까지 1차로 전담하는 ‘튼튼한 건강 기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큰 병원 치료가 필요할 때는 가장 적합한 전문의에게 바로 연결해 드립니다.

둘째, 아동청소년, 장애인, 어르신부터 도입하겠습니다.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주치의(치과 주치의 병행),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장애인 건강·치과 주치의, 만성질환 관리 중심의 노인 주치의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시군구별 공공 재활병원·경로당 어르신건강문화센터 등 지역 거점과 결합해, 진료실에서 끝나는 의료가 아니라 동네에서 이어지는 의료를 만들겠습니다.

[의료] 주민이 만드는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지원

현황

“동네 병원조차 ‘수익’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씁쓸한 현실입니다”

짧은 진료 시간, 과잉 진료의 유혹, 돈이 안 되는 예방 진료의 부재 등은 의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윤을 내야만 유지되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정부의 공공병원만으로는 우리 동네 구석구석을 책임지기 어렵습니다”

국가가 짓는 대형 공공병원도 꼭 필요하지만, 모든 동네마다 세울 수는 없습니다. 일상 속에서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는 지역 밀착형 돌봄이 절실합니다.

“환자는 ‘소비자’를 넘어, 스스로 건강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건강은 의사에게 일방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병원의 주인이 되어 어떤 진료를 받을지, 우리 동네에 어떤 건강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면 과잉 진료에 대한 불안감 없이 온전히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약속

첫째, 주민이 뭉쳐 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설립 지원금 및 행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동네 주민들과 의료인이 조합원이 되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료사협)’ 설립의 문턱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초기 설립에 필요한 공간 임대 보증금 용자, 세제 혜택은 물론, 복잡한 설립 인가 절차를 한 번에 돕는 ‘전담 지원 센터’를 지자체마다 설치하겠습니다.

둘째, 의료사협을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주치의 제도의 핵심 파트너로 지정하겠습니다.

의료사협은 단순히 진료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방문 간호, 건강 소모임, 반찬 나눔 등 지역 돌봄의 중심지입니다. 지자체가 진행하는 노인 방문 건강관리, 만성질환 예방 사업 등을 동네 사정에 가장 밝은 의료사협에 우선 위탁하여 안정적인 재정을 보장하겠습니다.

[의료] 간병 서비스 확대 및 질 높이기

현황

“한 달 간병비 400만 원, 웬만한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루 15만 원을 훌쩍 넘는 사적 간병비는 한 달이면 400만 원~500만 원에 달합니다. 평범한 서민 가계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라, 결국 가족 중 누군가가 직장을 그만두고 병상 곁을 지켜야만 합니다.

“가장 간병이 필요한 중증환자는 정작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보호자 없이 병원의 전문 인력이 간병까지 책임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도입되어 있지만, 현실은 차갑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손이 많이 가는 ‘중증환자’나 ‘거동 불편 환자’는 입원을 거절당하기 일쑤입니다.

“끝없는 돌봄에 지친 가족들, 비극적인 ‘간병 비극’이 반복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 속에서 가족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간병 비극’ 사건이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간병은 더 이상 개인의 효심이나 가족애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약속

첫째, 서울의료원 등 13개 서울 공공병원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실시하겠습니다.

내가 아파도, 가족이 아파도 간호와 간병 걱정 없도록 공공병원부터 간호간병 책임지겠습니다.

둘째,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축 공공돌봄센터를 통해 지역 간병돌봄 체계 구축하겠습니다.

읍면동마다 공공돌봄센터 설치하고 재가방문간호 및 방문진료와 연계하여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간호간병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공공돌봄센터부터 월급제와 전일제 요양보호사를 도입하고, 중증 장애인이나 야간 근무시 2인 1조 근무제로 노동강도를 낮추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수가를 개선하여 이동시간, 점심시간, 보고서 작성 시간 등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하고 야간과 주말 할증을 인상하겠습니다.

[의료] 노인 만성질환 관리 및 약값 지원

현황

“밥은 굶어도 약은 먹어야 하는데, 약값이 너무 무섭습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나이가 들면서 하나둘 늘어나는 만성질환 탓에 매일 한 움큼씩 약을 드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평생을 드셔야 하는 필수 만성질환 약값은 은퇴 후 고정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에게 식비나 난방비 못지않게 무거운 삶의 짐이 되고 있습니다.

“관리는 안 되고 처방전만 쌓이는 ‘나 홀로 투병’”

만성질환은 약을 먹는 것만큼이나 평소 식단이나 운동 등 일상 관리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의료 시스템은 ‘3분 진료’ 후 처방전만 쥐여줄 뿐, 어르신들의 일상적인 건강 상태를 꾸준히 들여다보고 관리해 주는 곳이 없습니다.

약속

첫째, 어르신들의 필수 만성질환 전면 지원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등 어르신들의 생명과 직결된 대표적인 만성질환 필수 의약품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거나 매월 넉넉한 ‘약제비 바우처’를 지급하겠습니다. 약값이 무서워 치료를 포기하거나 병을 키우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없도록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둘째, 동네 주치의와 전담 약사가 빈틈없이 챙기는 ‘통합 처방 관리’를 도입하겠습니다.

동네 단골 의원과 약국을 ‘우리 동네 건강 지킴이’로 지정하여, 어르신이 드시는 모든 약을 한 곳에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불필요한 중복 처방을 걸러내어 어르신의 간과 신장을 보호하고, 부작용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추겠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는 일석이조의 해법이기도 합니다.

셋째,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 건강·약료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병원이나 약국에 가기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 지역 보건소와 마을 간호사, 약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 약 드시는 시간을 챙겨드리고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방문 서비스를 전면 확대하겠습니다.

[먹거리] 도시 먹거리 보장 조례 제정

현황

“공급망 한 번 흔들리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시민의 식탁입니다”

주요 곡물의 7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릴 때마다 식탁 물가가 가장 먼저 급등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도시 단위에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얼마나 먹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통합 데이터조차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먹거리 정책은 칸막이 행정에 갇혀 있습니다”

같은 도시 안에서도 학교 급식은 교육청, 복지시설 급식은 복지부서, 농민 지원은 농업부서, 취약계층 지원은 사회복지과, 부서마다 따로 굴러갑니다. 시민이 매일 마주하는 한 끼의 식탁 앞에서, 행정은 여전히 흩어진 채로 있습니다.

약속

첫째, ‘도시 먹거리 보장 조례’를 제정하고 시민 먹거리 권리 헌장을 선포하겠습니다.

먹거리에 대한 시민의 권리, 시정부의 책무, 생애주기별 보장 기준을 명문화하는 도시 먹거리 보장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영양 있는 먹거리에 — 능력이 아닌 필요에 따라 — 접근할 권리를 도시 차원에서 선언하겠습니다.

둘째, 분절된 먹거리 행정을 통합하여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학교·복지시설·공공기관 급식, 농민 지원,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도시농업, 공공조달까지 — 흩어진 먹거리 행정을 하나로 묶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자치단체 직속 기관으로 설립하겠습니다. 시민·농민·생산자조합·영양사·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먹거리위원회를 운영해 정책 결정의 민주성을 보장하겠습니다.

셋째, ‘도시 먹거리 종합계획(푸드플랜)’을 5년 단위로 수립하겠습니다.

도시의 먹거리 자급률, 공공급식 친환경 비율, 취약계층 영양 격차, 푸드 마일리지 등 핵심 지표를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먹거리 대시보드를 구축하겠습니다.

[먹거리] 공공급식, 학교를 넘어 모든 공공영역으로

현황

“학교 급식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민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췄습니다”

무상급식 운동은 한국 사회에서 먹거리는 시민의 권리임을 처음으로 입증한 역사적 성취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 있습니다. 군대, 병원, 복지시설, 공공기관에서 매일 수백만 명의 시민이 먹는 한 끼는 여전히 비용을 어떻게 줄일까의 문제로만 다뤄집니다.

“공공급식이 곧 지역 농업의 가장 큰 시장입니다”

공공급식은 단순한 끼니 제공이 아니라 지역 농업을 지탱하는 가장 안정적인 수요처입니다. 그러나 현재 공공급식 식재료의 상당수가 대형 유통업체와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어, 지역 농가에도 시민의 건강에도 모두 손해인 구조가 굳어져 있습니다.

약속

첫째, 공공급식 의무화 영역을 학교 너머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장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시립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공공병원, 시립 청소년시설, 공공기관 구내식당까지 시정부가 운영·관할하는 모든 공공급식에 친환경·로컬푸드 우선 공급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둘째, ‘권역별 친환경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설립해 통합 공급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도시 권역별로 친환경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식재료 수집·검수·가공·배송을 일원화하겠습니다. 시정부와 농협, 지역 생산자조합, 의료사회적협동조합, 학부모 대표가 공동 운영하는 거버넌스를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대학생 반값 점심’과 ‘공공기관 채식 선택권’으로 공공급식의 새 지평을 열겠습니다.

지방 국공립대학을 시작으로 친환경 반값 아침과 점심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시민 누구나 청년기 가장 빠듯한 시기에 든든한 한 끼를 보장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공급식에 주 1회 채식 식단과 비건 선택권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먹거리] 로컬푸드 공공 유통 인프라 구축

현황

“농민이 받은 가격과 시민이 낸 가격 사이에, 너무 많은 것이 끼어 있습니다”

농민이 정성껏 키운 농산물은 5단계가 넘는 유통 과정을 거치며 제값을 받지 못합니다. 시민은 비싼 값에 식재료를 사고, 농민은 헐값에 출하합니다. 그 차액은 가운데 낀 거대 유통자본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농민도 시민도 모두 손해 보는 구조가 굳어져 있습니다.

“우리 동네 농산물은 어디서 살 수 있습니까”

많은 시민이 ‘우리 지역 농산물을 사고 싶어도 어디서 살 수 있는지 모른다’고 답합니다. 도시 안에 로컬푸드를 일상적으로 살 수 있는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직매장은 외곽에 한 두 군데 있을 뿐, 시민의 동선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약속

첫째, ‘도심 직거래 공공도매시장’을 설치하고 경매제 의존을 끊겠습니다.

중간 유통 단계를 줄이는 도심 직거래 공공도매시장을 자치단체 차원에서 설치·운영하겠습니다.

둘째, 시민의 동선 안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촘촘히 배치하겠습니다.

지하철역, 대형 주거단지, 공공시설, 전통시장 옆 등 시민이 매일 지나는 길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배치하겠습니다. 동네 로컬푸드 매장을 사회적기업·협동조합·청년 농민조합 등 다양한 주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료 지원과 운영 보조금을 신설하겠습니다.

셋째, 공공 급식 내 ‘지역 농산물 구매 비중’을 50% 이상으로 의무화하겠습니다.

학교, 국공립 어린이집, 공공 병원, 군부대, 복지 시설 등 모든 공공 급식 기관에 대해 ‘로컬푸드 우선 구매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공공 배달 플랫폼’과 결합한 신선 먹거리 배송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연계한 수수료 없는 공공 배달앱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1인 가구, 맞벌이 가정에도 지역 농산물이 직접 배달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먹거리] 기후 인플레이션 속 시민 식탁 지키기

현황

“기후위기가 밥상 물가를 끌어올리는 ‘기후 인플레이션’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국내 평균 기온이 1°C 상승할 때마다 농산물 가격 상승률이 0.4~0.5%p 높아집니다. 폭염·폭우·이상기온이 잦아질수록 시민의 장바구니가 가장 먼저 흔들립니다. 기후 인플레이션은 더 이상 변수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필수 식량의 자급률은 위태롭습니다”

주요 곡물의 7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는 한국에서, 글로벌 공급망이 한 번 흔들리면 도시 식탁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습니다. 그러나 도시 단위의 전략적 먹거리 비축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위기 상황에 대응할 시정부 차원의 매뉴얼도 미비합니다.

약속

첫째, ‘기후취약 품목’을 지정하고 지자체 차원의 ‘공공 비축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기후 민감도·수입 의존도·가격 변동성을 기준으로 기후취약 품목을 매년 지정·고시하고, 시정부 차원에서 핵심 식량의 공공 비축 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저온 저장·스마트 재고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가격 급등 시 신속하게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전략적 비축 인프라를 갖추겠습니다.

둘째, ‘기후 회복탄력성 농업’으로의 전환을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극한 기상에도 견디는 기후 저항성 품종 보급, 재생에너지 기반 스마트팜, 자원순환형 친환경 농업으로의 전환을 시정부가 직접 지원하겠습니다. 중소 농가의 초기 투자비 지원과 기술 교육을 확대하여 대규모 자본만이 살아남는 농업이 아닌 지역 농민과 함께 가는 기후 농업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기후 식탁 안정화 카드’로 시민의 장바구니를 직접 지원하겠습니다.

기후 인플레이션이 임계치를 넘는 시기에 자치단체장이 식탁 안정화 비상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조례로 명시하겠습니다. 비상 조치 발동 시 기후 식탁 카드를 통해 친환경·로컬푸드 구매 시 자동 할인을 제공하여, 시민의 식탁과 지역 농가를 동시에 지키겠습니다.

[먹거리]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

현황

“한 끼를 굶는 시민이 여전히 있습니다”

한국은 OECD 10위권 경제를 자랑하지만, 공식적으로 파악된 결식 우려 아동이 27만 명에 달하고(보건복지부, 2025), 노인 4명 중 1명은 영양섭취부족 상태(통계청, 2021)입니다.

“지원은 있지만 흩어져 있고, 끼니는 자주 비어 있습니다”

급식 카드, 결식 아동 지원, 노인 복지급식, 푸드뱅크 제도는 여러 갈래지만 시민이 그 사이를 직접 찾아다녀야 합니다. 권리로서의 먹거리 보장 이 아니라 시혜로서의 먹거리 지원 에 머물러 있는 것이 가장 큰 한계입니다.

“기후 인플레이션은 가장 약한 식탁부터 흔듭니다”

농산물 가격이 오를 때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타격받는 것은 저소득층의 식탁입니다. 같은 가격 상승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외식 한 번을 줄이는 정도지만, 누군가에게는 한 끼를 거르는 일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먹거리 격차는 가장 빠르게 벌어지는 불평등입니다.

약속

첫째, ‘먹거리 보장 통합카드’로 흩어진 지원을 하나로 묶겠습니다.

결식 아동·청소년 급식 카드, 어르신 식사 지원, 한부모 가정 영양 지원 등 흩어진 제도를 먹거리 보장 통합카드 로 일원화하겠습니다. 자격 갱신과 신청을 한 창구에서 마치고, 사용 시 낙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겠습니다.

둘째, ‘아침이 있는 도시, 공공 아침 간편식’을 확대하겠습니다.

결식 아동·청소년, 1인 가구 어르신, 새벽 노동자에게 공공 아침 간편식 을 권역별 거점에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학교·주민센터·복지관·동네 공공급식소가 시민의 아침 식탁 의 거점이 되도록 만들어, 누구도 빈속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에 공동체 식당 과 주방 설치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셋째, ‘시민 푸드 허브’로 친환경 농산물의 무료·할인 공급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지역 농가의 잉여 농산물, 친환경 매장의 미판매 신선식품을 시민에게 신속하게 연결하는 시민 푸드 허브를 자치구마다 설치하겠습니다.

② 지역 일자리, 노동, 소득 보장

: 일하는 시민의 모든 순간을 지자체가 함께하겠습니다

- 지자체장이 진짜 사장으로서 공공부문 노정교섭
- 지역 일자리보장제, 시민의 일할 권리 보장
- 일자리 전환기 교육·훈련·소득보장
- 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 노후 소득 공백을 메우는 지역 연금

지자체장이 진짜 사장으로서 공공부문 노정교섭

현황

“공공부문에서 지자체장은 사실상 사장입니다. 그런데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직접·간접 고용 노동자, 외주 위탁 노동자, 민간위탁·공공조달 사업장의 노동자까지 지자체장이 진짜 사장입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산하기관에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같은 행정 안에서 일해도, 누구는 정규직, 누구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입니다”

지자체 청사를 청소하는 노동자, 공공시설을 관리·경비하는 노동자, 사회복지시설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노동자는 모두 시민의 일상을 떠받치는 상시지속업무입니다. 직접 고용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노조법은 있지만, 노정 교섭의 자리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노동조합법 제30조 3항은 초기업 단위 교섭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책임을 다하는 지자체는 손에 꼽힙니다. 법은 있는데 교섭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약속

첫째, 지자체장이 ‘진짜 사장’으로서 정기 노정교섭에 직접 임하겠습니다.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 지자체가 직간접 고용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업장과의 정기 노정교섭 체계를 제도화하겠습니다. 임금·노동시간·인력 운영·산업안전 등 핵심 노동 조건을 공공의 책임 아래 다루겠습니다. 노동부시장 및 노동전담 조직을 신설하거나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상시지속업무는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외주 구조를 정비하겠습니다.

청소·경비·시설관리·돌봄 등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는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삼아, 직고용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외주 비용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사회적 비용은 커지는 간접고용 모델을 끊고, 공공 노동의 정상화를 출발선부터 다시 세우겠습니다.

셋째, ‘초기업교섭촉진조례’로 민간 부문 교섭의 중재자 역할까지 맡겠습니다.

노조법 제30조 3항에 근거한 초기업교섭촉진조례를 제정하여, 지자체가 초기업교섭의 중재자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단체협약을 체결한 우수 기업에 공공조달·민간위탁 사업의 우선권을 부여하여, 노동권 보장이 기업의 손해가 아니라 자산이 되는 시장 질서를 만들겠습니다.

지역 일자리보장제, 시민의 일할 권리 보장

현황

“일자리는 시혜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입니다”

일은 단지 소득의 수단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회 안에서 자기 자리를 갖고, 다른 시민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확인하는 가장 근본적인 권리입니다. 일자리도 권리라는 명제를 제도화하여, 시민의 삶이 시장에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시장이 만들지 못하는 일자리, 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일자리”

AI·디지털 전환으로 일자리는 흔들리는데, 정작 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일은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비어 있습니다. 무너지는 동네 돌봄, 손길이 닿지 않는 노후 주택의 단열, 지지부진한 재생에너지 설치와 관리, 모두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시장이 외면해 온 일들입니다. 시민은 일자리가 없고, 사회는 사람이 없는 이 역설은 시장이 풀 수 없습니다. 시장 바깥에서 직접 메우는 것이 지자체의 책무입니다.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노동을 일자리로”

사회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노동에 가장 정당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일자리보장제의 출발점입니다. 지자체가 최후의 고용주를 넘어 사회 혁신의 마중물이 되어, 시장이 만들지 못한 새로운 일과 새로운 직업을 직접 창출하는 주체로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약속

첫째, 기후·돌봄 분야에서 새로운 직무를 발굴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설비 점검사, 동네 단열 진단사, 마을 돌봄 코디네이터, 1인가구 생활지원사, 도시 자원순환 매니저, 그린 리모델링 시공자 등 기후와 돌봄 분야에서 아직 자리잡지 못한 새로운 직업을 지자체가 직접 정의하고 표준 직무를 설계하겠습니다. 교육은 물론 공공이 인증하는 자격 체계도 새로 만들겠습니다. 새로 만든 직업이 경력으로 쌓이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모든 일자리에 ‘생활임금·4대 보험·노동권’을 빠짐없이 보장하겠습니다.

모든 일자리보장제에 생활임금 이상의 급여, 4대 사회보험 가입, 노동법상 휴가·교육·단결권을 빠짐없이 보장하겠습니다.

셋째, 시군구 단위 ‘일자리보장위원회’와 ‘일자리보장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내리꽂는 일자리가 아니라 지역의 사회적 수요를 시민이 직접 모으고 기획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시민·노동조합·전문가·지역기업과 자영업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로 일자리 정책 자체를 시민이 함께 결정하는 자리로 만들겠습니다.

일자리 전환기 교육·훈련·소득보장

현황

“AI·디지털 전환의 충격은 이미 시민의 일자리에 닿아 있습니다”

전국 취업자의 46.6%, 965만 명이 AI 및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일자리 대체 ‘상위’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일하는시민연구소, 2026). 그러나 기술로 인한 이익은 빅테크 기업에게 집중됩니다.

“전환을 준비할 시간도, 교육도 없습니다”

일자리가 흔들리는데 정작 직무 전환을 준비할 통로는 막혀 있습니다. 전국 임금노동자의 63%가 직무역량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시민들은 일자리 전환에 적응할 시간도, 비용도, 통로도 없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실업급여가 종료된 시민은 교육과 구직에 전념할 여력이 없습니다.

약속

첫째, 동네마다 ‘일자리 전환 지원센터’를 설치해 1:1 직무 전환 교육을 책임지겠습니다.

산업 전환에 직면한 노동자가 혼자 떠밀리지 않도록, 지역마다 일자리 전환 지원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AI·디지털 기초, 녹색전환 기술, 돌봄 직무 등 1:1 직무 전환 교육을 지자체가 직접 책임집니다.

둘째, ‘자기계발계좌제’로 평생학습을 시민의 권리로 보장하겠습니다.

모든 시민에게 연간 약 150만 원, 특히 청년기에는 1,000만 원 한도의 자기계발계좌를 보장하겠습니다. 시민 스스로 선택한 기술과 교육을 직업훈련으로 인정·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전환기 소득보장제’로 교육·구직 기간의 생계를 지키겠습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거나 실업급여가 종료된 시민이 교육과 구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환기 생계 소득을 지자체가 보장하겠습니다.

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현황

“가장 기본적인 권리, ‘일할 권리’가 여전히 박탈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중증 장애인에게 일할 권리 자체는 봉쇄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생산성이 낮다며 외면하고, 기존 보호 작업장 모델은 노동을 재활의 보조 수단으로만 다룰 뿐, 노동을 권리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이 시민으로서 일하고 시민으로서 임금을 받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아직 제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장애인 일자리는 ‘값싼 단기직’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 공공일자리 대부분은 단순·반복 업무에 단기·저임금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장애인의 노동을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노동으로 재정의하지 않고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약속

첫째, ‘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최중증 장애인이 UN 장애인권리협약 홍보, 장애 인식 개선 활동, 자기 권리 옹호 활동 등 직접 가치 있는 노동을 수행하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1만 개를 신설하겠습니다. 노동은 능력의 증명이 아니라 시민됨의 표현이기에 장애인이 시민으로서 일하고 시민으로서 임금을 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 ‘생활임금·4대 보험·노동권’을 동등하게 보장하겠습니다.

장애인 공공일자리가 값싼 보조 노동으로 머물지 않도록, 모든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 생활임금 이상의 급여, 4대 사회보험 가입, 노동법상 휴가·교육·단결권을 동등하게 보장하겠습니다. 장애인 노동이 시혜의 자리 가 아니라 권리의 자리에 서도록 제도로 못 박겠습니다.

셋째,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직무 개발과 동료 지원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맞춤형 직무 개발, 동료 장애인 노동자가 함께 일하는 동료 지원(peer support) 체계, 직무 전환과 경력 개발을 돕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센터를 함께 갖추겠습니다.

노후 소득 공백을 메우는 지역 연금

현황

“일터에선 물러났는데 연금은 5년 뒤에 나온답니다”

일터를 떠난 순간부터 첫 연금이 통장에 찍히기까지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이 넘는 ‘소득 공백기(Pension Gap)’가 발생합니다. 이 시기 많은 은퇴자가 노후 자금을 헐어 쓰거나 저임금 단기 일자리를 전전하며 급격한 삶의 질 저하를 겪고 있습니다.

“세계 1위의 노인 빈곤율, 개인의 준비 부족 탓일까요?”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입니다. 자식 교육 시키고 부모 부양하며 정작 본인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한 세대에게, 기초연금만으로는 치솟는 물가와 병원비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의 풍부한 일손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숙련된 기술과 지혜를 가진 은퇴자들이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노인 일자리 사업은 단순 환경 정비 위주로 짜여 있어,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가치 있는 일자리’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속

첫째, 소득 공백기를 책임지는 ‘지역 가치 노동 연금’을 도입하겠습니다.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역 가치 노동’과 연계된 추가 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마을 돌봄, 환경 파수꾼, 지역 문화 해설 등 우리 동네에 꼭 필요한 사회적 기여 활동에 참여하는 은퇴자들에게 생활임금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여, 소득 공백 없이 품위 있는 삶을 유지하도록 돕겠습니다.

둘째, 지역 자산과 연계된 ‘지역 상생 공유 연금’ 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소, 공영 주차장, 지역 기업의 수익 일부를 적립하여 ‘지역 노후 안정 기금’을 만들겠습니다. 이 기금을 통해 소득 하위 계층뿐만 아니라 공백기에 놓인 모든 지역 주민에게 소액이라도 꾸준히 ‘지역 연금’이 배당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겠습니다.

셋째, 은퇴자의 숙련도를 지역으로 환원하는 ‘지혜 시간 은행’을 운영하겠습니다.

단순 노동이 아니라 은퇴자의 전직 경험과 기술을 지역 중소기업, 청년 창업가, 사회적 경제

조직과 연결하겠습니다. 이들의 전문성을 지역의 자산으로 활용하고, 국가는 이에 대한 보상을 ‘사회공헌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여 지역 내 공공시설 이용이나 지역 화폐로 전환해 쓸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③ 서울과 지역의 상생

- 자기 책임 도시 원칙과 지역 상생협의체
- 지역 자원의 지역 주민 결정권 보장
- 주민영향평가와 시민의회

자기 책임 도시 원칙과 지역 상생협의체

현황

“서울은 지역에 빚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빚은 갚이지 않습니다”

서울의 전력 자급률은 11%에 불과합니다. 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의 30%, 하루 800~1,000톤이 서울 밖으로 이동합니다.

“부담은 지역으로, 결정권은 수도권으로, 갈등의 원인입니다.”

에너지·폐기물·산업시설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주요 결정이 지역과 수도권의 협의 없이 내려져 왔습니다. 지역의 마당에 떨어지는 짐을 수도권 책상에서 결정해 온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기후 시대, 자기 책임 없는 도시는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로 재생에너지 전환이 가속될수록 송전망·발전소·자원순환 시설의 입지를 둘러싼 갈등은 더 커집니다. 자기가 쓰는 만큼은 자기가 책임지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도시 운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약속

첫째, ‘에너지 자기책임률’ 목표를 조례로 명시하고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지자체 단위로 에너지 자기책임률(자급률) 목표를 조례로 명시하고, 매년 그 달성도를 시민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수도권 도시는 최소 30% 자기책임률을 출발 목표로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고, 이를 위해 1가구 1태양광 보급, 모든 공공건물 태양광 설치 의무화, 유희부지 재생에너지 발전, 에너지저장장치 분산 설치,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지원을 패키지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폐기물 외부이전 상생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수도권에서 외부로 보내는 폐기물 톤 수에 비례해 일정 비율을 자동 적립하는 지역상생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이 기금은 처리 지역의 환경 개선, 주민 건강 검진, 순환경제 인프라 구축에 사용하여 지금까지 지역에 일방적으로 전가해 온 비용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되돌리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수도권-지역 상생협의체’를 상설화하여 함께 결정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에너지·폐기물·산업시설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주요 사안을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논의하는 상설 상생협의체로 다루겠습니다.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숙의와 협의를 통해 갈등을 줄이고, 이익과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겠습니다.

지역 자원의 지역 주민 결정권 보장

현황

“지역의 마당에 들어서지는 시설이지만 지역이 결정하지 못합니다”

발전소, 송전탑, 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지, 대규모 공장 등 지역 주민의 삶을 결정적으로 흔드는 시설들의 입지는 거의 예외 없이 국가와 자본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어 왔습니다. 정작 그 시설과 매일 마주하며 살아가야 할 지역 주민은 통보를 받는 자리에서만 존재해 왔습니다.

“지역 동의는 형식이 되었고, 보상은 갈등 무마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현행 제도에도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있지만, 대부분 결론이 정해진 뒤의 통보에 가깝습니다. 보상금은 일시적 갈등 무마의 수단으로 쓰일 뿐, 결정 자체에 지역의 권한을 부여하는 장치는 거의 없습니다. 그 결과 같은 갈등이 매번 다른 지역에서 같은 형태로 반복됩니다.

“지역의 자원은 지역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는 송전망을 따라 수도권으로, 지역의 토지·물·바람·햇빛은 외부 자본의 사업에 동원됩니다. 지역의 자원이 지역의 자산이 되지 못하는 구조, 이것이 지역 소멸의 가장 깊은 원인 중 하나입니다.

약속

첫째, ‘지역 동의권’을 입지 결정의 필수 절차로 제도화하겠습니다.

발전소, 송전탑, 폐기물 처리시설, 대규모 산업시설 등 지역 환경·건강·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의 입지 결정에 해당 지역의 동의권을 필수 절차로 제도화 하는 조례·법률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지역자원순환 원칙’을 자원 활용의 기본 원리로 삼겠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는 우선 지역에서 사용하고, 지역에서 발생한 자원은 지역에서 순환 되도록 지역자원순환 원칙을 에너지·물·폐기물 정책의 기본 원리로 삼겠습니다. 지역 단위에너지·자원 순환 인프라(소형 분산 발전, 자원순환센터, 지역 그리드)에 우선 투자하여, 외부에 빛지지 않고도 지역이 살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지역자원 이익 공유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외부 자본이 발생시키는 이익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에 환원 하는 지역자원 이익 공유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주민영향평가와 시민의회

현황

“환경영향평가는 있는데, 정작 ‘사람’에 대한 평가는 없습니다”

대규모 재개발, 거대한 공장, 대형 마트가 들어설 때 정부와 기업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합니다. 하지만 이는 자연환경이 얼마나 훼손되는지, 길이 얼마나 막히는지만 따질 뿐입니다. 공사 먼지와 소음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이 어떻게 나빠질지, 오랜 이웃이 흩어지며 겪는 우울감은 어떠한지 등 그곳에 사는 사람이 받을 고통은 아무도 평가하지 않습니다.

“화려한 개발의 이면, 동네 상권은 직격탄을 맞습니다”

거대 자본의 복합쇼핑몰이나 대규모 개발 사업이 허가될 때, 평생 동네를 지켜온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은 하루아침에 생계를 위협받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라는 장밋빛 약속과 달리, 돈은 외부로 빠져나가고 동네 가게는 문을 닫습니다.

“주민공청회는 늘 요식행위이자 통보의 자리였습니다”

현행 제도에도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있지만, 대부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통보하거나 도장만 받아 가는 형식적인 요식행위입니다.

약속

첫째, 모든 대규모 사업에 ‘주민영향평가’를 전면 의무화하겠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이나 대형 시설이 들어올 때, 기존의 환경·교통 평가를 넘어 주민영향평가(사회·건강·경제적 영향 평가)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조례·법률로 정하겠습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영향평가 검증단을 구성하고 지자체가 예산과 행정을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을 재검토 또는 수정 강제할 수 있는 권한(거부권 및 수정 요구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둘째, 무작위 추천 기반 상설 ‘시민의회’를 도입하겠습니다.

성별·연령·직업·거주지 등을 고려해 무작위 추천된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의회를 지자체별로 상설화하겠습니다. 지역의 주요 갈등 현안을 시민의회에서 숙의하고, 그 권고안에 대해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수용 의무를 가지도록 조례로 강제하겠습니다. 생업 부담 없이 시민이 공론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수당과 유급 공가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겠습니다.

01 5대 사회계약

기술-노동 공존 사회계약

기술에 휘둘리지 않는 사회로
우리의 노동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AI-플랫폼 통제와 이익공유

노동시간 단축

디지털전환동행

디지털시민권

① AI·플랫폼 통제와 이익공유

- 빅테크 기업 'AI 전환기금' 조성
- 일터 내 AI 통제, 노동권 보장
- 플랫폼 입점상인 권리보장
- 지역의 나쁜 일자리 퇴출

빅테크 기업 ‘AI 전환기금’ 조성

현황

“AI는 인류 공동의 지혜로 만들어졌지만, 이익은 소수에게만 돌아갑니다”

지금의 AI는 어느 한 기업이 발명한 것이 아닙니다. 인류가 수천 년에 걸쳐 쌓아 온 언어·지식·문화, 그리고 수많은 시민과 노동자가 만들어 낸 글·사진·코드·창작물을 학습하여 만들어진 것이 오늘날의 AI입니다. 그러나 그 막대한 이익은 소수의 글로벌 빅테크와 플랫폼 기업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AI는 이익을 독점하면서, 위험은 시민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전국 취업자의 46.6%, 965만 명이 일자리 대체 ‘상위’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일하는시민 연구소, 2026). 그런데 그 위험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누가 부담하고 있습니까?

“기술 전환의 재원은, 그 전환의 이익에서 나와야 합니다”

일자리보장제 등 일자리 위기에 대응하려면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 재원을 시민의 세금에서만 끌어오는 것은 부당합니다. AI 이익을 독점한 기업이 그 전환의 비용도 함께 부담하게 만들어야, 비로소 정의로운 디지털 전환이 가능합니다.

약속

첫째, 플랫폼·빅테크 기업에 ‘AI 전환기금’을 의무적으로 부과하겠습니다.

지역 시민의 데이터·노동·소비를 기반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플랫폼·빅테크 기업에 지역 기여금을 의무적으로 부과하여 AI 전환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AI 전환기금’을 시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재원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조성된 AI 전환기금은 오직 AI 시대 시민의 일자리·노동권·전환을 지키는 재원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셋째, ‘시민·노동자가 함께 결정하는 운영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AI 전환기금이 행정의 쌈짓돈이나 대기업 보조금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시민·노동자·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사용처를 결정하게 하겠습니다.

일터 내 AI 통제, 노동권 보장

현황

“알고리즘은 나의 상사지만, 나는 그 상사의 얼굴을 모릅니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알고리즘에 의해 일감을 배정받고 평점이 매겨집니다. 그러나 일감이 줄거나 배차가 제한될 경우, 물어볼 곳이 없습니다. 알고리즘은 속도와 효율만을 앞세워 노동자를 위험한 질주와 산재의 위험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채용부터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AI가 평가하고 감시합니다”

일반 일터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AI가 채용·인사 평가에 활용되지만 그 기준은 노동자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앱과 CCTV로 노동자의 위치·행동·업무 정보가 초 단위로 수집되지만, 설명을 듣거나 이의를 제기할 통로는 없습니다.

“퇴근 후에도 끊이지 않는 알림음,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절실합니다”

스마트 기기와 재택·원격근무의 확산은 일과 삶의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퇴근 후·주말에도 메신저·이메일을 통한 업무 지시가 이어지며, 노동자는 24시간 항시 대기 상태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약속

첫째, 공공부문부터 ‘알고리즘·AI 노동영향 점검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공공기관·공공위탁·공공조달 영역에서 AI 도입 시 노동자 안전, 차별 가능성, 감시 확대, 휴식권 침해 여부를 점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지역 산업 현장으로 확산할 가이드라인과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둘째, ‘디지털 노동권 상담·권리구제 지원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알고리즘 배차, 자동화 평가, 디지털 감시, 과도한 연결 요구로 불이익을 겪는 노동자가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 요구·재검토 요구와 노무·산재 상담을 한 창구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지원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플랫폼·알고리즘 노동의 ‘안전 우선 원칙’을 지역 차원에서 확산하겠습니다.

배달·운송 플랫폼 노동 현장의 속도 경쟁을 안전 협약, 표준계약서 보급, 안전교육·보호장비 지원으로 끊겠습니다. 플랫폼 노동자 지원센터·복지공제 연계로 보호망을 촘촘히 만들겠습니다.

다.

넷째, 공공기관부터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운영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퇴근 후·휴일의 불필요한 업무연락을 줄이는 운영 원칙을 공공이 먼저 마련하고, 노사민정 협의·캠페인·교육으로 지역 사업장에 확산하겠습니다.

플랫폼 입점상인 권리보장

현황

“입점하지 않으면 장사가 안 되고, 입점하면 수수료에 허리가 휩니다”

쿠팡·배민 같은 거대 플랫폼 입점 없이 장사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플랫폼의 일방적 수수료 결정과 비용 전가에 입점상인은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이 생살여탈권을 쥐고 흔듭니다”

검색 상단에 뜨려면 비싼 광고를 사거나 무리한 할인 행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검색에서 밀려날 경우, 어떤 기준이 적용됐는지 알 수 없는 채 매출 하락의 직격탄을 맞습니다.

“거대 공룡 앞에서 ‘나 홀로 대응’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일방적 계약 해지, 불공정 환불, 정산 지연으로 명백한 피해를 입어도 생업에 바쁜 동네 사장님이 거대 플랫폼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약속

첫째, ‘플랫폼 분쟁 법률지원센터’를 만들겠습니다.

입점상인 전담 법률상담·분쟁지원 체계를 구축해, 계약 검토부터 내용증명·분쟁조정·관계기관 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입점상인 공동대응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알고리즘 노출, 부당 수수료, 판촉비 전가, 정산 지연 등 다수 상인에게 공통으로 발생한 피해를 모아 피해 사례 접수, 실태 파악, 공동 대응 조직화, 공익적 소송 연계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플랫폼 거래 공정성 가이드라인’과 지원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자체가 거래조건·정산방식·판촉비 부담·노출기준 설명에 관한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기 실태조사와 분쟁조정·신고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의 나쁜 일자리 퇴출

현황

“근로감독 권한이 지자체로 일부 이양됩니다.”

2026년 일부 지자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7년부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노동감독) 권한 일부가 지자체로 내려옵니다. 지자체가 노동 안전과 일터 민주주의를 책임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노동법은 종이 위의 글자일 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플랫폼 노동자에게 노동법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부당 해고를 당해도 어디에 말할지 혹은 보복당하지는 않을지 두려워 속으로만 삼킵니다.

“화려한 브랜드 뒤 잔인한 노동, 시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SNS의 맛집·핫플이 노동자에게는 지옥이 되는 일이 반복됩니다. 포괄임금제로 가려진 공짜노동, 살인적 과로가 난무합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위반 사실을 숨겨주거나 솜방망이에 그쳐, 시민이 나쁜 기업을 가려낼 기회를 차단합니다.

약속

첫째, ‘지역 노동안전감시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역 주민과 산업안전 분야 퇴직 전문가로 구성된 노동안전감시단을 운영해 동네 소규모 공장장과 노후 산단을 순찰하고, 위험 요소 즉각 시정 권고와 안전 위반 사업장 중지 요청권을 행사하게 하겠습니다.

둘째, ‘나쁜 일자리 신고센터’를 상설 운영하겠습니다.

임금 체불·직장 내 괴롭힘·부당 해고를 익명으로 상담받고, 상주 노무사·변호사가 현장 조사 → 법률 대응 → 피해 구제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원스톱 보호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동네 일터 지도’로 시장 질서를 바꾸겠습니다.

임금 체불·산재 은폐·괴롭힘 사업장을 공개하는 블랙리스트 맵을 운영하고, 지자체 조달·자금 지원·세제 혜택 일체를 원천 배제하겠습니다. 노동권 보장 사업장에는 ‘좋은 일터’ 마크를 부여해 공공조달 가산점, 지원사업 참여 우선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넷째, 일터 민주주의 지수를 만들고, 3개년 단위 일터 민주주의 향상 로드맵을 발표하겠습니다. 지자체가 노동 안전, 근로시간, 산재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지수를 개발하고, 매년 조사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나쁜 일터를 몰아내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② 노동시간 단축

- 주4일제 공공부문 선도 도입
- 민간기업 노동시간 단축 유도
- 포괄임금제 폐지

주4일제 공공부문 선도 도입

현황

“AI와 자동화가 일의 속도를 높여도, 노동자는 여전히 오래 일하고 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지만, 연장근로와 장시간 노동 관행은 여전히 강고합니다. 기술은 사람을 덜 일하게 하기보다 더 촘촘하게 일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전환의 성과는 이제 노동자가 더 짧게 일하고 더 많이 쉬는 사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공공부터 바뀌지 않으면 민간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주 4일제 논의는 무성하지만 어떤 모델이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보여 주는 공공의 선례가 부족합니다. 민간 기업은 해보고 싶어도 참고할 사례가 없다고 말하고, 지방정부는 민간이 먼저 해야 한다고 미룹니다. 이 서로 미루기의 고리를 끊는 것은 공공의 책임입니다.

약속

첫째, 지방정부와 산하기관에 ‘주 4일제 선도모델’을 도입하겠습니다.

업무 재설계와 디지털 행정 혁신을 토대로 주 4일제·주 4.5일제·주 35·36시간제 등 다양한 단축 모델을 지방정부와 산하기관에 도입하겠습니다. 민원 부서, 돌봄·보건 현장, 교대 근무 기관 등 부서 특성에 따른 맞춤형 모델을 노사합의로 설계하고, 대체인력 확보와 디지털 행정 도입을 함께 추진해 서비스의 공백 없이 작동하게 하겠습니다.

둘째, ‘실노동시간 공시 대시보드’를 시민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지방정부와 산하기관·출자·출연기관의 부서별·기관별 실노동시간 현황을 정기 점검·공개하겠습니다. 공공이 노동시간을 가장 먼저 가시화하는 일터가 되어, 노동시간 투명성의 첫 기준을 세우겠습니다.

셋째, ‘공공부문 노동시간 단축 매뉴얼’을 시민과 민간에 공개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시범 도입의 성과·시행착오·해결책을 정리한 주 4일제 도입 매뉴얼을 지역사회와 민간 기업에 공개하겠습니다. 공공의 경험이 민간의 자산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 공공의 선도가 자연스럽게 민간 확산으로 이어지게 하겠습니다.

민간기업 노동시간 단축 유도

현황

“AI·자동화의 성과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AI와 자동화 도입으로 생산성이 빠르게 올라가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과는 대부분 기업의 이윤에만 쌓이고, 정작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더 촘촘한 노동만 돌아옵니다. 디지털 전환의 성과를 가장 먼저 노동시간 단축으로 돌리는 모범 사례가 지역에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노동시간을 줄이고 싶어도, 중소기업은 돈이 먼저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에는 인력 재배치, 교대제 개편, 신규채용, 컨설팅 등 초기 비용이 듭니다. 중소기업과 지역 사업장은 공감하면서도 시작할 여력이 없어 매년 미루게 됩니다. 의지를 비용이 따라잡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누군가가 마중물을 부어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약속

첫째, ‘AI·디지털 전환형 노동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AI·자동화로 생산성이 향상된 지역 기업부터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한 선택형 노동시간 단축 모델을 시범 도입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단순 선언이 아니라 근무표 개편·교대제 조정·인력 재배치·디지털 업무 개선까지 함께 설계하는 현장형 전환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성과를 가장 먼저 노동시간 단축으로 돌리는 모범 사례를 지역에서 만들겠습니다.

둘째, ‘노동시간 단축 전환지원금’으로 초기 비용 부담을 덜겠습니다.

실노동시간 단축에 나서는 지역 기업에 임금 보전·신규채용·근무체계 개편 비용·노무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 장려금과 연계해, 지역 기업이 국가 지원과 지방정부 지원을 함께 활용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컨설팅 창구도 운영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인력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을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노동시간 단축 선도기업 인증제’로 시장 보상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실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주 4일제·교대제 개선 같은 변화를 만든 기업에 노동시간 단축 선도기업 인증을 부여하겠습니다. 인증 기업은 공공조달·지방정부 지원사업·각종 지역 사업 연계에서 우대 받도록 하고, 인증 기업 정보를 시민과 구직자에게 공개해 구직자가 입사 전에 노동시간 문화를 확인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포괄임금제 폐지

현황

“일한 시간은 늘어나는데, 수당은 한 덩어리로 지워지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와 고정 연장근로수당 방식은 공짜노동을 가리는 수단으로 오남용되어 왔습니다.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수당이 뒤섞여 지급되면 노동자는 내가 몇 시간 더 일했고 얼마를 제대로 받았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습니다. 원격업무·디지털 도구의 확산으로 노동시간 기록의 중요성은 더 커졌습니다.

“포괄임금 오남용은 장시간 노동을 더 숨기고 더 굳힙니다”

포괄임금제는 노동시간을 가시화되지 않게 만드는 장치로 오남용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성과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지려면, 먼저 일한 시간과 받은 임금을 정확히 드러내는 질서부터 세워야 합니다.

약속

첫째, 지방정부와 산하기관부터 ‘포괄임금제 폐지’를 먼저 시행하겠습니다.

공공·출자·출연기관부터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수당을 명확히 구분하고 실제 노동시간에 따른 수당을 따로 계산·지급하는 원칙을 확립하겠습니다.

둘째,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임금체계 진단, 취업규칙·근로계약서 정비, 노동시간 기록 시스템 구축, 노무 컨설팅을 지원해 중소기업이 ‘제도가 복잡해서 못 바꾼다는 이유’로 관행을 끌고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노동시간·임금명세 투명성 인증’을 도입하겠습니다.

실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임금명세서에 수당을 구분해 투명하게 지급하는 기업에 ‘노동시간·임금 투명기업 인증’을 부여하고, 공공조달·지역 연계사업 등에서 우대하겠습니다.

③ 디지털 전환 동행

- 주민 주도 산업·일자리 전환 계획 수립
- 디지털 전환 평생교육 지원
- 읍면동 '디지털 동행지원단' 운영

주민 주도 산업·일자리 전환 계획 수립

현황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이 우리 동네 밥줄을 흔들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으로 석탄화력발전소가 문을 닫고, 내연기관 부품 공장이 전기차 시대에 구조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거대한 전환의 파도 속에서 평생 기계를 돌리던 노동자와 그 공장 인근 식당·상권이 하루아침에 생존 위기로 내몰립니다.

“전환의 결정은 멀리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의 몫입니다”

지금의 산업 전환은 중앙정부와 대기업의 결정에 따라 하향식으로 진행됩니다. 정작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와 주민은 계획 수립에서 배제된 채 어느 날 갑자기 해고 통지서나 폐업 소식만 받아들입니다.

“일자리가 사라진 지역은 급격한 소멸의 길을 걷습니다”

공장이 떠나고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면 청년이 고향을 등지고, 지역경제는 빠르게 무너집니다. 산업 전환이 지역 소멸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약속

첫째, ‘지역 산업·일자리 전환 협의체’를 운영하겠습니다.

노동자·주민·지역 상인·전문가·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해 지역의 일자리 유지, 산업 재편, 상권 보호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지역 전환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둘째, 주민 참여형 ‘지역 맞춤형 전환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전환이 예상되는 업종·지역을 미리 조사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재생에너지 유지보수·순환경제·친환경 설비 전환 같은 일자리를 지역 일자리보장제로 운영하고 중앙정부 훈련·산업전환 지원사업과 연계하겠습니다.

셋째, ‘재교육·전직 준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새 기술을 배우고 다른 산업으로 이동해야 하는 노동자가 전환의 고통을 혼자 떠안지 않도록 재교육, 직무 전환 상담, 취업 연계, 훈련 참여 수당과 생활안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평생교육 지원

현황

“내 일자리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지 않을까, 매일이 불안합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무섭습니다. 과거에는 기계가 단순 노동을 대신했다면, 이제는 생성형 AI가 사무, 기획, 창작, 코딩까지 넓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이 ‘앞으로도 지금의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 속에 놓여 있습니다.

“디지털 격차가 곧 삶의 격차가 되는 사회”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역량의 차이는 일상생활의 불편을 넘어, 구직과 재취업, 소득과 노동조건 격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배우고 싶어도 시간도, 비용도 부담입니다”

변화에 적응하려면 계속 배워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시간 노동과 불안정한 일자리, 생계 부담 속에서 교육비와 시간을 따로 마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약속

첫째,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미래역량 평생교육 지원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AI 활용, 디지털 기초, 데이터 활용, 직무 전환 준비 등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경력전환을 준비하는 시민 등이 생활권 안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과 맞춤형 과정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일하면서도 배울 수 있도록 야간·주말·단기과정을 늘리고 학습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퇴근 후, 주말, 단기 집중형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식도 넓히겠습니다. 상담·정보 제공·학습설계 지원을 강화해 실제 직업 전환 준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셋째, 지역의 대학·공공기관·평생학습시설과 연계한 ‘생활권 평생학습 거점’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 안의 교육자원과 공공시설을 연계해 시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새로운 기술과 직무 역량을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거점을 확대하겠습니다.

읍면동 ‘디지털 동행지원단’ 운영

현황

“기기가 있어도 쓸 줄 모르면 삶에서 밀려납니다”

보편적 보급 단계를 넘어선 디지털 사회에서, 이제 격차는 ‘활용’에서 발생합니다. 어르신들이 앱 하나 깔지 못해 재난지원 정보를 놓치고, 기차표 예매를 못 해 고향에 못 가는 현실은 정보의 격차가 곧 삶의 질 격차임을 보여줍니다.

“일회성 교육으로는 쏟아지는 신기술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복지관에서 몇 시간 배우는 스마트폰 교실은 돌아서면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실생활에서 키오스크를 마주했을 때, 병원 앱으로 예약해야 할 때 바로 곁에서 가르쳐주고 도와줄 생활권 단위의 지원 체계가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역 안에서 배우고 돕는 공공 지원망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기기에 능숙한 지역 주민과 디지털이 낯선 어르신, 장애인, 취약계층을 이어주는 생활 밀착형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반복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약속

첫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생활권 거점을 중심으로 ‘디지털 동행지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게 거점형으로 우선 운영하고, 수요가 높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주민센터 상담, 경로당·시장 등 생활 현장 방문, 1:1 기기 사용 지원을 통해 스마트폰 설정부터 예매, 예약, 공공서비스 이용까지 실생활 중심의 도움을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방문이 어려운 지역에는 ‘찾아가는 디지털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농어촌, 고령층 밀집지역, 이동 취약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교육·기기 점검 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주민센터와 공공공간에 ‘디지털 안심 연습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누구나 편하게 들러 기기 사용법을 묻고 연습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와 공공공간을 활용한 ‘디지털 안심 연습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연습용 키오스크와 공용 태블릿 등을 비치하고, 정기 상담과 기초 교육을 운영하여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배울 수 있는 권리”를 넓히겠습니다.

④ 디지털 시민권

- 시민의 디지털 정보 인권 강화
- 블랙박스 알고리즘 알 권리 보장
- 아날로그 선택권 보장

시민의 디지털 정보 인권 강화

현황

“원치 않는 흔적이 평생을 따라다니는 주홍글씨가 됩니다”

검색 기록, 클릭한 상품, 방문한 장소가 모두 거대 플랫폼의 수익용 데이터로 둔갑합니다. 맞춤형 광고가 끊임없이 따라다니지만 시민이 손쉽게 차단하기는 어렵고, 지우고 싶은 과거 흔적이 인터넷을 떠돕니다.

“학교와 일터에서 인간의 ‘감정’마저 AI 평가 대상이 됩니다”

카메라·센서로 노동자와 학생의 표정·행동·감정 상태를 분석해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의 편의성 뒤에 무너져 가는 시민 프라이버시를 지킬 새로운 보호장치가 절실합니다.

약속

첫째, 공공 디지털 서비스부터 시민이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정보인권 보호장치를 확대하겠습니다.

지방정부 앱·웹·행정 시스템에서 맞춤형 정보 제공과 개인정보 활용 내역을 시민이 쉽게 확인하고, 거부·삭제·정정 절차를 안내받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공공장소의 실시간 안면·생체 인식 기술 도입을 매우 엄격히 제한하겠습니다.

시민의 명시적 동의 없는 실시간 안면·생체 인식 도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전 인권 검토와 개인정보 영향 검토를 거쳐 설치 목적·운영 범위·보관 기간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셋째, 직장과 교육 현장의 ‘AI 감정·행동 감시’에 대한 지역 차원 보호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노동자·학생의 표정·행동·감정 상태를 기계적으로 분석·평가하는 시스템 도입을 공공부터 엄격히 제한하고, 민간 사업장과 교육기관에도 협약·권고·지원사업 기준으로 비인간적 감시기술 확산을 억제하겠습니다.

블랙박스 알고리즘 알 권리 보장

현황

“행정과 공공 서비스마저 설명할 수 없는 ‘블랙박스’가 되어갑니다”

수급 대상자 선정·민원 처리에 AI가 도입되며 효율성은 높아졌지만, 알고리즘의 불투명성과 편향성이라는 새로운 위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AI의 결정으로 복지 혜택에서 탈락해도 왜 그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평범한 언어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 공공 행정의 책임성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나의 데이터가 창출하는 가치로부터 철저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시민은 매일 막대한 데이터를 생산하지만, 그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가공되어 알고리즘 판단의 근거로 쓰이는지 알지 못합니다. 내 데이터의 가치와 결합 구조를 스스로 통제할 권리가 박탈된 채, 거대 기술 기업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만 일방적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약속

첫째, 공공·행정 AI 시스템에 대한 ‘평이한 알고리즘 설명자료’를 우선 도입하겠습니다.

복지·민원 등 시민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 AI 시스템에 시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쓰인 알고리즘 설명자료를 마련하고,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사람의 재검토와 이의신청 절차를 정비하겠습니다.

둘째, ‘디지털 정보인권 위원회’와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자체 차원의 디지털 정보인권 위원회와 상담·지원 창구를 운영하여 진정 접수, 관계기관 연계, 제도 개선 권고를 맡는 지역 거점이 되게 하겠습니다.

셋째, 시민의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데이터 주권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단순한 기기 활용을 넘어 데이터의 가치와 정보인권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데이터 주권 교육을 공공 평생교육 과정에 확대하겠습니다.

아날로그 선택권 보장

현황

“키오스크 앞에서 멈춰선 시민의 일상”

식당부터 공공시설까지 무인 단말기 없는 곳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화면과 낯선 절차로 주문·접수조차 못 하고 돌아서는 시민이 적지 않습니다.

“앱이 없으면 병원 예약도, 호출도, 신청도 어려운 사회”

금융·의료·교통·행정이 빠르게 디지털로 옮겨가고 있지만,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시민은 기본 서비스 이용에도 큰 불편을 겪습니다.

“디지털 격차는 곧 기회의 격차입니다”

공공서비스마저 디지털 우선 정책으로 운영되면, 아날로그 방식이 필요한 시민은 정보·서비스 바깥으로 밀려납니다. 디지털 전환은 누군가를 배제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약속

첫째, 공공서비스에서 아날로그 대체수단을 함께 보장하겠습니다.

전화 안내·대면 접수·종이 고지서 선택·현장 안내 등 아날로그 대체수단을 함께 운영하도록 공공기관·공공위탁시설의 운영기준을 정비하겠습니다.

둘째, 공공부문부터 무인 단말기 이용 불편을 줄이고, 민간 접근성 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공공 무인 단말기에 고령자·장애인이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내 체계를 우선 도입하고, 민간 매장·생활서비스에는 접근성 개선 가이드라인과 시설·보조기기·안내 인력 지원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찾아가는 디지털 도움창구’와 ‘마을 아날로그 지원 거점’을 운영하겠습니다.

실생활 예약·결제·본인인증·고지서 확인을 함께 해결해 주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을 위해 종이 고지서·전화 안내·대면 상담을 유지·연계하겠습니다.

01 5대 사회계약

지구-인간 공존 사회계약

기후위기 해법을 실현하는 지역으로
기후재난과 불평등이 없도록

지산지소 에너지 자립

탈탄소 건물과 교통

자원순환

기후 중심 지방재정

① 지산지소 에너지 자립

- 지역 에너지공사 및 에너지거래소 설치
- 에너지 협동조합 등 설립 지원
- 공공 유휴부지 활용 햇빛 발전소
- 데이터센터 분산 및 RE100 의무
- 노후 산단을 RE100 산단으로 전환

지역 에너지공사 및 에너지거래소 설치

현황

“우리가 쓰는 전기가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대도시에서 쓰는 전기를 만들기 위해 멀리 바닷가에 거대한 핵발전소·석탄화력발전소가 지어지고, 산과 들에는 송전탑이 박힙니다. 전기를 쓰는 사람과 고통받는 사람이 분리된 불평등한 구조입니다.

“원전과 송전탑 중심의 중앙집중형 에너지 체계는 시한폭탄입니다”

전력을 중앙에서만 통제하는 방식으로는 집집의 태양광이나 마을의 소규모 재생에너지를 살리기 어렵고, 거대 송전망에 문제가 생기면 넓은 지역이 함께 흔들립니다. 분산형 에너지 체계가 필요합니다.

“에너지로 번 돈은 밖으로 빠져나가고, 지역에는 부담만 남습니다”

태양광·풍력 시설이 들어서도 이익은 외지 자본과 대기업으로 빠져나가고, 시설을 곁에 두고 사는 주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약속

첫째, 에너지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 에너지 공사를 만들겠습니다.

지역 에너지공사를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 에너지 계획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성과는 에너지복지와 주민 환원으로 이어지게 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업, 에너지 효율 사업, 공공건물 태양광과 저장장치, 전기차 폐배터리 전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지역 전력자립도와 재생에너지 비율에 대한 목표와 로드맵을 설정하고 지킬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둘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지역 전력거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준비하고, 지역 내 직접거래·지산지소 실증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마을과 산단·공공시설을 잇는 소규모 전력망과 에너지저장장치를 확충해, 지역에서 만든 전기가 지역에서 더 많이 쓰이게 하겠습니다.

셋째, ‘주민 환원’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에너지 자립 사업 수익의 일부를 에너지 복지·취약계층 지원·마을기금·공공시설 개선에 환원하여 에너지 복지를 넓히겠습니다.

에너지 협동조합 등 설립 지원

현황

“우리 지역에 세워진 외지 발전기는 소음과 풍경 훼손만 가져올 뿐입니다”

외지 자본과 대기업이 들어와 발전소를 짓고 수익을 가져가는 동안, 주민은 갈등과 소외를 반복적으로 겪습니다.

“직접 해보고 싶어도 돈과 행정의 벽이 너무 높습니다”

우리도 햇빛 발전소를 차려보자고 마음을 모아도 복잡한 인허가, 초기 비용, 정보 부족이 큰 장벽이 됩니다.

“에너지는 ‘상품’이 아니라 우리 마을의 ‘미래’여야 합니다”

주민이 직접 주인이 되면 에너지 생산은 지역의 일자리, 수익은 동네 복지, 기후 대응은 모두의 자부심이 됩니다.

약속

첫째, ‘에너지 협동조합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의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이 함께 출자 및 운영하는 에너지 협동조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법인 설립부터 발전 사업 허가, 부지 확보까지 행정 전 과정을 대행하는 에너지 코디네이터를 파견하겠습니다.

둘째, 지역 에너지기금·이자지원·공공부지를 지원하겠습니다.

지방비 보조와 이자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연계를 확대하고, 주민 출자형 사업·협동조합이 국가 사업에 더 쉽게 접근하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 옥상·공공 주차장·유희부지의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협동조합·지역 에너지 기업을 우선 검토하겠습니다.

공공 유희부지 활용 햇빛 발전소

현황

“주차장·옥상·도로변... 빈 땅이 너무 많습니다”

지방정부 관리 주차장, 상하수도처리장, 공공기관 옥상 등 태양광 가능 부지가 곳곳에 있지만, 절차의 번거로움 탓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합니다.

“산 깎고 논 메우는 태양광은 멈춰야 합니다”

산림 훼손과 농지 잠식의 갈등을 피하려면, 도심 속 공공 부지부터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약속

첫째, 공공 유희부지를 전수 조사하고 태양광을 우선 확대하겠습니다.

지자체와 산하기관의 건축물·부지를 전수 조사해 설치 가능한 곳부터 단계적으로 발전시설을 확대하고, 신축·대수선 공공시설은 설계 단계부터 태양광·에너지설비를 우선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을 도입하겠습니다.

협동조합·펀드·채권·지분참여 방식으로 주민이 참여하고, 발전 수익의 일부를 마을기금·지역 화폐·에너지 복지·공공서비스로 환원하겠습니다.

셋째, ‘마을 햇빛 발전소’를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주민이 협동조합·지역 법인을 통해 직접 운영하는 모델을 육성하고, 저금리 융자·공모 가점·사용료 감면으로 주민 주도형 에너지 공동체가 공공 유희부지를 활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데이터센터 분산 및 RE100 의무

현황

“데이터센터가 전력 수요의 새로운 압박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AI 발전과 함께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은 수도권 집중이 심해 전력 수급 불균형·계통 부담·지역 불균형을 함께 키우고 있습니다.

“녹색 산업으로의 전환을 이끌 금융과 행정의 지역 기반이 약합니다”

탄소중립은 산업·에너지를 함께 바꾸는 일이지만, 지역 차원의 투자 수단과 전담 행정체계가 부족합니다.

약속

첫째, 신규 데이터센터에 ‘재생에너지 조달·전력영향 검토’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조달, 전력계통 영향, 에너지효율·열관리, 상수도 공급 능력, 주변 주거지 영향 평가 등을 따지고, 공공부지 제공·인허가 협의·지원사업에서 우선 반영하겠습니다.

둘째, 데이터센터의 지역 분산과 분산에너지 연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비수도권 입지를 유도하고, 재생에너지·산업단지·분산에너지 특화지역과 연계해 데이터센터가 지역의 부담이 아니라 기회가 되게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 녹색전환 투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기후대응기금·공공금융·지방공사를 활용해 재생에너지·전력효율·저장장치·녹색산업 전환에 공공투자와 용자·보증을 강화하겠습니다.

노후 산단을 RE100 산단으로 전환

현황

“산단이 ‘고탄소’의 덫에 걸렸습니다”

노후 산단은 낡은 설비와 화석연료 중심 가동으로 온실가스·오염 부담이 큼니다. 저탄소 전환이 늦어질수록 지역 경제 경쟁력도 흔들립니다.

“RE100을 못 하면 물건을 팔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글로벌 기업의 재생에너지 요구가 커지면서 입주 중소기업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별 기업이 혼자 설비·전력 조달을 바꾸기엔 비용·정보의 벽이 너무 높습니다.

약속

첫째, 산단의 지붕·주차장·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공공참여형·협동형 태양광 사업을 확대하고, 인허가 지원·사업모델 설계·공공금융·민간투자 연계로 산단형 재생에너지 기반을 넓히겠습니다.

둘째, 친재생에너지 전환 지원 체계를 확충하겠습니다.

공장 에너지관리시스템·산단 통합관리 기반을 지원하고, 노후 공정 설비를 고효율 기기로 바꾸는 컨설팅·용자·보조사업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노동자가 주인공이 되는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직무 전환 교육·현장 맞춤형 훈련을 확대하고, 산단 내 휴게·돌봄·문화·편의시설을 함께 확충해 공장만 있는 공간이 아니라 일하고 머물 수 있는 산업 공간으로 바꾸겠습니다.

② 탈탄소 건물과 교통

- 제로에너지빌딩 확대
- 주택 에너지 복지로 따뜻하고 시원한 집
- 무상 대중교통과 15분 도시

제로에너지빌딩 확대

현황

“집이 낡을수록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냅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의 약 25%가 건물에서 나옵니다. 30년 넘은 노후 건축물은 단열이 형편없어 밀 빠진 독 처럼 에너지가 새고, 폭염·한파 때마다 냉난방비 폭탄으로 돌아옵니다.

“제로에너지 건축, 아직은 갈 길이 멍니다”

2025년부터 민간 공동주택(30세대 이상)까지 의무화가 확대됐지만, 건축비 우려와 지원 부족으로 민간 영역의 참여는 더딥니다.

“그린리모델링 지원 예산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만족도는 높지만 매년 예산이 들쭉날쭉해, 정작 혜택이 필요한 저소득층·노후 주택 거주자가 기회를 놓치는 일이 반복됩니다.

약속

첫째, 공공건축물부터 더 높은 수준의 제로에너지 건축을 선도하겠습니다.

공공청사·공공임대주택·공공시설부터 더 높은 제로에너지 설계와 효율 기준을 적용하고, 민간 신축에는 인센티브·행정 우대·컨설팅으로 확산을 돕겠습니다.

둘째, 신축 건물은 제로에너지 건물로 짓는 것을 의무화하겠습니다.

고성능 단열, 고기밀성 창호, 자연 채광과 환기, 재생에너지 자체 생산, 히트펌프를 통한 냉난방 고효율화 등을 갖춘 제로에너지 건축만 승인하겠습니다.

셋째, 노후 주택과 공공임대주택에 ‘그린리모델링 우선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부터 단열 보강·고효율 창호·고효율 설비를 추진하고, 저소득층·고령자·에너지 빈곤층의 노후주택을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주택 에너지 복지로 따뜻하고 시원한 집

현황

“집이 가장 위험한 재난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서울 관악구 반지하 일가족 사망에서 보듯, 열악한 주거환경은 시민의 생명을 직접 위협합니다. 폭염 시 70세 이상 고령자의 온열질환 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도 집 안입니다.

“낮은 난방 시스템과 댄질식 복지가 위기를 키웁니다”

가정 에너지 소비의 60% 이상이 냉난방·급탕에 집중되어 도시가스 등 화석연료에 절대 의존합니다. 기존 에너지 바우처는 복잡한 신청주의·선별 지원·화석연료 중심의 구조적 모순으로 근본적 주거 성능 개선까지 가지 못합니다.

약속

첫째, 주택 에너지 복지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폭염·한파·폭우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보편적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신청제 바우처를 자동 지급제로 개편하며, 기후 재난 시 지급액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재생에너지 난방 의무화와 히트펌프 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간 건축물 대상 그린 리모델링을 가속화하고, 단계적으로 화석연료 보일러를 퇴출하고 히트펌프 등 재생에너지 난방을 의무화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기후 취약주거 제로’를 위해 56만 호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전면 개조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15년 이상 된 노후 공공임대주택 약 56만 호의 재생에너지 기반 리모델링을 의무화해, 주택에너지복지 탈탄소 로드맵을 실현하겠습니다.

무상 대중교통과 15분 도시

현황

“도로 위 탄소, 기후위기의 직격탄”

국내 온실가스의 약 15%가 교통에서, 그 절대다수가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나옵니다. 전 세계가 내연기관 퇴출을 서두르지만, 우리 도로는 여전히 나홀로 승용차로 가득합니다.

“자전거와 보행자는 도로 위의 2등 시민”

가장 완벽한 친환경 교통수단인 걷기·자전거가, 자동차 중심 도시 설계 탓에 위험한 도전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

첫째, ‘완전 무상 대중교통’ 시대로 가겠습니다.

아동·청소년·노인부터 시작하여 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요금 완전 무상화를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생계형 내연기관차의 ‘정의로운 전기·수소차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2035년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를 목표로, 배달 오토바이·택배 화물차·영세 소상공인 트럭의 친환경차 전환 비용과 충전 인프라를 국가가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자전거 고속도로’와 ‘보행자 천국’을 만들겠습니다.

15분 마을을 구현하고, 도심 차량 속도를 낮추는 도로 다이어트를 단행해 자전거 전용 고속도로와 넓은 보행로를 조성하겠습니다.

③ 자원순환

- 수리권 등 재사용·리필 기반 확충
- 순환형 건축으로 폐자재 최소화

수리권 등 재사용·리필 기반 확충

현황

“멀쩡한 기기도 부품이 없어 버려야 하는 ‘계획적 구식화’”

액정 수리비가 새 제품의 절반을 넘거나, 출시 몇 년 만에 부품이 단종되어 버려야 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고쳐 쓰고 싶어도 정보·창구가 부족해 새 제품을 사게 되는 악순환입니다.

“리필하고 싶어도 ‘리필 스테이션’은 멀고도 멍니다”

재활용 분리배출은 열심히 하지만, 재사용·리필 인프라가 부족해 제로 웨이스트의 삶은 일부의 고군분투에 의존합니다.

“전자폐기물과 일회용 포장재가 매년 쌓이고 있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전자폐기물과 일회용 포장재는 기후위기와 자원낭비를 키웁니다. 물건을 오래 쓰고 다시 쓰는 문화는 개인의 도덕심에만 맡길 일이 아닙니다.

약속

첫째, 소비자의 ‘수리권(Right to Repair)’을 높이는 지역 지원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지역 수리정보 안내·수리상담·생활수리 교육·지역 수리업체 연계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지방 정부와 산하기관의 공공구매에서는 수리와 유지관리가 쉬운 제품을 우대 하고, 수리 가능한 제품을 오래 쓰는 문화를 공공부터 선도하겠습니다.

둘째, 동네마다 ‘순환 경제 거점(리필·수리 스테이션)’을 확충하겠습니다.

주민센터·공공시설·생활권 거점을 활용해 마을 리필 스테이션과 마을 수리 거점을 단계적으로 늘리겠습니다. 지역 수리기술자·사회적경제조직·마을 공동체가 함께 만들겠습니다.

셋째, 다회용기·리필 시스템 사업자와 시민에게 지역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입니다.

포장재 없는 매장·다회용기 배달·리필 시스템을 도입하는 지역 소상공인·기업을 지원하고 시민이 리필 스테이션·다회용기 회수 체계를 이용할 때에는 지역화폐 포인트나 공공프로그램 연계 혜택 같은 지역형 인센티브를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일회용품 단계적 전면 금지’ 로드맵을 만들겠습니다.

공공기관·공공시설·공공행사부터 시작하여 민간 카페·식당·배달 영역까지 다회용기 전환 지원사업과 함께 일회용품을 전면 금지하겠습니다.

순환형 건축으로 폐자재 최소화

현황

“멸정한 건물도 ‘재건축’이라는 이름으로 사라집니다”

서울의 한 해 건설폐기물은 약 7,600만 톤에 달합니다. 우리 동네의 30년 된 아파트는 재건축의 이름으로, 멸정한 상가는 리모델링의 이름으로 통째로 부서지고 새로 지어집니다.

“리모델링·철거 현장에서 멸정한 자재가 함께 버려집니다”

인테리어와 리모델링·철거 과정에서는 아직 쓸 수 있는 문·창호·조명·목재·금속·위생기구가 대량으로 폐기됩니다. 분리도, 보관도, 다시 거래할 시장도 없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새로 지을 때 발생하는 탄소가 가장 많습니다”

건물의 평생 배출 탄소 중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건설 단계의 탄소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는 어떻게 운영하느냐 만큼 얼마나 짓느냐, 어떻게 짓느냐가 중요합니다.

약속

첫째, ‘순환형 리노베이션’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존 건물을 무조건 철거하고 새로 짓는 방식에서 벗어나, 오래된 건물을 고쳐 쓰면서 에너지 성능까지 높이는 순환형 리노베이션을 지원하겠습니다. 컨설팅·지원사업 연계를 통해 단열·창호·설비 개선과 공간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돕겠습니다.

둘째, ‘재건축·리노베이션 시 에너지 1등급 기준’ 의무화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재건축·대규모 리노베이션을 진행할 때 에너지 1등급 기준 충족과 히트펌프 등 고효율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30년 뒤 또다시 부수는 일이 없도록 오래 쓰는 건물의 출발선을 높이겠습니다.

셋째, ‘건축자원 순환체계’를 만들겠습니다.

건물 해체 시 재사용 가능한 자재의 분리 의무화와 폐기물 종류별 분리 기준을 강화하는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리모델링·철거 현장에서 나오는 문·창호·목재·금속·위생기구 등 재사용 가능한 자재의 분리배출·선별·재사용 연계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공공공사와 공공시설 정비에서는 순환골재·재활용 자재 활용을 확대하고, 지역 안에서 건축자재를 다시 거래·재사용할 수 있는 건축자재 재사용 시장(자원순환 거래소)을 구축하겠습니다.

④ 기후 중심 지방재정

- 생태한계인지 예산제 실시
- 기후 일자리 및 생태 보상

생태한계인지 예산제 실시

현황

“기후 예산 따로, 파괴 예산 따로인 ‘따로국밥’ 재정”

탄소중립을 외치면서도 도로 확충·대규모 개발·탄소다배출 산업 지원에 큰 예산이 들어갑니다. 한쪽에서 불을 끄는 동안 다른 쪽에서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세금이 기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주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제처럼, 예산이 온실가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따져야 합니다. 법률상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가 있지만, 지자체에는 의무화되지 않았습니다.

약속

첫째, 주요 예산과 기금에 ‘생태한계인지 예산제’를 실질적으로 적용하겠습니다.

환경 분야뿐 아니라 교통·건설·산업·복지 예산이 온실가스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분석하고, 대규모 투자·공공개발·시설사업부터 우선 적용하겠습니다.

둘째, ‘기후 영향 분석서’와 ‘기후 결산’을 정례화해 공개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시 탄소를 얼마나 줄이거나 늘리는지 분석 자료를 만들고, 사업 종료 후 실제 감축 효과를 점검하는 기후 결산을 지방의회와 주민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셋째, 탄소중립 목표를 예산 편성·투자심사 기준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비용·편익만이 아니라 기후영향·감축 효과를 함께 따지고, 고탄소 사업에는 감축계획·대안 검토를 의무화해 공공부문부터 기후 우선 원칙이 작동하게 하겠습니다.

기후 일자리 및 생태 보상

현황

“지방은 인구 소멸과 탄소 흡수원 파괴의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산림·갯벌·습지 등 탄소 흡수원 보전이 필수지만, 흡수량은 감소하고 있고 흡수원이 많은 지역은 개발 이익을 포기하면서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기후 적응과 지역사회를 돌볼 공공 인력이 부족이 부족합니다”

비수도권은 전통적 제조업에 편중돼 청년 유출·지역 소멸이 이어집니다. 동시에 폭염·폭우 취약계층 돌봄, 재생에너지 시설 확충, 노후 주택 수리 분야에는 사람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약속

첫째, 생태 보전 활동에 대한 지역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산림·습지·하천·갯벌의 탄소흡수원·생태 공간을 지키는 지역에 대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를 도입하여 국비 사업 유치와 지방비 매칭을 통해 지원하겠습니다. 보전 부담이 큰 지역에는 지역 환경개선·에너지 전환·주민 편익으로 연결되는 환원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지역에서 기후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지역 일자리보장제를 통해 재생에너지 설치·운영, 노후 주택 그린리모델링 시공·관리, 기후 취약성 조사, 폭염·한파 재난 대응을 전담하는 기후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기후일자리 지원체계와 지역 거점을 만들겠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 연계 또는 별도 거점을 운영해 교육훈련·일자리 매칭·사업 발굴·현장 지원을 맡기겠습니다. 기후대응기금·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적극 확보하겠습니다.

01 5대 사회계약

공존 경제 사회계약

각자도생이 아닌 공존하는 지역,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① 공정거래

- ‘납품단가 연동제’ 지역 정착 및 하도급 갑질 근절
- 소상공인 ‘협업화·디지털화’ 공동사업 지원
- 골목상권 진입 규제 강화
- 상가 임대료 보호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납품단가 연동제’ 지역 정착 및 하도급 갑질 근절

현황

“원자재값 폭등의 청구서는 왜 늘 하청업체로만 돌아옵니까?”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철강, 플라스틱 등 원자재 가격이 치솟고 있지만, 납품단가는 계약 당시의 가격에 묶여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납품단가 연동제’가 법제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눈치를 보느라 예외 조항을 적용받거나 제대로 요구조차 하지 못하는 ‘을’들의 고통은 여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멀고, 중소기업의 도산은 당장 내일입니다”

불공정 거래를 중앙의 공정위에 신고해도 조사와 판결까지 수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 영세한 중소기업은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습니다.

약속

첫째, 지자체 주도의 ‘납품단가 연동제 지역 안착 지원 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단순한 법적 권고를 넘어, 지자체가 지역 내 원하청 계약의 연동제 포함 여부를 직접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연동제를 성실히 이행하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게는 지방세 감면과 지역 공공조달 가점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둘째, 하도급 갑질 기업에 대해 ‘공공조달 영구 퇴출’을 추진하겠습니다.

갑질로 적발된 기업은 지자체와 지역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관급 공사와 조달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켜 “갑질은 곧 기업의 퇴출”이라는 공식을 세우겠습니다.

셋째, 지자체 직속 ‘하도급 분쟁 지역 조정 센터’를 설립하여 골든타임을 지키겠습니다.

광역 지자체 산하에 ‘하도급 분쟁 지역 조정 센터’를 설립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겠습니다. 동네 중소기업들이 서울에 가지 않고도 신속하게 법률 지원과 행정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기간 동안 하청업체가 도산하지 않도록 ‘긴급 경영 안정 자금’도 선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협업화·디지털화’ 공동사업 지원

현황

“덩치 큰 공룡들 사이에서 동네 가게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2026년 현재, 유통 시장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과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개별 소상공인은 원부자재 구매력에서 밀리고, 마케팅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결국 고율의 수수료를 내며 대형 플랫폼에 종속되는 ‘을’의 처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알고는 있지만 혼자서는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스마트 오더, AI 재고 관리, 온라인 배송 시스템 등 디지털 기술은 선택이 아닌 생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고가의 장비 도입과 복잡한 시스템 운영은 넘기 힘든 벽입니다.

“협동조합은 늘었지만, 비즈니스 모델은 여전히 취약합니다”

소상공인들이 뭉쳐서 협동조합을 만들어도 초기 자본 부족과 전문 경영 인력의 부재로 인해 단순 친목 도모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속

첫째, 공동 구매·물류를 위한 ‘소상공인 협업단지’와 ‘동네 물류 거점’을 구축하겠습니다.

동종 업계 소상공인들이 뭉쳐 원부자재를 대량으로 공동 구매할 때, 지자체가 ‘공동 구매 보증’을 서고 물류 창고를 저렴하게 임대하겠습니다. “동네 치킨집 100곳이 모여 생닭을 공동 구매”함으로써 프랜차이즈보다 낮은 단가를 확보하는 ‘골목형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둘째, 업종별 ‘공동 디지털 플랫폼’과 ‘스마트 통합 솔루션’ 보급을 지원하겠습니다.

개별 가게가 감당하기 힘든 배달 앱 수수료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공공-협력형 배달·주문 플랫폼’을 고도화하겠습니다. 또한, 특정 상권 내 재고 현황을 공유하여 폐기율을 줄이는 ‘상권 통합 AI 재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공동으로 누리게 하겠습니다.

셋째, 협업화 사업을 전담하는 ‘소상공인 코디네이터’를 파견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지역일자리보장제’ 인력을 활용하여 경영 컨설팅, 디지털 기기 운용, 협동조합

설립을 돕는 ‘소상공인 전문 비서단’을 상권별로 배치하겠습니다. 서류 작업과 디지털 마케팅에 능숙한 인재들이 상인들과 협력하여 동네 가게를 ‘혁신 기업’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골목상권 진입 규제 강화

현황

“매출이 빠져나가는 자리에 골목상권이 무너집니다”

대형 복합쇼핑몰·창고형 매장·대형마트가 인접 지역에 들어서면, 반경 3km 안의 골목상권 매출은 평균 25% 이상 줄어듭니다.

“의무휴업은 10년째 월 2회에 멈춰 있습니다”

2012년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는 월 2회에 머물러 있고, 그 사이 새로운 형태의 거대 유통자본이 의무휴업 사각지대에서 골목을 잠식해 왔습니다.

“배달앱 수수료가 매출을 갉아먹습니다”

배달앱·예약앱 수수료는 15~20%에 달해, 광고비·할인쿠폰까지 더하면 매출의 30% 이상이 플랫폼으로 흘러갑니다. 자영업자가 거대 플랫폼과 개별 협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약속

첫째, 의무휴업을 ‘월 4회’로 확대하고 적용 대상을 복합쇼핑몰까지 넓히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 범위 안에서 우리 지자체부터 의무휴업을 월 4회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복합쇼핑몰·아웃렛·창고형 매장까지 적용 대상을 넓히겠습니다.

둘째, ‘골목상권 영향평가’를 조례로 의무화하겠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유통시설이 입점하기 전, 인근 골목상권에 미칠 매출·고용·상권 영향을 주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평가하는 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셋째, ‘공공배달 플랫폼’을 운영하여 거대 플랫폼의 대안을 만들겠습니다.

거대 배달앱의 15~20% 수수료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를 위해 우리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배달 플랫폼을 도입하겠습니다. 수수료 1~2% 수준으로 운영하고, 지역화폐 결제와 연계해 시민에게는 할인을, 자영업자에게는 수수료 부담 완화를 동시에 제공할 것입니다.

상가 임대료 보호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현황

“환산보증금이라는 벽, 임대차법의 사각지대”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 기준 이하 점포만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 도심·핵심 상권일수록 환산보증금을 넘어 법의 보호 밖에 놓이는 점포가 많습니다.

“임대료 인상률 5%, 그러나 현실은 두 자릿수”

법정 인상률은 5%이지만 계약 갱신 시점이나 신규 임차 시점에는 사실상 통제되지 않습니다. 동네를 살린 사람이 동네에서 살 수 없게 됩니다.

약속

첫째, 환산보증금 폐지와 임대료 상한제를 위한 입법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상가에 임대차법을 적용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 이내로 제한하는 임대료 상한제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지속가능한 상생협약 구역’을 지정하겠습니다.

입법 전이라도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상생협약 구역을 지정해 임대인·임차인·지자체가 임대료 자율 가이드라인을 합의하고, 협약 가입 임대인에게는 재산세 감면·공공사업 우선권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셋째, ‘상가 자산화·공공임대상가’를 확대하겠습니다.

지자체가 직접 상가 건물을 매입하거나 공공임대 형태로 운영하는 공공임대상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시장 임대료에 휘둘리지 않는 안정적 영업 공간을 소상공인·청년창업자·사회적기업에 우선 공급하겠습니다.

② 노동복지

- 고용보험 미가입자 등 실업급여 확대
- 불안정노동자 노동복지카드 제공
- 자영업자 3대 사회안전망 구축

고용보험 미가입자 등 실업급여 확대

현황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에게 ‘실업’도 사치입니다”

배달 라이더, 웹툰 작가, IT 프리랜서 등 고정된 사무실 없이 일하는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고용보험 체계는 여전히 낡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의 틀에 갇혀 이들은 실업급여라는 최소한의 안전망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폐업은 파산이자 절벽입니다”

2026년 현재,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자영업자가 보험료 부담과 복잡한 가입 절차 때문에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2026년 실업급여 상향, 하지만 ‘받는 사람’만 받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이 월 약 198만 원(2026년 기준) 수준으로 올랐지만,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정작 고용이 불안정해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는 미가입 노동자들은 철저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약속

첫째, ‘사회보험 지원센터’로 고용보험 가입을 돕고, 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특수고용직·예술인·자영업자 사회보험 지원센터 를 운영해 가입 상담, 보험료 계산, 신청 대행, 분쟁 지원까지 원스톱 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영세 자영업자·저소득 프리랜서·청년 플랫폼 노동자에게는 고용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지자체가 지원 하겠습니다.

둘째, 일자리보장제를 통해 구직활동 지원금과 일자리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국가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자격 기준이 까다로워 많은 사각지대 구직자가 빠져 있습니다.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구직활동 지원금을 신설하여 국가 제도의 자격 기준 밖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장기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 전직자, 결혼이민자, 장애인 구직자에게 생계비와 직무 전환 교육비를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AI 시대 직무 전환 교육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셋째, ‘국가 사회보험 확대’를 위한 입법을 의원실과 함께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공급적으로 전국민 고용보험·자영업자 고용보험 의무화·한국형 실업부조 확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노동공제회 설립 및 운영 지원

현황

“사표 낼 회사도, 기댈 동료도 없는 노동자가 늘고 있습니다”

웹툰 작가, 배달 라이더, 가사 돌봄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우리 곁에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에게 ‘노동조합’은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아파도 쉴 수 없고 다쳐도 스스로 치료비를 감당해야 하는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복지도 ‘대기업’만 누리는 대한민국,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상조, 대출, 휴양 시설 이용 등 회사 규모에 따라 갈리는 ‘복지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노동의 형태가 어떻든, 어디서 일하든 사람답게 대우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울타리’가 절실합니다.

약속

첫째, 지역마다 ‘노동공제회’가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자체와 지역 시민사회가 주도하여 모든 취약노동자를 포괄하는 ‘지역 노동공제회’ 설립을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설립 초기 자본금을 국가와 지자체가 매칭 펀드(Matching Fund) 형태로 출연하여, 공제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건강검진부터 휴가 지원까지 ‘공통의 노동복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공제회원들에게 저렴한 비용의 단체 상해보험, 무료 법률·노무 상담, 건강검진 지원, 그리고 지역 휴양시설 이용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불안정노동자 노동복지카드 제공

현황

“누구는 사내 복지물에서 쇼핑하고, 누구는 내 돈으로 장갑을 삽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다니는 노동자들은 선택적 복지포인트로 운동도 하고, 문화생활도 즐기며, 종합검진까지 받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노동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사내 복지’란 먼 나라 이야기입니다.

“월급 차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복지 격차’입니다”

단순히 통장에 찍히는 액수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거 지원, 의료비 보조, 자기계발 지원 등 대기업이 제공하는 촘촘한 복지망은 실질적인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국가의 복지는 너무 멀고, 기업의 복지는 너무 편파적입니다”

정부의 복지는 아주 가난해야만 받을 수 있고, 기업의 복지는 좋은 직장에 다녀야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낀 수많은 ‘보통의 불안정 노동자’들은 국가와 기업 모두로부터 외면받는 ‘복지 진공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약속

첫째,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불안정 노동자에게 ‘노동복지카드’를 발급하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사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노동복지카드(디지털 바우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기금을 출연하여 매년 일정 금액의 복지 포인트를 충전해 드리겠습니다.

연 1회 정밀 건강검진, 직무 전환을 위한 교육 수강, 헬스장 및 문화시설 이용, 통신비 및 교통비 지원 등 대기업 수준의 복지 항목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위험 직종 노동자에게는 특수 건강검진 항목을 추가하여 생명과 건강을 국가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둘째, 대기업의 복지 자산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상생 복지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대기업만 이용하던 휴양 콘도, 연수원, 의료 시설 등을 노동복지카드 소지자들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들과 협약을 맺겠습니다. 대기업이 쌓아온 복지 인프라를 사회적으로 공유할 때 법인세 감면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 안의 복지’를 ‘우리 모두의 복지’로 확장하겠습니다.

자영업자 3대 사회안전망 구축

현황

“폐업은 곧 파산, 낙하산 없는 절벽에 서 있습니다”

영세 식당, 미용실, 세탁소 등을 운영하는 생계형 자영업자는 폐업하는 순간 수천만 원의 빚을 떠안은 채 즉시 빈곤층으로 전락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임의 가입’에 머물러 있어, 당장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상인들에게는 보험료조차 사치로 여겨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뜨거운 기름 앞에서, 오토바이 위에서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자영업자 역시 주방에서 화상을 입거나 배달 중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 상시적인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어, 다치면 치료비는 물론이고 문을 닫는 기간 동안의 생계비까지 온전히 개인의 몫으로 돌아옵니다.

“아프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하기에, 병을 키우며 일합니다”

“아프면 쉬세요”라는 말은 자영업자에게 가장 잔인한 조롱입니다. 하루 문을 닫으면 임대료와 생계비가 막막해지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쉴 권리를 철저히 박탈당한 채 과로사나 중증 질환의 위험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약속

첫째,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험료를 우리 지자체가 직접 지원하겠습니다.

지자체가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매출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하겠습니다. 특히 연 매출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자체가 지원해, 폐업 시에도 재기 교육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안전망에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둘째, 1인·생계형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1인 자영업자·가족 종사자가 일하다 다쳐도 보상받지 못하는 현실을 끝내겠습니다. 우리 지자체가 영세 자영업자·1인 사업주·가족 종사자의 산재보험료를 중앙정부 사업과 매칭하여 지원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 상병수당’을 자영업자에게 우선 도입하겠습니다.

아프면 쉴 권리를 자영업자에게 먼저 보장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일부 지역·일부 업종에 한정된 상황에서, 우리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지역 상병수당을 자영업자에게 우선 도입하겠습니다.

생활금융상담센터와 경제금융주치의

현황

“가계부채 2,000조 시대, 서민들은 고금리의 파도를 온몸으로 맞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금리 속에서 대출로 연명하는 자영업자와 서민들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연체는 시작되었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어떤 채무 조정 제도가 나에게 맞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져온 새로운 소외와 범죄의 위협”

스마트폰 하나로 수익 원이 오가는 세상이지만, 디지털 기기에 서툰 어르신과 취약계층에게 현대 금융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돈 문제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돌봄의 영역입니다”

재무적 곤경은 곧 우울증, 가족 해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현재의 금융 상담은 은행 문턱을 넘어야만 가능하거나, 이미 파산한 뒤에야 찾는 사후약방문에 그치고 있습니다.

약속

첫째, 동네마다 재무 건강을 체크하는 ‘생활금융상담센터’를 상설 운영하겠습니다.

멀리 있는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장보러 가듯 들러 재무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빚 상담뿐만 아니라 노후 설계, 주거 자금 마련 등 생애 주기별 맞춤형 경제 컨설팅을 제공하는 지역사회의 ‘경제 사랑방’으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1:1 밀착형 ‘경제금융주치의’를 파견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겠습니다.

재정적 위기에 처한 가구나 청년, 소상공인에게 전문 ‘경제금융주치의’를 매칭하겠습니다. 일회성 상담에 그치지 않고, 가계부 작성부터 불필요한 지출 줄이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기, 복지 제도 연결까지 개인별 맞춤 처방전을 쓰고 자립할 때까지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셋째, 금융 범죄로부터 시민을 지키겠습니다.

생활금융상담센터를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과 최신 범죄 수법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겠습니다. 피해 발생시 주치의가 즉시 개입하여 계좌 동결, 법률 구조 지원, 심리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③ 지역순환경제

- 지역화폐로 세금도 낼 수 있도록
- 지역공공은행 및 노동신협 설립 지원
- 지역재투자 조례 및 지역재투자기금 설치
- 대기업·유통기업·대형 상업시설 4대 지역 기여 의무화
- 지역자산화로 주민과 사회연대경제 지원
- 지역 기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 농어촌 기본소득 활용을 위한 서비스 확대

지역화폐로 세금도 낼 수 있도록

현황

“쓸 곳이 마땅치 않아 현금을 다시 찾게 되는 구조”

지역화폐가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여전히 사용처는 소상공인 가맹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용처의 한계는 지역화폐의 회전 속도를 늦추고 결제 비중을 낮추는 원인이 됩니다.

“지자체 예산으로 할인만 해주는 ‘현금 살포’라는 비판”

정부가 바뀌고 정책 기조가 변할 때마다 지역화폐 예산은 칼바람을 맞습니다. 지역화폐가 단순한 할인 혜택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화폐가 지역 내에서 세금으로 환수되고 다시 복지 예산으로 나가는 ‘순환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외부 예산 지원 없이는 자립하기 어렵습니다.

약속

첫째, 자동차세·재산세 등 ‘지방세’를 지역화폐로 납부하게 하겠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지방세 고지서, 이제 지역화폐로 결제하십시오.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자체가 징수하는 모든 세금에 대해 지역화폐 납부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상하수도 요금 및 쓰레기 봉투 등 ‘공공 서비스’ 결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일상적인 공공요금도 지역화폐의 영역입니다. 상하수도 요금은 물론, 공영 주차장 이용료, 지역 문화 시설 입장료, 종량제 봉투 구매까지 지역화폐로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지역화폐 하나만 있으면 동네 생활이 모두 해결되는 ‘지역화폐 생활권’을 완성하겠습니다.

셋째, 지역화폐 세금 납부 시 추가 세제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역화폐로 세금을 낼 경우, 납부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시 지역화폐 포인트로 돌려주는 ‘상생 납세 인센티브’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납세 의무를 즐거운 지역 사랑 실천으로 바꾸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세수 확보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상생전략이 될 것입니다.

지역공공은행 및 노동신협 설립 지원

현황

“시중은행의 기록적인 성과급, 그 재원은 서민들의 피땀 어린 이자입니다”

5대 시중은행이 매년 수십조 원의 이자 수익을 올리며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동안, 지역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은 높은 금리에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효율성’을 핑계로 지역의 영업점을 줄줄이 폐쇄하여, 디지털에 서툰 어르신과 농어민들을 ‘금융 사막’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번 돈이 지역으로 흐르지 않고 서울로 집중됩니다”

지역 주민들이 저축한 돈은 대부분 서울 본사로 올라가 대기업 대출이나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입니다. 정작 지역의 혁신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돈이 필요할 때는 ‘담보가 없다’,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외면당합니다.

약속

첫째, 지자체가 대주주가 되는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미국의 북다코타 은행(BND)처럼 지자체 재정과 공공기금을 예치하고 운영하는 ‘지역공공은행’을 만들겠습니다. 시중은행처럼 이윤 극대화에 목매지 않고, 지역의 공익 프로젝트(RE100 산단, 마을학교 등)에 저리로 융자하며,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든든한 저금리 대출 창구가 되어주는 ‘지역 경제의 심장’을 세우겠습니다.

둘째, 노동자들이 주인이 되는 ‘업종별·지역별 노동신협’ 설립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들이 스스로 기금을 모으고 운영하는 ‘노동자 상호부조 신협’ 설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자체가 초기 자본의 일부를 매칭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시중은행의 이윤 일부를 지역으로 환원하는 ‘지역 재투자 평가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예금을 받아 간 만큼 지역에 다시 대출과 투자를 하도록 강제하겠습니다. 지역 재투자 평가 결과를 은행의 공공사업 참여 자격과 연동하여, 지역 사회에 기여하지 않는 은행은 지역에서 영업하기 어렵게 만들겠습니다.

지역재투자 조례 및 지역재투자기금 설치

현황

“우리가 쓴 돈이 우리 동네를 돌지 않고 서울 본사로 직행합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대형 마트, 온라인 플랫폼에서 우리가 결제하는 돈의 상당 부분은 결제 즉시 서울의 본사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역에서 노동과 소비가 일어나지만, 그 결실인 ‘자본’은 지역에 머물지 못합니다.

“본사가 없기 때문에 세금, 인재, 결정권은 모두 서울로 갑니다.”

대기업 본사의 70% 이상이 서울에 있습니다. 본사가 있어야 법인소득세 일부가 지역으로 오고, 핵심인재들이 지역에 오고, 중요한 결정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조례와 기금이 없는 선의는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외치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법적 근거(조례)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돈(기금)이 부족합니다. 자본의 흐름 자체를 지역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제도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약속

첫째, ‘지역재투자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 의무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영업하는 금융기관과 대형 유통업체가 지역 내에서 받은 예금과 수익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해당 지역에 재투자하도록 법제화하겠습니다. ‘지역 재투자 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금고 지정 및 인허가와 연동하겠습니다.

둘째, 지역 뉴딜의 화수분이 될 ‘지역재투자기금’을 대규모로 조성하겠습니다.

지자체 출연금, 지역공공은행의 수익금, 시중은행의 지역 재투자 출연금을 합쳐 기금을 만들고 RE100 산단 개조, 마을학교 운영,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지역활성화 사업에 우선 활용할 것입니다.

셋째, 자본의 지역 내 체류를 보장하는 ‘지역본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오는 기업은 지방 사업본부를 본사로 격상시키거나 본사를 이전하도록 하여 세금, 인재, 결정권을 지역으로 가져오겠습니다.

대기업·유통기업·대형 상업시설 4대 지역 기여 의무화

현황

“고용은 늘었다는데, 정작 양질의 일자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형 유통업체가 고용 효과를 홍보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단기 계약직이나 파트타임 노동자가 대다수입니다. 관리직이나 핵심 전문직은 본사에서 파견된 인력이 독점하고, 지역 청년들은 저임금 단순 노동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농산물은 구석으로 밀려나고, 본사 물류망 상품만 가득합니다”

전국 단위의 물류 시스템을 갖춘 대기업 유통망에서 우리 동네 농민이 키운 배추나 지역 공장에서 만든 생필품이 들어설 자리는 좁기만 합니다. 지역 자원을 외면하는 유통 구조는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거대 데이터센터와 물류센터,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옵니다”

AI 시대를 맞아 네이버, 카카오, 아마존 같은 거대 IT 기업들이 지방 곳곳에 초대형 데이터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로켓배송과 새벽배송을 위한 물류센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과 물을 소모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탄소 배출과 전자파 우려, 송전탑 건설의 고통이 지역에 남습니다. 물류센터 대형 화물차로 인해 도로는 파이고, 심각한 교통체증과 매연, 소음 피해가 발생합니다.

약속

첫째, 매출액의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는 ‘지역기여금’ 출연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지역 내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유통·대기업 사업장에 대해 ‘지역기여금’ 납부를 제도화하겠습니다. 매출액의 1~3% 내외를 적립하여 앞서 논의한 ‘지역재투자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둘째, 신규 채용 인원의 50% 이상 ‘지역 주민 의무 고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단순 노동뿐만 아니라 관리직 및 전문직군에서도 지역 인재 할당제를 엄격히 적용하겠습니다. 지역 대학 및 특성화고와 연계한 채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강제하고, 지역 인재 고용 실적을 매년 공표하여 ‘진짜 지역 기업’인지 시민들이 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매장 내 ‘지역 물품 우선 구매 및 입점 의무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대형 마트와 백화점 내에 지역 농특산물 및 중소기업 제품 전용 매대 설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전체 구매 물량의 일정 비율을 반드시 해당 지역 내 생산품으로 채우도록 하여, 대기업의 강력한 유통망이 지역 산업의 판로가 되는 ‘상생’을 실현하겠습니다.

넷째, 지역 환경을 파괴하지 않도록 ‘인프라 책임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쓰는 만큼, ‘지역 RE100’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물류센터 역시 진입로 확장, 방음벽 설치, 친환경 배달 차량 전면 도입 등 주변 환경 훼손을 막는 비용을 기업이 전액 부담하도록 책임을 묻겠습니다.

지역자산화로 주민과 사회연대경제 지원

현황

“임대료로 나가는 돈만 잡아도 지역 경제는 살아납니다”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지출하는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임대료입니다. 이 돈은 지역 내에서 순환하지 않고 대부분 부동산 자산가들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갑니다. 지역의 자산이 외부로 유출되는 가장 큰 구멍을 막아야 합니다.

“개인이 감당하기엔 부동산의 벽이 너무나 높습니다”

“우리 건물을 우리가 사서 안정적으로 일해보자”는 마음이 있어도,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건물 값을 시민들이 모으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금융권의 대출 문턱은 높고, 공동 소유를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장치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약속

첫째, 건물을 공동 소유하는 ‘지역공동체 토지신탁(CLT)’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주민과 지자체, 사회적 경제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모아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이를 영구적으로 공동 소유하는 ‘공동체 토지신탁’ 모델을 확산하겠습니다. 소유권은 공동체가 갖고, 이용권은 필요한 주민에게 저렴하게 대여하여 임대료 걱정 없이 대대손손 일할 수 있는 ‘영구적 안심 구역’을 동네마다 만들겠습니다.

둘째, 자산 매입비를 저리로 빌려주는 ‘지역자산화 전용 융자’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건물을 매입하려 할 때, 앞서 설립한 ‘지역공공은행’과 ‘지역재투자기금’을 통해 매입 자금의 90%까지 장기 저리로 융자하겠습니다. 이자 비용이 월세보다 낮은 구조를 만들어, “월세 낼 돈으로 건물을 사서 지역의 자산으로 만드는” 합리적인 전환을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유휴 공공부지와 건물을 주민 공동체에 우선 매각·임대하겠습니다.

방치된 폐교, 빈집, 이전한 공공기관 부지 등을 민간 건설사에 팔아넘기지 않겠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지역 자산화 기구에게 우선 매수권과 30년 이상의 장기 임대권을 부여하여, 공공의 자산이 주민들의 문화·복지·경제 거점으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지역 기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현황

“지원금이 끊기면 멈춰버리는 위태로운 생태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들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초기 자본 부족과 판로 개척의 어려움에 시달립니다. 정부의 단기적이고 파편화된 재정 지원에 의존하다 보니, 정책 기조가 바뀌거나 지원금이 끊기면 사업을 접어야 하는 만성적인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착한 소비’에만 기대기에는 벽이 높습니다”

이윤 극대화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기업 중심의 시장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고 환경을 생각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회연대경제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의 선의에 기대 ‘착한 소비’를 넘어, 이들이 시장에서 당당히 자립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지원대가 필요합니다.

“따로 국밥식 고군분투,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는 연대”

돌봄 협동조합, 로컬푸드 매장, 재생에너지 마을기업 등 훌륭한 모델들이 있지만 서로 연결되지 못하고 점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상호 거래하고 자원을 공유하며 거대한 ‘지역 연대 생태계’를 이루도록 묶어주는 거버넌스가 부재합니다.

약속

첫째,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사회연대경제 기업 우선 구매(공공조달) 30%’를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이 가장 든든한 고객이 되겠습니다. 지자체와 지역 내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발주할 때, 전체 예산의 최소 30% 이상을 지역 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사회적 가치 조달 목표제’를 엄격히 시행하겠습니다.

둘째, 앞서 신설한 ‘지역공공은행’을 통한 ‘사회적 금융’ 생태계를 완성하겠습니다.

기존 시중은행의 까다로운 담보 대출 심사에서 소외되던 사회연대경제 기업들을 위해, 지역공공은행 내에 ‘사회적 금융 전담 창구’를 신설하겠습니다. 재무적 이익뿐만 아니라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고용, 환경, 지역 기여)’를 신용으로 평가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활용을 위한 서비스 확대

현황

“기본소득, 참 고맙지만 쓸 수 있는 곳이 너무 멀리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급되면서 숨통은 좀 트였지만, 여전히 불편함은 가시지 않습니다. 빵 하나 사려고 버스를 세 번 갈아타거나, 감기약 하나 사러 읍내까지 택시비를 만 원씩 내고 가야 하는 것이 농어촌의 현실입니다.

“지방 소멸의 속도가 서비스가 사라지는 속도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사람이 줄어드니 가게가 문을 닫고, 가게가 없으니 사람이 더 떠나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이제는 돈을 주는 단계를 넘어, 그 돈을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공공 서비스의 망’을 다시 깔아야 할 때입니다.

“농어촌은 ‘생산의 기지’이기 이전에 누군가의 ‘소중한 삶터’입니다”

도시의 식탁을 책임지는 농어민들이 정작 자신들의 식탁과 건강은 챙기지 못하는 모순을 해결해야 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 경제의 마중물이 되어 동네 상권이 다시 살아나게 하려면, 국가가 먼저 최소한의 서비스 기반을 깔아주어야 합니다.

약속

첫째, 찾아오는 이동식 공공 서비스, ‘달리는 보건소와 만물상’을 운영하겠습니다.

주민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지역화폐)으로 결제할 수 있는* 공공 모바일 마켓과 ‘찾아가는 이동식 병원·빨래방’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생필품 구매부터 기본 진료까지 마을 회관 앞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동네 구석구석을 잇는 순환 물류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기본소득과 연계된 ‘농어촌 공유 교통(1000원 택시 등)’을 전면화하겠습니다.

이동권은 인권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카드로 결제 시 파격적인 할인을 제공하는 ‘수요응답형 버스(DRT)’와 ‘마을 택시’를 모든 읍·면 단위로 확충하겠습니다. 차가 없어도, 몸이 불편해도 기본소득만 있다면 어디든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셋째, 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마을 거점 복합 서비스 센터’를 세우겠습니다.

폐교나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카페, 편의점, 보건지소, 우체국 업무가 결합된 ‘마을 공유 거점’을 만들겠습니다. 이곳의 운영은 주민 협동조합에 맡겨 기본소득이 마을의 일자리로 이어지게 하고, 주민들이 서로 돌보며 기본소득을 소비할 수 있는 ‘지역 순환형 경제 생태계’를 완성하겠습니다.

④ 돌봄경제

- 시군구별 공공돌봄센터 설치
- 돌봄일자리책임제
- 지역 인재로 만드는 돌봄경제
- 돌봄과 공동체 활동에 참여소득 지급
- 1인 가구 안심돌봄 서비스
- 마을학교와 마을교사, 아이 키우는 마을
- 약국과 편의점을 ‘돌봄 보안관’으로
- 식사공동체 활성화 - 반찬배달, 식사모임, 공유부엌

시군구별 공공돌봄센터 설치

현황

“돌봄 시설 90% 이상이 민간에 맡겨져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돌봄은 지나치게 시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윤을 남겨야 하는 민간 업체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노동자의 임금을 깎고, 이는 곧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집니다.

“기관마다 제각각인 서비스, 운 좋으면 좋은 곳에 걸리는 ‘돌봄 로또’”

어느 센터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돌봄의 수준이 천차만별입니다. 국가가 정한 표준화된 고품질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용자들은 매번 불안한 마음으로 시설을 골라야 합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위기, 공공돌봄의 후퇴를 막아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예산 절감을 이유로 사회서비스원을 통폐합하거나 기능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공공이 책임져야 할 돌봄을 다시 민간 시장에 던져버리는 것은 ‘돌봄 민주주의’의 명백한 후퇴이며,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약속

첫째, 전국 모든 시·군·구에 ‘공공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돌봄도 소방서나 경찰서처럼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필수 기반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초지자체에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돌봄 센터를 최소 1개소 이상 설치하여, 거주 지역에 상관 없이 누구나 국가가 보증하는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동·노인·장애인을 아우르는 ‘통합 돌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아이 돌봄은 이쪽, 어르신 돌봄은 저쪽으로 따로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공공돌봄센터를 지역의 ‘원스톱 통합돌봄센터’로 만들어, 한 가구의 모든 돌봄 수요를 상담하고 직접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민간 시설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돌봄 표준 가이드’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공공돌봄센터는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지역 내 민간 돌봄 시설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우수한 공공의 운영 모델을 전파하여 지역 전체의 돌봄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겠습니다. 공공이 앞장서서 ‘진짜 돌봄’의 기준을 세우겠습니다.

돌봄일자리책임제

현황

“가족의 희생만으로 버티는 돌봄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돌봄은 여전히 가족, 그중에서도 여성의 무급 노동이나 저임금 여성 노동자들의 희생 위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돌봄 때문에 직장을 포기하고, 돌봄 때문에 가정이 해체되는 ‘돌봄 파산’은 이제 남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현실입니다.

“돌봄 노동자는 ‘천사’가 아니라 ‘전문가’로 대우받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 가장 필수적인 일을 하는 돌봄 노동자들은 정작 최저임금 수준의 낮은 처우와 불안정한 고용에 시달립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편견 속에 전문성은 무시되고, 현장 인력은 갈수록 부족해져 돌봄의 질은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말뿐인 ‘국가 책임제’, 지자체 예산과 인력은 여전히 걸립니다”

정부는 돌봄 국가 책임을 외치지만, 실제 시민들이 체감하는 지역 현장의 돌봄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자체 예산은 여전히 토건 사업에 우선 배정되고, 돌봄 현장보다는 행정 관료들의 책무만 늘어나는 기형적인 구조를 혁파해야 합니다.

약속

첫째, 지자체 가용 재정을 ‘돌봄 경제’에 우선 투입하겠습니다.

예산은 곧 의지입니다. 도로를 닦고 건물을 올리는 예산을 줄여, 사람을 돌보는 예산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지자체 예산을 ‘돌봄 특별 회계’로 편성하여 돌봄 시설 확충, 돌봄 노동자 임금 현실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전폭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둘째, 신규 총원 인력의 50%를 ‘돌봄 현장 인력’으로 우선 배치하겠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있는 행정직만 늘리지 않겠습니다. 지자체가 직접 고용하는 인력의 절반을 방문 간호사, 돌봄 코디네이터, 사회복지사 등 시민의 곁을 지키는 ‘현장 전문가’로 채우겠습니다.

셋째, 돌봄 노동자의 ‘공공 고용’과 ‘생활임금’을 보장하겠습니다.

공공돌봄센터를 전면 확대하여 민간에 맡겨졌던 돌봄 노동자들을 지자체가 직접 고용하거나 그에 준하는 지위를 보장하겠습니다. 돌봄 노동자에게 지역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겠습니다.

지역 인재로 만드는 돌봄경제

현황

“돌봄 수요는 폭발하는데, 지역 인력은 떠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며 돌봄 수요는 하루가 다르게 늘지만, 현장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다는 비명이 터져 나옵니다. 돌봄 노동의 낮은 처우와 불안정한 고용 탓에 청년은 기피하고 숙련 인력은 대도시로 떠납니다.

“일하고 싶은 주민은 많은데, ‘괜찮은 일자리’가 없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부모를 모셔 본 주민, 은퇴 후 지역에 기여하고 싶은 중장년, 지역에는 돌봄의 잠재력 있는 인재가 많습니다. 그러나 체계적 교육 기회와 안정적 일자리가 없어, 이 잠재력은 산업으로 발전하지 못한 채 흩어집니다.

“돌봄은 지역의 부담이 아닌 지역의 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돌봄을 재정 부담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역 주민이 지역 어르신을 돌보고, 그 노동이 안정적 일자리가 되며, 그 일자리에 직무급과 경력 경로가 갖춰지면 돌봄은 지역 인재가 지역에 머무는 토대이자 새로운 지역 산업이 됩니다.

약속

첫째, ‘지역 돌봄 사관학교’를 운영해 주민을 돌봄 전문가로 키우겠습니다.

돌봄 의지만 있다면 지자체가 책임지고 교육하겠습니다. 지자체별 지역 돌봄 사관학교를 운영해 기초 돌봄부터 전문 간호·심리 상담까지 체계적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교육 기간 생활비를 지원하여 배움이 곧바로 일자리로 이어지는 징검다리를 놓겠습니다.

둘째, 교육 이수자에게 일자리보장제로 ‘정규직 돌봄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교육을 마친 주민은 지자체 공공돌봄센터의 정식 요원으로 채용하겠습니다. 민간 시장의 수요에 휘둘리지 않고 지자체가 고용을 직접 책임지는 일자리보장제를 적용하겠습니다.

셋째, 돌봄의 전문성에 걸맞은 ‘직무급제와 경력 경로’를 만들겠습니다.

돌봄 노동을 단순 노동으로 치부하지 않겠습니다.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직무급제를 도입하고, 지역 생활임금을 상회하는 급여를 보장하겠습니다. 마을 돌봄 반장 → 지역 돌봄 코디네이터 → 통합돌봄 매니저로 성장하는 경력 경로를 설계해 평생 직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돌봄과 공동체 활동에 참여소득 지급

현황

“동네를 가꾸는 이웃들의 땀방울, ‘열정 페이’로 버티고 있습니다”

마을 축제를 기획하고, 골목 청소를 하고, 소외된 이웃을 살피는 마을 활동가들은 공동체의 파수꾼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 역시 ‘봉사’라는 이름 아래 정당한 보상 없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외면한 ‘사회적 가치’, 이제는 국가가 평가해야 합니다”

돈이 되는 일만 ‘진짜 일’로 대접받는 세상에서는 돌봄도, 공동체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GDP 수치에는 잡히지 않지만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노동’에 대해 새로운 가치 매김이 절실합니다.

약속

첫째, 이웃 돌봄 및 마을의 공익적 활동에 참여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돌봄 노동, 기후위기 대응 활동, 마을 안전 순찰, 소외계층 반찬 나눔, 마을 미디어 운영 등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시민들에게 시간당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즐겁게 동네를 가꾸는 참여의 장을 열겠습니다.

둘째, 이웃 간 돌봄을 가치로 환산하는 ‘지역 돌봄 시간은행’을 제도화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웃의 아이를 돌봐준 2시간을 ‘돌봄 포인트’로 적립하고, 나중에 내가 아플 때 다른 이웃의 도움으로 되돌려받는 시간 기반의 상호부조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현금이 없어도 돌봄을 주고받을 수 있는 지역 공동체의 새로운 통화가 될 것입니다.

셋째, 참여소득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여 ‘골목상권’까지 살리겠습니다.

지급되는 참여소득은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화폐로 지급하겠습니다. 시민들의 공익적 활동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로 이어지게 하여, 복지와 경제가 함께 선순환하는 ‘지역 공존 경제 모델’을 완성하겠습니다.

1인 가구 안심돌봄 서비스

현황

“열이 펄펄 나고 어지러운데, 병원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가벼운 감기라면 몰라도, 수술이 필요하거나 거동이 힘든 검사를 받아야 할 때 1인 가구는 막막합니다.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병원의 말에 연락할 곳을 찾지 못해 치료를 미루기도 합니다.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누가 언제 발견할까요?”

고독사는 더 이상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년, 중장년 1인 가구 역시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집에서 쓰러졌을 때 도움을 요청할 ‘골든타임’을 놓칠까 두려워합니다.

“기존의 돌봄은 ‘취약계층’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돌봄 서비스는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 장애인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로 살다가 갑자기 아픈 ‘일시적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1인 가구들은 아무런 제도적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각자도생하고 있습니다.

약속

첫째, 집 앞까지 찾아가는 1인 가구 ‘병원동행 서비스’를 전면 실시하겠습니다.

단순히 차를 태워주는 것을 넘어, 전문 ‘돌봄 매니저’가 집 안에서부터 병원 접수, 진료실 동행, 약 수령, 귀가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는 서비스를 모든 1인 가구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필요할 때 신청하면 즉각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퇴원 후 일상 회복을 돕는 ‘단기 집중 돌봄’을 지원하겠습니다.

병원을 나온 뒤 혼자서 밥을 챙기거나 씻기 힘든 회복기 동안, 가사 지원과 식사 배달 서비스가 결합된 ‘단기 집중 케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두렵지 않도록,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지역사회가 든든한 뒷배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마을학교와 마을교사, 아이 키우는 마을

현황

“오후 3시, 아이들은 갈 곳이 없어 학원 버스로 흩어집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맞벌이 부모들의 마음은 타들어 갑니다. 초등 돌봄교실은 턱없이 부족하고, 중·고등학생 청년들에게는 ‘입시 공부’ 외에 안전하게 머물 공간이 없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저녁 늦게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이 학원에서 저 학원으로 떠도는 ‘학원 뺑뺑이’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부모의 소득 격차가 아이들의 ‘오후 삶’의 격차가 됩니다”

비싼 사교육을 감당할 수 있는 가정의 아이들은 화려한 커리큘럼 속에 놓이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방치되거나 혼자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웁니다. 돌봄의 공백이 곧 교육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아이들은 자신이 사는 동네에 정을 붙일 기회를 잃어갑니다.

“지역의 훌륭한 인적 자원들이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됩니다”

우리 동네에는 은퇴한 선생님, 재능 있는 예술가, 기술을 가진 장인, 아이 키운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지혜를 아이들과 연결할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어, 소중한 지역 자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약속

첫째, 집 앞 5분 거리마다 아이들의 아지트 ‘마을학교’를 세우겠습니다.

학교 교실에만 갇혀 있지 않겠습니다. 마을 도서관, 주민센터 유휴 공간,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마을 카페 등을 활용하여 ‘마을학교’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초등학생에게는 안전한 돌봄과 놀이를, 청소년에게는 진로 탐색과 쉼을 제공할 것입니다.

둘째, 지역 주민을 전문 교육 인력인 ‘마을교사’로 육성하고 일자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지역의 재능 있는 주민들을 ‘지역 마을교사’로 선발하고 체계적인 연수 과정을 제공할 것입니다. 정당한 생활임금 수준의 참여소득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지역 공익 일자리’로 안착시킬 것입니다. 마을교사는 아이들에게는 훌륭한 스승이자, 지역사회에는 든든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셋째, 학교와 마을이 손을 잡는 ‘온마을 교육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의 일부를 마을학교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청-지자체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숲 체험, 목공, 마을 역사 탐방, 지역 상점 인턴십 등 마을교사만이 가르칠 수 있는 생동감 넘치는 배움을 정식 교육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약국과 편의점을 ‘돌봄 보안관’으로

현황

“복지 사각지대, 서류 속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수원 세 모녀 사건이나 고독사 비극은 늘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복지 공무원 한 명이 담당하는 인구는 너무 많고, 정기적인 방문 조사만으로는 굳게 닫힌 문 안의 사정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동네 약국과 편의점은 이웃의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챩니다”

매일 같은 시간 소주만 사가는 어르신, 갑자기 약국에 와서 기운 없는 목소리로 수면제를 찾는 청년, 눈가가 부은 채 편의점 한구석에서 끼니를 때우는 아이... 우리 동네 상점 주인들은 이웃의 미세한 변화를 누구보다 빨리 감지합니다.

“신고하고 싶어도 절차가 복잡하고 뒷감당이 걱정됩니다”

상점 주인이 위기를 감지해도 어디에 어떻게 알려야 할지 막막합니다. 행정기관에 전화하는 것이 번거롭고, 괜히 남의 일에 참견했다가 문제가 생길까 봐 주저하게 됩니다. 이들의 선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연결고리가 부족합니다.

약속

첫째, 동네 상점을 위기 가구 발굴단인 ‘돌봄 보안관’으로 공식 지정하겠습니다.

편의점, 약국, 세탁소, 미용실 등 주민 밀착형 시설을 ‘돌봄 보안관’ 상점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이들에게 위기 징후(장기간 결제 중단, 특정 물품 반복 구매, 외모 변화 등)를 식별하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공식적 지위를 부여하겠습니다.

둘째, 돌봄 보안관 활동에 대해 ‘사회적 가치 보상’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웃을 구한 상점 주인들의 선의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위기 가구 발굴에 기여한 ‘돌봄 보안관’ 상점에는 지자체 세금 감면, 전기료·수도료 일부 지원, ‘우리 동네 착한 가게’ 홍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입니다. 복지 기여도가 곧 상점의 신뢰와 수익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식사공동체 활성화 - 반찬배달, 식사모임, 공유부엌

현황

“편의점 도시락과 라면으로 버티는 고립된 식탁”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혼자 밥을 먹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나 생업에 쫓기는 청년들에게 영양가 있는 한 끼를 챙기는 일은 사치가 되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질병은 ‘밥상머리의 외로움’입니다”

사회적 고립은 ‘고독사’라는 비극의 씨앗이 됩니다. 하루 종일 누구와도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 홀로 밥을 먹는 일상은 정신 건강을 위협합니다.

“치솟는 물가, 공동구매와 공동조리가 답이지만 공간이 없습니다”

소량의 식재료를 사는 것보다 대량으로 구매해 나누어 조리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하지만 ‘함께 요리하여 먹고 싶어도 장소가 없는’ 인프라의 부족이 공동체 형성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약속

첫째, 영양과 안부를 동시에 배달하는 ‘공공 반찬 배달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단순한 도시락 배달을 넘어, 지역의 식자재로 만든 건강한 반찬을 정기적으로 배달하겠습니다. 배달원은 마을의 사정을 잘 아는 주민들로 구성하여 ‘식사 배달 + 안부 확인 + 위기 징후 포착’이 동시에 이뤄지는 지역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외로운 식탁을 왓자지껄하게 바꾸는 ‘소셜 다이닝(식사 모임)’을 지원하겠습니다.

함께 모여 밥을 먹겠다고 약속한 주민 모임에 ‘식사 공동체 지원금’을 드립니다. 청년과 어르신이 함께 밥을 먹는 ‘세대 공감 식탁’, 혼자 사는 이웃끼리 모이는 ‘1인 가구 만찬’ 등 다양한 형태의 식사 모임을 장려하겠습니다.

셋째, 동네마다 누구나 요리할 수 있는 ‘상설 공유 부엌’을 촘촘히 만들겠습니다.

주민센터, 도서관, 폐교 등을 개조하여 최신 조리 기구를 갖춘 ‘마을 공유 부엌’을 세우겠습니다. 이곳에서 반찬을 만들어 나누고, 이웃과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마을 식당’ 기능을 겸하게 하겠습니다.

01 5대 사회계약

다양성 공존 사회계약

혐오와 차별 없는 지역으로,
누구나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평등과 안전

다양한 가족과 시민

문화다양성

동물권

① 평등과 안전

- 차별금지 조례 및 차별금지 센터 설치
- 성평등 임금공시제 전면 도입
- 여성의 안전이 당연한 일상
- 유니버설 디자인 의무화

차별금지 조례 및 차별금지 센터 설치

현황

“국회만 쳐다보기엔 우리 곁의 차별이 너무나 시급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국회에서 공전을 거듭하는 동안, 지역사회의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는 여전히 일상적인 차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시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초의 접점’이자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합니다.

“조례가 없으면 행정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차별이 발생해도 근거가 되는 조례가 없으면 지자체는 “권한이 없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인권 예산을 배정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인권행정 원칙을 명시한 강력한 ‘차별금지조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도움의 문턱은 높고, 신고는 두렵습니다”

막상 차별을 당해도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멀고 절차는 복잡합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서, 나의 형편을 잘 아는 전문가에게 즉각 상담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안 전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약속

첫째, 모든 자치단체에 ‘포괄적 차별금지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성별, 장애, 인종, 성적지향, 학력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지역 사회의 ‘기본 헌장’으로 명문화하겠습니다. 지자체가 발주하는 사업, 운영하는 시설, 채용하는 인력 관리에서부터 차별을 원천 예방하는 강력한 행정 지침을 확립하겠습니다.

둘째, ‘차별금지센터(평등센터)’를 설치하여 즉각적인 구제 절차를 가동하겠습니다.

시군구별 교통 접근성이 높은 위치에 ‘평등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상담 뿐만 아니라, 차별 사건 발생 시 조사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지자체장 명의의 시정 권고를 내리며, 불이행 시 공공사업 참여 제한 등의 실질적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셋째, 피해자를 위한 ‘법적 대응 원스톱 패키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위법적인 차별을 당했을 때 비용 걱정 없이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익 변호사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소송 대행, 증거 수집 지원, 법률 상담을 전액 무상으로 지원

하겠습니다.

넷째, 민간 영역의 평등 확산을 위한 ‘평등 파트너십’을 지원하겠습니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상점, 종교 시설 등이 차별 없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차별금지조례를 준수하는 사업장에는 ‘인권 친화 사업장’ 인증을 부여하고 지역 화폐 가맹점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을 주겠습니다.

성평등 임금공시제 전면 도입

현황

“부끄러운 OECD 1위, 한국 여성의 시간은 다르게 흐릅니다”

대한민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약 31%로, OECD 국가 중 30년 가까이 압도적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남성이 100만 원을 벌 때 여성은 69만 원을 받는 셈입니다.

“블라인드 채용을 뚫어도, 블라인드 임금에 좌절합니다”

어렵게 공정한 채용 관문을 통과하더라도, 기업 내부의 임금 산정 기준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기본급은 같더라도 각종 수당과 성과급 배분에서 발생하는 성별 격차는 당사자가 알 길조차 없습니다.

“저임금은 돌봄의 위기와 노후 빈곤으로 직결됩니다”

여성의 저임금은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의 가장 큰 원인이 되며, 평생 누적된 임금 격차는 결국 심각한 여성 노인 빈곤으로 이어집니다. 임금 격차 해소는 단순한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초저출생과 초고령 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생존 전략입니다.

약속

첫째, 공공기관 및 50인 이상 민간기업의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의무화하겠습니다.

기업이 매년 직급별, 직종별, 고용형태별 임금 현황을 성별로 분리하여 정부와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성별 근로공시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만으로도 기업 스스로 차별적 임금 구조를 돌아보고 시정하게 만드는 강력한 자정 효과를 끌어내겠습니다.

둘째, 성평등 임금 우수 기업에 ‘파격적 인센티브’와 ‘공공조달 가점’을 부여하겠습니다.

임금 격차를 선도적으로 해소하고 여성 임원 비율을 높인 기업에게는 세제 혜택과 ‘성평등 우수기업 인증’을 부여하겠습니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의 모든 공공조달 사업과 입찰에서 성평등 공시 지표를 핵심 평가 항목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여성의 안전이 당연한 일상

현황

“여성 대상 범죄는 특정한 개별적 사건이 아닌 구조적 문제입니다.”

불법촬영, 스토킹, 교제폭력은 물론,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가로질러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범죄의 방식만 바꿨을 뿐, 여성의 신체와 일상을 통제하려는 폭력은 여전히 반복됩니다.

“공간은 연결되어 있고, 위험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집, 골목, 대중교통, 직장,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지명이나 학교/직장명은 쉽게 공개됩니다. 기술과 공간, 관계 속에서 반복되는 위협은 개인의 주의만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예방 없는 대응은 언제나 늦습니다.”

사후 처벌 중심의 정책은 어두운 골목, 주거안전 사각지대, 치안 공공서비스의 미온적 관리 등 지역사회 전반의 안전 인프라 부족과 격차가 범죄의 토양이 되고 있습니다. 사후적 처벌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안전한 도시 환경, 빠른 초기 대응, 지역사회 차원의 예방 체계가 함께 구축될 때 비로소 범죄는 줄어듭니다.

약속

첫째, 여성안전 위협에 대한 ‘조기 대응·회복 중심 원칙’을 확립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해 초기 대응부터 확산 차단, 피해 회복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발생 이후의 처벌에 머무르지 않고, 스토킹·교제폭력·디지털 성범죄 등 고위험 사례에 대해서는 신고 단계에서부터 경찰·의료·교육·복지기관이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가동하겠습니다. 협의체에서는 접근금지 요청, 임시 보호시설 연계, 긴급 심리 지원을 자동으로 가동하는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고, 반복 신고 지역과 유형에 대해서는 데이터 기반 선제 개입을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빅테크의 지역사회 기여금을 피해 여성의 회복을 위한 공공 재원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 성범죄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빅테크 플랫폼 기업에 부과하는 지역사회 기여금의 10%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명목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이 기금은 딥페이크·불법촬영 게시물 삭제 지원, 법률 대응, 심리 치료, 의료 지원 등 회복 전 과정에 우선적으로

로 사용하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 어느 골목길이든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생활 안전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행정동 단위까지 세분화된 여성안전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 지역의 위험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대응하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자치경찰제와 연계한 지역사회 기반 대응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 의무화

현황

“배려는 있었지만 ‘기본’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무장애(Barrier Free)’ 의무화가 시행되어 왔지만, 이는 주로 공공건물이나 대형 시설에 국한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걷는 보도블록, 대중교통 환승 통로, 동네 공원 등은 여전히 계단과 좁은 문, 읽기 힘든 안내판으로 가득합니다.

“인구 구조는 변하는데 도시는 30대 비장애인 남성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 사회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유아차를 끄는 부모보다 보행 보조기를 사용하는 어르신이 더 많아진 시대지만, 도시의 경사도와 신호등의 시간, 표지판의 글자 크기는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후 수정은 비용을 5배 이상 높입니다”

도시 계획 단계에서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은 뒤, 나중에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엘리베이터를 추가하는 방식은 예산 낭비는 물론 공간의 효율성까지 떨어뜨립니다. 처음부터 ‘모두’를 고려하는 디자인 철학이 행정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약속

첫째, 모든 공공·대규모 민간 개발 시 ‘유니버설 디자인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처럼 ‘유니버설 디자인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겠습니다. 휠체어 회전 반경 확보 여부, 저시력자를 위한 대비색 가이드라인 준수, 영유아 동반자를 위한 편의시설 등을 설계 단계에서 엄격히 검증하여 장벽 없는 도시를 원천적으로 구현하겠습니다.

둘째, ‘유니버설 디자인 표준 가이드라인’을 전 분야로 확대하고 고도화하겠습니다.

단순한 물리적 경사로를 넘어 소리, 빛, 촉감, 인지 능력 등 다양한 감각을 고려한 ‘한국형 유니버설 디자인 표준’을 확립하겠습니다. 직관적인 픽토그램 배치, 고대비 바닥 안내선, 감각 친화적 조명 시스템 등을 표준화하여 길 찾기가 쉬운 도시, 정보 소외가 없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 유니버설 디자인 상시 점검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일자리보장제’와 연계하여, 장애인과 노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점검단을 구성하겠습니다. 지자체는 ‘지역재투자기금’을 활용해 즉각 보수하는 능동적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② 다양한 가족과 시민

- 생활동반자 인증제 도입
- 이주민도 우리 동네 주민
- 지역사회 포용 통계 공식화 - 성소수자, 이주민 등

생활동반자 인증제 도입

현황

“수술 동의서 앞에서 멈춰선 10년 지기 동반자의 손”

함께 살며 서로의 생계를 책임지고 아픔을 돌봐온 사이라 해도,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니면 병원에서 ‘보호자’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긴급한 수술이 필요한 순간, 연락도 닿지 않는 먼 친척을 기다려야 하거나 동반자가 중환자실 면회조차 거부당하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공공주택이라는 사다리는 ‘정상가족’에게만 허락됩니다”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은 여전히 혼인과 혈연 중심입니다. 함께 살기로 약속한 비혼 커플, 서로 의지하는 노인 친구들, 형제자매 가구 등은 공공임대주택이나 신혼부부 특공 등의 혜택에서 철저히 배제됩니다.

“가족의 형태는 변했는데, 법은 20세기 유교 국가에 멈춰 있습니다”

2026년 현재 1인 가구와 비친족 가구의 비중은 이미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체계는 여전히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갇혀, 실제 서로를 돌보고 있는 수많은 ‘시민적 동반자’들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습니다.

약속

첫째, ‘생활동반자 인증제’를 도입하겠습니다.

혼인이나 혈연이 아니더라도 성인 두 사람이 상호 합의하에 결합하여 함께 살기로 계약한다면, 이를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는 ‘생활동반자 제도’를 조례로 도입하겠습니다.

둘째, 의료·돌봄 현장에서 ‘보호자 지정 및 결정권’을 지자체에서부터 보장하겠습니다.

지역 의료원과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 운영지침에 ‘환자 지정 보호자’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지역 요양시설과 장애인거주시설 등 보호자 면회 권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모든 공공주택 입주 자격에서 ‘비친족 가구’ 차별을 철폐하겠습니다.

SH 공공주택 공급 시 적용되는 ‘가족’의 범위를 생활동반자까지 넓히겠습니다. 비혼 동반자 가구도 신혼부부와 동등한 배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공동체 돌봄이 가능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넷째, 상담·법률 지원과 입법 추진을 함께 수행하겠습니다.

사전유언·연명의료 사전결정·후견인 지정 등 시민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법률 정보와 작성 지원을 생활동반자·다양한 가족·1인가구에게 우선 무상 제공할 것입니다.

이주민도 우리 동네 주민

현황

“노동력은 필요하지만 ‘사람’은 환영받지 못하는 모순”

이주노동자 없이는 농어업·제조업·돌봄 현장이 작동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이동 제약과 비인간적 생활환경, 사회적 임금으로 포장된 저임금에 묶여 있습니다.

“복지의 문턱에서 멈춰선 이주민의 생존권”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똑같이 내면서도 재난지원금 같은 보편적 복지에서 제외 되는 일이 반복 되고, 미등록 이주민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범죄 피해를 입어도 신고하지 못하는 사각 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부처마다 따로 노는 행정, 이주민은 길을 잃습니다”

비자는 법무부, 고용은 고용노동부, 가족 지원은 여성가족부, 농촌 일손은 농식품부. 국가 차원의 종합적 이민정책이 정비되기까지 기다리는 동안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이주민은 일상의 권리를 누리지 못합니다.

약속

첫째, 자치구별 ‘이주민 인권 통합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비자·노동·복지·교육·법률 등 이주민이 받아야 할 모든 도움이 한 창구에서 이루어지는 이주민 인권 통합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다국어 상담, 한국어 교육, 노동·임금 체불 법률 지원, 의료 동행,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보호, 자녀 학교 안내, 긴급 복지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할 것입니다.

둘째, ‘거주를 기준으로 한 자치단체 복지’를 보장하겠습니다.

국적이 아니라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복지를 재설계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차원에서 결정 가능한 복지(재난 지원금, 아동 수당, 청년 지원, 무상 급식, 자치구 임대주택 입주 자격, 무료 의료 지원 등)에 대해 국적 기준이 아닌 거주 기준으로 차별 없이 지급하겠습니다.

셋째, 이주민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우리 동네에서 먼저 지키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를 제개정해 이주민 아동·청소년이 국적·부모의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우리 동네에서 누려야 할 권리를 명시하겠습니다. 이주배경 청소년 전담 상담사·다문화 학습 지원·또래 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이주아동이 한국 사회에서 자기 정체성과 미래를 자신 있게 그럴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사회 포용 통계 공식화 - 성소수자, 이주민 등

현황

“기록되지 않는 삶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머무릅니다”

현재의 국가 통계는 이분법적 성별(남/녀), 국적(한국인/등록 외국인), 가족(혈연/혼인)이라는 좁은 틀에 갇혀 있습니다. 성소수자, 미등록 이주민, 비친족 공동체 등은 통계에 반영되지 않아 후순위로 밀려납니다.

“공식화되지 않은 정보는 힘이 없습니다”

일부 민간 단체의 조사 결과가 있지만, 국가와 지자체가 공인한 통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제도적 근거로 활용되지 못합니다. 시민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첫걸음은 바로 ‘공식 통계’의 칸을 만드는 일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약속

첫째, 지자체 주거·복지 실태조사에 ‘다양한 성정체성 및 가족 형태’ 항목을 신설하겠습니다.

단순히 ‘남/녀’로만 구분하던 성별 항목을 다원화하고, 혼인 여부 대신 ‘실질적 동거 및 돌봄 관계’를 묻는 항목을 추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성소수자 가구나 비친족 공동체의 규모와 주거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맞춤형 공공주택 보급과 돌봄 지원의 근거로 삼겠습니다.

둘째, 미등록 이주민을 포함한 ‘지역사회 포용 통계’를 작성하겠습니다.

체류 자격과 상관없이 우리 동네에 거주하는 모든 이주민의 인구 구조와 노동 환경을 조사하겠습니다.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되, 통계적 수치만 추출함으로써 감염병 관리, 아동 기본권 보장, 노동권 보장을 위한 행정 로드맵을 수립하겠습니다.

셋째, 매년 ‘지역별 평등지수’를 발표하고 공표하겠습니다.

혐오 사건 발생 건수, 소수자 고용률, 차별금지조례 및 인권조례 준수 여부 등을 지표화하여 각 지자체의 성평등 및 인권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해당 통계를 바탕으로 성적이 저조한 기초 자치단체에는 ‘집중 개선 예산’을 배정하고, 우수한 자치단체에는 포상을 하겠습니다.

③ 동물권

- 동물권 보장 및 동물학대 신속 대응
- 공공 동물병원 및 동물의료공제회
- 보편적 채식권 보장

동물권 보장 및 동물학대 신속 대응

현황

“물건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처벌은 여전히 재물손괴 수준입니다”

민법 개정 논의가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 현장에서 동물의 지위는 위태롭습니다. 잔혹한 동물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지만,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칩니다.

“기후위기와 서식지 파괴, 동물들에게는 생존의 절벽입니다”

인간 중심의 개발로 인해 수많은 야생동물의 터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남방큰돌고래와 같은 멸종위기종은 오염된 바다와 해상 개발로 인해 멸종의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동물의 생존권은 이제 자선이 아닌 ‘정의’의 문제입니다.

“공장식 축산과 유기 동물 문제, 사회적 비용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대량 생산을 위한 비인간적인 축산 환경은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전염병의 온상이 됩니다. 도시에서 매년 버려지는 십만여 마리의 유기 동물들은 지자체의 행정적 부담을 넘어 우리 사회의 생명 감수성에 깊은 상처를 내고 있습니다.

약속

첫째, 동물권 조례를 제정하여 동물을 생명으로 존중하는 원칙을 지역 행정 전반에 적용하겠습니다.

자치단체는 동물을 단순한 재산이 아닌 보호 대상 생명으로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동물보호·유기 방지·입양 정책 등 행정 전반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동물학대 소지가 있는 행사 대신 동물과 공존하는 문화행사로 전환하고, 지자체가 후원 및 예산을 지원하는 모든 행사에서 동물 학대 요소를 배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동물 학대 대응 전담팀을 두고 학대 발생시 즉시 분리 보호하겠습니다.

동물학대 전담 공무원, 수의사, 경찰협업팀으로 구성하여 동물 학대 신고 접수시 즉시 현장 출동 및 임시 격리 하겠습니다. 보호시설과 연계한 긴급 보호 공간도 확보하겠습니다.

공공 동물병원 및 동물의료공제회

현황

“죽음의 문턱에서 이윤을 남겨야 하는 위탁 보호소의 비극”

전국 유기동물 보호소의 상당수가 지자체의 예산을 받아 민간이 위탁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이윤을 남겨야 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열악한 환경, 부실한 식단, 그리고 공간 확보를 위한 안락사가 목인되고 있습니다.

“부르는 게 값인 동물 병원비, 유기를 부추기는 ‘의료 빈곤’”

반려인구 1,500만 시대지만 동물 진료비는 여전히 표준화되지 않아 병원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민간 펫보험은 가입 조건이 까다롭고 보험료가 비싸며 보장 범위마저 좁아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동물권은 개인의 윤리를 넘어 사회적 안전망의 문제입니다”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사회는 결코 인간에게도 다정할 수 없습니다.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일은 민간의 자선에 기댈 것이 아니라, 공공 인프라와 시민 연대라는 두 개의 기둥으로 떠받쳐야 합니다.

약속

첫째, 모든 기초지자체에 ‘직영 공공 동물보호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전문 수의사와 행동 교정사가 상주하며, 구조된 동물의 치료와 사회화 교육을 병행하여 ‘안락사 0%’를 목표로 하는 선진형 입양 플랫폼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둘째, 시민과 지자체가 매칭하는 ‘동물의료공제회(협동조합)’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비싼 상업용 민간 보험 대신, 반려인들이 매월 일정액을 모으고 지자체가 예산을 일부 지원하는 ‘동물의료공제회(반려동물 의료 생활협동조합)’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이윤을 남기지 않는 공제회를 통해 예방접종, 중성화, 주요 질병 수술비를 투명하고 저렴하게 해결하는 ‘반려동물 무상의료’의 기초를 닦겠습니다.

셋째, 동네마다 ‘공공 동물보호센터’와 연계된 ‘공공 동물병원’을 지정하겠습니다.

의료공제회에 가입하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반려동물을 위해 ‘지자체 지정 공공 동물병원’을 운영하겠습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동물들에게 필수 진료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경제적 위기가 동물의 생명 포기로 이어지는 비극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보편적 채식권 보장

현황

“기후위기의 주범 공장식 축산, 밥상 위의 탄소는 가려져 있습니다”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전 세계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육류 중심의 식습관은 환경 파괴뿐만 아니라 개인의 건강 불평등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공 급식에서 채식주의자는 ‘유난스러운 소수’가 됩니다”

학교, 군대, 직장 등 급식 현장에서 채식 선택권은 여전히 미비합니다. 신념, 종교, 건강상의 이유로 고기를 먹지 않는 시민들은 급식을 포기하거나 맨밥만 먹어야 하는 인권 침해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비싼 비건 식품, 경제적 장벽이 생태적 실천을 막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먹거리를 선택하고 싶어도, 시중의 대체육이나 비건 가공식품은 일반 제품보다 훨씬 비쌉니다. 채식이 ‘있는 자들의 여유’가 아닌 ‘시민의 보편적 권리’가 되어야 합니다.

약속

첫째, 모든 공공 급식 기관에 ‘채식 선택권 및 주 1회 채식 식단’을 의무화하겠습니다.

학교, 군대, 관공서 등 공공 급식 현장부터 ‘채식 옵션’을 항상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 기관 ‘주 1회 채식의 날’을 전면 실시하고, 이를 공공기관 평가지표에 반영하겠습니다.

둘째, 농가와 기업의 ‘대체 단백질 및 식물성 식품 전환’을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공장식 축산에서 친환경 축산이나 식물성 작물 재배로 전환하는 농가에 ‘생태 전환 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로컬 푸드 기반의 비건 스타트업과 대체육 연구 개발에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④ 문화 다양성

- 실험예술 공공투자 및 비주류예술 할당제
- 지역 예술청 설립과 창작노동권 보장
- 지역 예술인 창작 활동 보장 수단

실험예술 공공투자 및 비주류예술 할당제

현황

“승자독식의 문화 시장, 비주류 예술은 고사 직전입니다”

K-컬처가 세계를 호령하는 사이, 인디 음악, 실험 연극, 독립 영화 등 생태계의 뿌리를 담당하는 비주류 기초 예술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습니다. 스크린과 무대는 거대 자본이 독점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실험적 작품들은 대중과 만날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관객 수와 수익률이 예술의 유일한 성적표가 되었습니다”

공공 문화 지원 사업조차 ‘몇 명이 왔는가’, ‘얼마나 화제가 되었는가’라는 정량적 KPI(핵심성과 지표)에 갇혀 있습니다. 창작자들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 대중의 입맛에 맞춘 뻔한 작품만 만들어내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실패는 곧 창작의 끝을 의미합니다”

한 번의 상업적 실패나 대중의 외면은 창작자에게 곧 생계의 위협이자 커리어의 단절로 이어 집니다. 창작과 예술에서 실패가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약속

첫째, 결과와 숫자를 묻지 않는 ‘실험예술 공공투자제(블라인드 펀딩)’를 도입하겠습니다.

흥행이나 결과물 제출을 조건으로 달지 않는 ‘과정 중심 공공투자제’를 신설하겠습니다. 기획의 참신함과 실험성만을 평가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설령 최종 결과물이 대중적 실패로 끝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둘째, 공공 문화시설 및 지원 예산에 ‘비주류·독립예술 30% 할당제’를 의무화하겠습니다.

국공립 극장, 지역 문화회관, 공공 갤러리의 연간 대관 일수와 지자체 문화 예술 예산의 최소 30%를 독립 영화, 인디 밴드, 신진 작가 등 비주류 예술에 의무적으로 할당하겠습니다. 거대 자본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낯설고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창작자의 재도전을 돕는 ‘예술인 재도전 연대 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상업적 실패나 뜻밖의 재난으로 위기에 처한 창작자들이 예술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기금을 만들겠습니다. 긴급 생계 대출, 다음 작품을 위한 기획비 선지원 등을 예술인 생태계를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지역 예술청 설립과 창작노동권 보장

현황

문화의 ‘산업화’ 편중과 공공성 약화

2026년 예산은 AI 전환, 콘텐츠 펀드 등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의 성장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화가 마땅히 가져야 할 공공성과 창작자의 노동권, 윤리적 안전망에 대한 고민은 후순위로 밀려나 있습니다.

‘지속’이 아닌 ‘소비’ 중심의 예산 구조

청년문화복지카드, 청년문화예술패스 등 자치단체별 향유·관람 지원은 늘었으나, 정작 창작의 뿌리가 되는 기초 예술과 실험 예술에 대한 투자는 미비합니다. 이는 단기적인 문화 소비를 촉진할 뿐, 장기적인 창작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선택과 집중에 따른 ‘문화 양극화’ 심화

정부 주도의 브랜드화(K-컬처, K-콘텐츠) 전략으로 인해 주류 장르는 수혜를 입지만, 지역문화 기반 창작이나 비주류·실험 예술은 정부 공모를 수주하기 위한 경쟁에 매몰되거나 정책의 주변부로 밀려나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약속

첫째, 예술인이 직접 결정하는 문화예술 민·관 거버넌스를 바로세우겠습니다.

광역지자체에 ‘예술청’을 설립·개편하여 예술인·창작자·기획자 등이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예술청을 공간 제공 같은 예술인 복지의 민원창구가 아니라, 예산 편성, 사업 선정, 평가까지 참여하는 실질적 의사결정 기구로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분야별·세대별 대표성을 반영한 위원 구성을 제도화하고, 공모·추천·추첨을 병행해 특정 분야에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 문화재단·행정조직과의 역할을 재조정해, 예술청이 지역 문화예술 정책과 권리 보장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문화예술을 ‘노동’으로 인정하고, 표준계약과 권리 보호를 제도화하겠습니다.

예술인을 고용하는 자치단체 사업 전반에 표준계약서 사용과 생활임금 준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술청이 장르별 특성을 반영한 계약 기준을 마련하고, 실제 현장에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점검 및 권리구제 전담 기능을 설치하여, 계약 위반·대금 미지급·저작권 침해 등 분쟁 발생 시 상담, 조정, 공공 지원 배제 권고까지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평가와 선별 중심의 예술인 복지를 권리 기반의 보편적 사회보장 체계로 재편하겠습니다. 예술청이 중심이 되어 장르·경력·활동 형태의 다양성을 반영한 예술인 인정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치단체가 지역 예술인 데이터를 관리하고, 이를 근거로 한 맞춤형 지원 및 사회보장 연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역 예술인 창작 활동 보장 수단

현황

“일회성 이벤트에 증발하는 수백억의 혈세”

지자체의 문화 예산 상당수는 여전히 지자체장의 치적을 위한 대규모 축제나 유명 연예인 초청 행사에 낭비되고 있습니다. 화려한 폭죽이 꺼지고 나면 동네에는 쓰레기만 남을 뿐, 지역 주민의 문화적 갈증은 전혀 해소되지 않는 속 빈 강정 행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투잡, 쓰리잡에 내몰려 창작을 포기하는 동네 예술인들”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인디 뮤지션, 연극인, 청년 작가들은 심각한 생계난에 시달립니다. 지역의 소규모 공연장과 갤러리는 임대료를 버티지 못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떠난 도시에 문화가 싹틀 리 만무합니다.

“소비할 곳도, 배울 곳도 없는 ‘문화 소외 도시’”

어린이들이 악기를 배우거나, 직장인들이 퇴근 후 취미 미술을 즐길 만한 공공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문화는 일상에서 호흡해야 하는 기본권이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는 소수만 대도시로 나가 문화를 소비하는 양극화가 굳어지고 있습니다.

약속

첫째, 지역 예술인에게 ‘창작 활동 보장 수단(문화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투잡, 쓰리잡을 뛰느라 붓을 쥐고 마이크를 놓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창작 활동을 증명한 예술인에게 지자체가 매월 ‘창작 활동 보장 수단’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방어하겠습니다. 이 수당은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다시 동네 상권으로 스며드는 선순환 경제를 만들 것입니다.

둘째, 빈집과 유휴 공공시설을 ‘마을 문화 창작소’로 전면 전환하겠습니다.

앞서 제안한 ‘유휴시설 공공전환’ 정책을 문화 분야로 확장하겠습니다. 폐교, 빈 창고, 낡은 관공서를 리모델링하여 청년 예술인들에게는 무상 작업실로 제공하고, 주민들에게는 마을 예술 학교 및 전시관으로 개방하겠습니다. 예술가와 주민이 한 공간에서 만나 문화를 생산하는 지역 문화의 심장을 박동하게 하겠습니다.

셋째, 소모성 축제 예산을 삭감하고 ‘지역문화 사회연대경제조직’ 공공조달을 의무화하겠습니다.

관 주도의 일회성 행사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습니다. 대신 그 예산으로 지역 예술인들이 구성

한 ‘문화 사회연대경제조직’의 공연과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각급 학교, 복지관,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조달 지침을 바꾸겠습니다. 외부 기획사가 예산을 싹쓸이하는 구조를 깨고, 지역사회 예술 생태계의 자생력을 키우겠습니다.

지역 공동체 미디어 지원

현황

“동네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미디어 생태계는 중앙 거대 매체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지역과 동네의 목소리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풀뿌리 지역언론과 마을미디어는 만성적인 재정난과 인력난에 시달리고, 공동체 라디오는 운영조차 버거운 실정입니다.

“미디어 현장에 표준계약서는 종이 위에만 있습니다.”

미디어 현장의 노동조건도 위태롭습니다. 방송·영상 제작 현장에는 ‘무늬만 프리랜서’ 계약이 만연하고, 표준계약서는 여전히 종이 위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유료방송 설치·수리 기사처럼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갇힌 노동자들의 권리는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습니다.

“여전히 미디어 약자가 존재합니다.”

장애인·이주민·정보취약계층의 미디어 접근권 또한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 정보조차 수어·자막·다국어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키오스크 확산으로 디지털 격차는 오히려 벌어지고 있습니다.

약속

첫째, 지역·공동체 미디어를 시민의 자산으로 키우겠습니다.

시민이 직접 지역언론을 선택해 지원하는 미디어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지자체 광고의 지역언론 의무 배정 비율을 설정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미디어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공동체 라디오의 신규 운영과 재난방송 기능을 강화해, 동네의 목소리가 동네에서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미디어 노동자의 권리를 원청인 서울시가 책임지겠습니다.

지자체 발주 방송·미디어 사업에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미디어 노동자를 위한 법률·노무 상담을 상시 운영하고, 유료방송 설치·수리 노동자의 다단계 하도급 실태를 정기 점검하겠습니다.

셋째,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정보에 닿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모든 공공방송·홍보영상에 수어통역·자막·화면해설을 의무화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음성 공공정보 제공과 다국어 정보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02 대상별 공약

아동 — 걱정 없이, 아이 키울 수 있는 지역

청소년 — 청소년이 시민으로 존중받는 지역

청년 — 주거에서 꿈까지, 나답게 살 수 있는 지역

여성 — 성평등이 일상이 되는 지역

중장년 — 인생 2막을 든든하게 시작하는 지역

어르신 — 존엄한 노후를 누리는 지역

장애인 — 자립과 권리로 살아가는 지역

성소수자 — 누구도 지워지지 않는 지역

이주민 — 국적이 아닌 거주로 시민이 되는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 빛 걱정 없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

농어민 — 농어민이 주인되어 기후를 지키는 농어촌

예술인 — 예술도 노동, 창작자도 시민인 지역

아동 - 걱정 없이, 아이 키울 수 있는 지역

1. 임신·출산 등 생애 초기 지원

- 지역 응급 출산 대응 시스템 구축 (지정 병원과 의사 확보)
- 지역 보건소 임신·출산 원스톱 상담창구 설치
- 지역 공공 산후조리원 1개소 이상 확충
-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 임신·출산 의료비 지자체 추가 지원
- 임신부·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사업
- 지역 산후조리경비 지원 대상·금액 확대

2. 아동 건강 및 의료 보장

-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병원비 연 100만 원 상한제(초과분 지자체 부담)
- 아동 주치의·치과주치의 등록제(연 2회 무상 검진·상담)
- 지자체 어린이 재활병원·아동전문병원 설립
- 권역별 소아 응급·야간 진료센터 24시간 운영체계 구축
- 지역별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확대 지정·관리

3. 안심 보육 및 교육 환경

-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50% 확충
- 아파트 의무보육시설 국공립 전환 의무화 조례 제정
- 보육교사 처우개선수당 국공립 유치원 교사 수준 인상
-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기준 강화 및 추가 인건비 지원
- 자치구별 아동 심리 전문가 어린이집 정기방문 ‘금쪽이 보육’ 실시
- 우리동네키움센터·아이돌보미·장난감도서관 ‘돌봄 3종 세트’ 확충
- 지역별 공립형 방과후센터·아동센터 설립
-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권역별 설치

4. 아동 수당 확대

- 아동수당 만 18세까지 지급 확대
- 아동수당 지급액 단계적 인상

5. 아동 안전 및 인권 보호

- 보육시설 인권침해 즉시 대응 ‘우리지역 보육 119’ 제도 도입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20건당 1명으로 충원

- 지역별 학대피해아동 쉼터 25개소 설치
- 지자체 산하 아동사망검토(CDR) 자문기구 운영
- 공공입양 지원체계 구축 및 입양가정 사후관리 강화
- 방사능·GMO 없는 친환경 로컬푸드 학교급식 전면 시행
- 권역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 노키즈존 금지, 행정 제재 근거 마련
- 일정 규모 이상 상업시설 아동보육시설 의무 설치
- 어린이 안전 놀이터 자치구별 정비·확충
- 야간보육시설 아동전문간호사·가정전문간호사 배치
- 아동 과도한 학습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6. 취약계층 및 다양한 아동 지원

- 미등록 이주아동 의료·교육·돌봄 지원체계 구축
- 다문화가정 자녀 이중언어 보조교사 학교 배치 확대
- 자립준비청년 기초자산 5,000만 원 지급 및 전담지원센터 설치
- 가족돌봄청소년(영 케어러) 실태조사 및 가사·학업·정서 종합지원
- 이주배경 아동 보편적 출생등록제

청소년- 청소년이 시민으로 존중받는 지역

1. 학생인권 및 학교 민주주의

- 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권고조항의 강제조항 전환
- 학생인권침해 신고센터 운영 및 정기 점검 의무화
- 학교운영위원회 학생위원 1/3 이상 배치 의무화
- 편법적 0교시·야간 강제학습 금지 조례 시행
- 학교 복장 규제 폐지 및 복장 자율화
- 교사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의무 확대
- 미션스쿨 종교강요·혐오발언 감시 및 대체과목 미보장 시 보조금 삭감

2. 청소년 참여 및 시민역량

- 시의회 산하 청소년의회 이관 및 의안발의·예산심의 권한 부여
- 지역별 청소년참여위원회 의무 설치 및 실질 권한 강화
- 지자체 청소년참여예산제 실효성 강화
- 아동·청소년 관련 위원회 청소년 위원 일정 비율 이상 의무 참여
- 위원회 등 교외 시민활동 학교 출석 인정
- 학생회 예산 자율권 보장 및 확대
- 학생회 선거 공정성 확보 가이드라인 마련
- 토론·모의의회·정책제안 중심 ‘실천형 시민교육’ 도입
- 노동·인권·성평등·차별금지 통합 시민교육 정규과정화
- 학교 밖 청소년 시민교육 접근권 보장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

3. 청소년 노동권

- 자치구별 청소년 노동권 보호센터 설치
- 노무사·변호사 연계 무료 노동상담 상시 운영
- 학교 밖 청소년 전용 노동상담 접근창구 마련
- 고용노동부 협력 청소년 전담 근로감독관 지정
- 프랜차이즈·편의점·카페 등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장 집중 점검
- 카카오톡·문자 기반 청소년 노동 신고 원스톱 시스템 구축
- 신고-상담-조사-구제 통합 연계 체계 운영
- 중·고교 및 학교 밖 청소년 실습형 노동권 교육 의무화
- 근로계약서·임금계산·신고방법 실전 중심 교육 도입
- 반복 노동권 침해 사업장 공개 및 청소년 고용 제한

- 특성화고 현장실습 서울시 전담 모니터링단 운영

4. 청소년 이동권

- 만 6~18세 청소년 대중교통 무상화(연령별·노선별 단계적 시행)
- 따릉이 등 공공자전거 청소년 무상 이용 확대

5. 청소년 건강 및 복지

- 어린이·청소년 병원비 연 100만 원 상한제
-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바우처 월 3만 원 보편 지급
- 공공기관 화장실 월경용품 무상 비치
- 아동·청소년 주치의·치과주치의 등록제
- 남녀 청소년 자궁경부암(HPV) 백신 무료 접종
- 청소년 마음건강 전문상담사 학교 상주 배치
- 자치구별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지원센터 설치

6. 가정 밖 청소년 주거·자립

- 인구수 비례 청소년 쉼터 신설 기준 마련
- 쉼터 미이용 청소년 주거복지 지원체계 구축(LH·SH 전세임대 연계)
- 입소 청소년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 본인 동의 없는 원가정 복귀 조치 금지
- 남성청소년 중장기쉼터 확충 및 이용권 보장
- 청소년 쉼터 운영비 지원 확대,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인력 확충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입시교육 외 다양한 프로그램 확충(육체노동 편중 탈피)
- 당사자 청소년 운영 참여형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전환
- 지역사회 연계 센터 밖 학습 체계 구축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전담인력 확충

8. 청소년 성소수자

- 공공시설 ‘모두를 위한 화장실’ 설치 가이드라인 마련 및 의무화
-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설치
- 다양한 정체성 포괄 성소수자 청소년 쉼터 개소
- 미션스쿨 성소수자 혐오교육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성소수자 정체성 포괄 포괄적 성교육 도입

- 지정성별 교복 착용 강요 금지, 과도한 성별 정보 취합 금지
-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강화
- 학교 내 성폭력(스쿨미투) 피해 청소년 통합지원센터 권역별 설치

9. 이주배경 청소년

-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 의료·교육·돌봄 지원체계 구축
- 재학 중인 모든 학생 급식비 포함 교육비 지원 조례 제정(국적·체류자격 무관)
- 시설 보호 이주아동 생계비 기초수급자 수준 지원
- 아동복지사업 사례관리 대상에 외국국적 아동 포함
- 이주배경 청소년 전담 지원센터 자치구별 확충
- 검정고시·취업교육 등 사회진출 연계 강화
- 다문화 청소년 이중언어 학습지원 및 진로상담 사업 확대

청년 - 주거에서 꿈까지, 나답게 살 수 있는 지역

1. 주거 — 청년 주거권 보장

- 빈집 활용 ‘천원주택’(월 3만 원) 공급 확대
- 청년 공공임대주택 확대
- 민간임대 거주 청년 월 20만 원 주거수당 최대 3년 지급
- 최저주거기준 미달 청년 가구 ‘안심 집수리 바우처’ 지원
- 임대차 계약서 검토·동행 ‘안심주거계약 시작’ 서비스 운영
- 청년 공공임대주택 태양광 패널 필수 설치
- 대학 기숙사 수용률 30% 의무화

2. 일자리 — 지역 일자리보장제

- 만 15~34세 구직 청년 ‘지역 청년일자리보장제’ 도입
- 마을 디지털 동행지원단 청년 일자리 운영
-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 청년 인력 양성·고용
- 지역 돌봄 코디네이터 등 사회적 가치 중심 맞춤형 일자리 제공
- 지역 공공기관 청년고용할당 5% 의무화
- 채용 빙자 아이디어 착취 금지 및 면접 응시자 최저 교통비 지급 조례 제정

3. 심 — 마음 건강과 자기돌봄

- 청년 심리상담 무료 바우처 확대
- 자치구별 청년마음건강센터 확대
- 청년 마음 건강 주치의제 도입
- 영케어러·고립은둔 청년 ‘자기돌봄비’ 지원 대상 확대
- 고립은둔 청년 사회적 관계망 회복 프로그램 운영
- 만 15~34세 자발적 퇴직 청년 재충전 지원금 신설

4. 밥 — 먹거리 기본권

- ‘천원의 집밥’ 아침 전면 지원 및 점심·저녁 확대(지정 식당 1,000원 식사)
- ‘3,000원 김치찌개’ 지역 내 착한식당 및 사회적경제 식당 지원·연계
- 식당 부재 지역 로컬푸드 반찬 꾸러미·식재료 지원
- 대체육·저탄소 식단 포함 청년 식단 다양화

5. 꿈 — 자산 형성과 부채 탕감

- 청년사회상속제(만 20세 청년에게 3,000만 원 지급, 자립준비청년은 5,000만원)
- 청년신용회복기금 조성 및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
-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학자금 부채 전액 탕감
- 소득 무관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 시행

6. 생활 — 1인 가구·생활동반 지원

- 청년 1인 가구 종합지원센터 설치
- 생활동반자 등록제 도입(혈연·혼인 외 동거가구 행정서비스 보장)
- 청년 1인 가구 안전·방법 인프라 강화(스마트초인종, 안심귀가 등)
- 청년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사업 확대
- 청년 사회적 관계망 형성 커뮤니티 공간 권역별 조성

여성 - 성평등이 일상이 되는 지역

1. 노동·경제 —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평등한 일터

-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성평등 임금공시제 의무 시행
- 지자체 발주사업 성평등 임금격차 공시기업 우대(공공조달 가점)
- 공공기관 채용 성비·점수 공개 의무화
- 사회서비스원 돌봄노동자 임금 준공무원 수준 인상
-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권역별 설치
- 여성 비정규직 차별시정 전담 상담창구 운영
-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센터 기초지자체별 확충

2. 일·생활 균형 — 슈퍼우먼방지 지역 모델

-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자동육아휴직제 시범 도입
-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아빠 육아휴직 3개월 할당제 시범 시행
- 특수고용·플랫폼·자영업 종사자 지역형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 가족돌봄휴가 사용 노동자 지원금 지급
-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확대
-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지역 인증 및 인센티브 제공

3. 여성 안전 — 젠더 폭력 근절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강화
- 다편익·불법촬영물 삭제 전담 인력 확충
- 기초지자체별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설치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쉼터 확충 및 운영비 지원 확대
-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적용 여성안심주택 공급
- 1인 가구 밀집지역 안심벨·무인택배함·홈 방문 서비스 확대
- 안심귀가 동행서비스 24시간 운영체계 구축
- 젠더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의료 지원 통합 원스톱 서비스

4. 건강·재생산 권리

-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기관 지정 및 시술비 지원
- 미프진 등 유산유도약물 접근성 보장 지역 의료체계 구축
-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바우처 월 3만 원 보편 지급
- 공공기관·공중화장실 월경용품 무상 비치

- 출산 가정 100만 원 상당 마더박스 지급
- 임신부·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사업 전 자치구 확대
- 여성건강증진센터 기초지자체별 설치(생애주기별 건강관리)
- 갱년기·완경기 여성 건강지원 사업 신설

5. 정치적 대표성 및 거버넌스

- 지자체 성평등정책관(부단체장급) 신설 및 성주류화 컨트롤타워 강화
- 지자체 모든 정책 성별영향평가 의무 시행 및 결과 공개
- 지자체 산하 위원회 여성 위원 40% 이상 의무 참여
-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강화 및 시민감시 체계 구축
- 기초지자체 성평등정책 전담부서 설치 의무화

6. 다양한 여성의 삶 지원

-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시범 도입
-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기초지자체별 설치
- 지역형 생활동반자 등록제 도입
-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용 쉼터 확충 및 통번역 서비스 24시간 운영
- 이주여성 자립지원센터 권역별 설치
- 여성장애인 전담 산부인과 지정 및 의료비 지원
-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홈헬퍼 지원사업 기초지자체별 확대
- 비혼·1인 가구 여성 종합지원센터 설치
- 북한이탈여성 자립·정착 지원 프로그램 강화

중장년 - 인생 2막을 든든하게 시작하는 지역

1. 고용 안정 및 인생 2막 일자리

- 근로시간 단축형 정년연장 모델 시범 도입(세대 상생형 청년 채용 연계)
- 산업전환(녹색·디지털) 위기 노동자 1:1 맞춤형 전직 교육 지자체 책임제
- 은퇴자 숙련 환원 '지혜 시간 은행' 운영(지역 중소기업·청년 창업가 매칭, 지역화폐 보상)
- 경력단절 여성 인생이모작 평생교육 프로그램 전문화
- 새일센터 재취업 후 사후관리 통합지원 강화
- 50+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자치구별 설치
- 중장년 창업·소상공인 통합지원 플랫폼 운영

2. 생활비 경감 및 주거 안정

- 중장년 1인 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 중장년 가계부채 통합상담 및 신용회복 지원센터 운영
- 자영업자·지역가입자 사회보험료 지자체 추가 지원
-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지원 강화

3. 노동시간 주권 및 일·생활 균형

-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주 4일제 시범 도입
- 지자체 발주사업 주 4일제 도입 기업 우대(공공조달 가점)
- 생애주기별 노동시간 선택제 공공기관 시범 시행
- 10년 근속 노동자 1개월 유급 안식월제 공공기관 도입
-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인증 및 인센티브 확대
- 지자체 노동시간 단축 컨설팅 무료 지원

4. 건강 보장 및 가족 돌봄

- 갱년기·완경기 건강지원 사업 신설
- 중장년 정기 건강검진 항목 지자체 추가 지원
- 가족돌봄휴가 사용 노동자 지자체 지원금 지급
- 고독사 고위험 중장년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회복 사업

5. 사회참여 및 관계망

- 중장년 자원봉사·사회공헌 활동 통합 플랫폼 운영
- 중장년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확대

- 중장년 동아리·문화예술 활동 공간 권역별 조성
- 중장년 멘토단 운영(청년 창업·진로 멘토링 연계)

어르신 - 존엄한 노후를 누리는 지역

1. 노후 소득 보장

- 지자체 어르신 생활안정수당 추가 지급
- 기초연금 사각지대 어르신 발굴 및 신청대행 서비스 확대
- 저소득 어르신 공공요금·통신비 감면 통합지원
- 참여소득 및 지역연금 도입
- 어르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구제 통합지원센터 운영

2. 공공 돌봄 및 보건의료

- 어르신 병원비 연 100만 원 상한제 단계적 적용
- 어르신 건강주치의 시행
-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약값 본인부담금 지자체 지원
- 75세 이상 어르신 가정방문 건강관리사업
- 국공립 장기요양시설 비중 30% 이상 확충
- 지자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 - 이동수당 등
- 요양보호사 2인 1조 근무제 단계적 도입
- 공공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시행
- 공공통합돌봄센터 설치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어르신 마음건강 상담사 권역별 배치
- 치매안심센터 자치구별 기능 강화

3. 노인 맞춤형 주거

- 의료·복지 서비스 결합형 공공실버주택 권역별 공급
- 저소득 어르신 실버임대료(주거수당) 지급
- 노인가구 낙상 방지 자가주택 개조비 지원 현실화
- 농어촌 독거노인 공동생활홈(그룹홈) 마을회관 리모델링 보급
- 고독사 예방 스마트 안부확인 서비스 전 자치구 확대
- 어르신 가구 안전점검·집수리 통합지원 사업 운영

4. 일자리 및 사회참여

- 어르신 경력연계형 지역일자리보장제 및 참여소득 실시
- 은퇴자 맞춤형 협동조합·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 고령노동자 다수 사업장 ‘고령노동자지원팀’ 설치 지원

- 지자체 50+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자치구별 설치
- 어르신 평생학습 프로그램 무상 운영 확대

5. 이동권 및 디지털 권리

- 어르신 대중교통 무상화
- 어르신 택시 바우처 지급
- 어르신 가정 와이파이 무료 보급
- 자치구별 어르신 디지털 지원센터 설치
- 키오스크·무인단말기 어르신 동행 ‘디지털 조력자’ 사업 운영
- 어르신 친화형 키오스크 공공시설 우선 도입
- 보행 약자 친화형 교통신호 체계(보행시간 연장) 확대

6. 인권 및 존엄한 노후

- 지자체 노인보호전문기관 증설 및 학대 대응 인력 확충
- 노인학대 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어르신 무료 법률·인권상담 통합창구 운영
- 죽음준비교육 프로그램 평생교육기관 운영 확대
- 공공병원 장례식장 ‘착한 장례식장’ 지정 및 반값 장례비 실현
- 무연고 어르신 공영장례 지원 강화
- 전통시장·복지관 주변 노인보호구역(실버존) 확대 지정
- 폭염·한파 시기 어르신 무더위·한파쉼터 운영 강화

장애인 - 자립과 권리로 살아가는 지역

1.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권리 보장 기반

- 지자체 장애인 복지예산 비중 단계적 확대 및 5년 로드맵 수립
- 지자체 장애인권리보장 조례 제정
- 장애인 권리침해 구제 전담 옴부즈만 설치
- 장애인 정책 당사자 참여위원회 의무 운영

2.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수립 및 시행
- 탈시설 자립정착금 지급액 인상 및 제도화
-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체험홈) 권역별 확충
- 장애인 지원주택 공급 확대(공공임대 결합형)
- 자립생활지원센터 기초지자체별 설치
- 시설 인권침해·비리 발생 시설 운영자격 박탈 기준 강화
-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사례관리 전담인력 배치

3. 활동지원 서비스 및 돌봄

- 최중증·발달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지자체 추가지원
- 활동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자체 보전
- 활동지원사 처우개선수당 지자체 추가 지급(이동수당·심야·주말 가산급여)
- 활동지원사 2인 1조 근무제 지자체 시범 도입
- 만 65세 도래 장애인 활동지원 연속성 지자체 보장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하루 8시간 보장

4. 노동권 및 소득 보장

-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률 4% 이상 단계적 상향
- 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신설 및 생활임금 지급
- 중증장애인 50% 이상 고용 지자체 출자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 장애인 직업훈련센터 자치구별 확충
- 지자체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 추가 지급
- 장애인 자영업·창업 지원 통합플랫폼 운영

5. 이동권 및 접근성

- 저상버스 의무도입 이행률 제고 및 지자체 보조금 확대
- 장애인 콜택시(특별교통수단) 법정 대수 2배 확충
- 광역이동지원센터 24시간 운영체계 구축 및 시·도 경계 간 이동 지원
- 유니버설 도시 디자인 조례 제정 및 대규모 개발 영향평가 의무화
- 공공시설 배리어프리(BF) 인증 의무화
- 키오스크·무인단말기 장애인 접근성 표준 지자체 발주사업 적용
- 보조공학기기 지원 대상·품목 확대
- 지하철 역사 엘리베이터 1동선 100% 확보 (해당 지자체)

6. 건강권

- 장애인 건강주치의·치과주치의 지원
- 권역별 공공재활병원·어린이재활병원 설립
- 장애인 보장구 지자체 추가 지원 및 내구연한 단축
- 장애인 정신건강 통합지원센터 권역별 설치
- 의료기관 장애인 의사소통 도우미 지원사업 확대

7. 교육권 및 평생교육

- 특수교사 법정 정원 100% 확보 교육청 협력 추진
- 통합교육 지원인력 학교 배치 확대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지자체 지원 강화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자치구별 설치
- 장애학생 방과후·돌봄 서비스 확대

8. 유형별·성별 맞춤 지원

- 장애여성 전담 산부인과 지정 및 의료비 지원
- 장애여성 임신·출산·양육 홈헬퍼 지원사업 자치구별 확대
- 발달장애인 평생돌봄체계 지자체 책임제 도입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제 지원 확대
- 정신장애인 동료지원센터 권역별 설치
-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복귀 주거·일자리 통합지원
- 시설 거주 장애인 참정권 보장 지자체 행정지원 강화

9. 정보접근권 및 재난안전

- 지자체 모든 공공방송·홍보영상 수어통역·자막·화면해설 의무화
- 선거 시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 행정지원

- 청각장애인 영상전화 통역서비스 24시간 운영
- 시각장애인 점자·음성 공공정보 제공 의무화
- 장애인 특성 반영 감염병·재난 대응 매뉴얼 수립
- 재난 시 장애인 1:1 대피지원 체계 구축

성소수자 - 누구도 지워지지 않는 지역

1.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

- 지자체 포괄적 차별금지 조례 제정
- 지자체 차별금지센터(평등센터) 설치 및 즉각 구제 절차 운영
- 지자체 인권옹호관 권한 강화 및 성소수자 사건 전담 대응
- 지자체 실태조사에 성적 지향·성별정체성 항목 신설
-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 성소수자 인권교육 의무화
- 지자체 혐오표현 대응 가이드라인 수립 및 모니터링

2. 트랜스젠더 권리

- 지자체 트랜스젠더 의료지원 사업 신설
- 트랜스젠더 친화 의료기관 지자체 지정·연계
- 지자체 트랜스젠더 취업·노동상담 전담창구 운영
- 공공시설 성중립 화장실 등 성중립 편의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마련
- 지자체 행정서식 불필요한 성별정보 수집 금지

3. HIV 감염인 건강권

- HIV 감염인 친화 의료기관 지자체 지정 및 진료 연계
- HIV 감염인 장기요양·돌봄 시설 지자체 지정·운영
- 보건소 및 의료인 HIV 감염인 차별예방 교육 의무화
- HIV 감염인 무료 법률·인권상담 통합창구 운영

4. 지역사회 포용 및 문화

- 퀴어문화축제 등 성소수자 문화행사 지자체 공식 후원
- 인권친화기업 지자체 인증제 도입 및 인센티브 제공
- 지자체 문화·체육 행사 성소수자 차별 없는 운영 가이드라인 수립
- 지자체 위원회 성소수자 당사자 참여 보장
- 성소수자 커뮤니티 공간 권역별 조성 지원
- 지자체 성소수자 정책 자문 거버넌스 운영

이주민 - 국적이 아닌 거주로 시민이 되는 지역

1. 인권 보장 및 행정 기반

- 지자체 인종·국적 차별금지 조례 제정
- 자치구별 이주민 인권 통합센터 설치
- 이주민 사건 전담 인권옹호관 운영
- 지자체 거주 기준 복지서비스 적용 원칙 확립(국적 및 체류기준 무관)
-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 다문화·인권 교육 의무화
- 지자체 위원회 이주민 당사자 참여 보장
- 다국어 행정서비스 24시간 통번역 지원체계 구축

2.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 자치구별 이주노동자 권익보호센터 설치
- 이주노동자 무료 법률·노무 상담 24시간 운영
- 다국어 노동권 신고·구제 원스톱 시스템 구축
-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 노동조건·숙식기준 점검 강화
-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다국어 교육 의무화
- 농어촌·영세사업장 이주노동자 숙소 환경개선 지원
-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구제기금 운영
- 이주노동자 한국어 교육 무상 프로그램 확대

3. 이주여성 인권 및 다문화가족

-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용 쉼터 확충 및 통번역 서비스 24시간 운영
- 이주여성 자립지원센터 권역별 설치
- 결혼이주여성 무료 법률·체류상담 통합창구 운영
- 이주여성 직업훈련·재취업 프로그램 자치구별 확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능 확대 및 운영비 강화
- 다문화가정 아동 양육·돌봄 통합지원 사업 확대
- 이주여성 모국어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운영
- 국제결혼 중개 피해 신고·구제 지자체 창구 운영

4. 이주아동·청소년

-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 의료·교육·돌봄 지원체계 구축
- 재학 중인 모든 학생 급식비 포함 교육비 지원 조례 제정(국적·체류자격 무관)

- 시설 보호 이주아동 생계비 기초수급자 수준 지원
- 아동복지사업 사례관리 대상에 외국국적 아동 포함
- 이주배경 청소년 전담 지원센터 자치구별 확충
- 검정고시·취업교육 등 사회진출 연계 강화
- 다문화 청소년 이중언어 학습지원 및 진로상담 사업 확대

5. 난민 및 지역사회 통합

- 난민·인도적 체류자 지자체 자체 정착 지원체계 구축
- 난민 무료 법률·심리상담 통합 창구 운영
- 이주민 모국어 공동체 라디오·미디어 제작 지원
- 다문화 축제·문화행사 지자체 공식 후원 및 시민 참여 확대
- 지역 주민·이주민 상호이해 프로그램 운영
- 이주민 정책 자문 거버넌스 운영

소상공인·자영업자 - 빛 걱정 없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

1. 부채 및 금융 지원

- 지자체 소상공인 부채 통합상담 및 신용회복 지원센터 운영
- 지자체 출자 지역공공은행(도민은행·시민은행) 설립
- 지역 소상공인 저리 대출 지원 확대
- 영세 자영업자 노란우산공제 보험료 30% 지자체 지원
-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용자 한도 확대

2. 상가 임대료 및 임차 보호

- 지자체 표준임대료(공정임대료) 산정 및 고시
- 자치구별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상담센터 설치
- 공공이 건물 매입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상가 확대
- 지자체 젠트리피케이션 영향평가 도입
- 상생협약 체결 임대인 재산세·취득세 감면 인센티브
- 재개발·재건축 시 영세상인 우선입주권·퇴거보상금 지자체 지원
- 전통시장 임차상인 임대료 안정 지원사업 확대

3. 골목상권 및 유통 대기업 규제

- 대규모 점포(복합쇼핑몰·아웃렛 등) 개설 지자체 허가제 강화
- 대형마트·SSM 영업시간 제한 강화
- 상품공급점(변종 SSM) 사업조정 대상 포함 조례 정비
- 지역 내 대기업 사업장 지역기여금 출연 협약 제도화
- 지자체 발주사업 지역주민 50% 이상 의무 고용 조례
- 골목상권 보호구역 지정·관리 사업 운영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안전관리 지원 확대

4. 온라인 플랫폼 대응

- 지자체 공공배달앱 구축·운영 및 수수료 인하
- 공공배달앱 지역화폐 결제 연계 강화
- 자영업자 플랫폼 분쟁 무료 법률·노무 상담 창구 운영
- 플랫폼 입점 자영업자 단체 활동 지원사업 신설
-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온라인 마케팅 컨설팅 무상 지원

5. 사회안전망 및 복지

- 영세 자영업자·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자체 추가 지원
- 자영업자 상병수당 도입(아파서 쉬 때 소득보전)
- 자영업자 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 지원사업 확대
- 폐업 자영업자 재기 지원금 및 재창업 교육 통합지원
- 소상공인 마음건강 상담 무료 바우처 확대
- 자영업자 가족돌봄·휴식 지원사업 신설

6. 지역경제 협업화 및 인프라

- 소상공인 공동구매·공동물류 ‘협업단지’ 권역별 조성
- 동네 물류 거점 구축 및 공동배송 시스템 운영
- 상권 통합 AI 재고관리 시스템 시범 보급
- 상권별 ‘소상공인 디지털 코디네이터’ 배치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및 지방세·공공요금 납부 연계
- 납품단가 연동제 지자체 발주사업 우선 적용

농어민 - 농어민이 주인되어 기후를 지키는 농어촌

1. 농어민 기본소득 및 소득 안정

- 농어촌기본소득 30만원 전국 확대
- 지자체 농어촌기본소득 조례 제정
- 소농·고령농 대상 농민수당 추가 지급
- 지자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시범 도입
- 어업인 공익수당 도입 및 영세 어가 추가 지원

2. 읍면 단위 생활서비스 강화

- 마을주치의 제도 도입 및 마을순회진료체계 구축
- 보건소 기능 강화 및 야간·휴일 응급의료체계 확충
- 1면 1국공립어린이집 설치
- 1초·1중 '절대학교' 유지·육성 및 공립형 기숙사 건립
- 읍면 저상 전기버스 공영제 도입
- 1,000원 택시·공공형 버스 등 농어촌 공유교통 읍면 단위 확대
- 마을회관 활용 통합돌봄 거점 운영
- 마을회관 리모델링 노인 공동생활홈(그룹홈) 보급
-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 빈집 정비·집수리 지원사업 확대
- 농어촌 문화·여가시설 권역별 조성

3. 기후위기 대응 및 생태농어업 전환

- 기후위기직불금 모든 농민 지급 추진
- 친환경직불금을 기후생태직불금으로 전환·세분화
- 논 직불금 단가 인상 및 지급상한면적 확대
-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지원
- 농어업 기후생태자원 허브 구축(기술개발·연구·교육 등)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자체 추가 지원

4. 식량 주권 및 농지 보호

- 비농민 소유 농지 공공재 관리 및 경작권 보장 체계 구축
- 마을별 농지위원회 구성 및 심의기능 강화
- 유휴농지 선제 매입·임차 후 청년농·귀농인·소농 장기 임대
- 농업진흥지역 보호 강화 및 무단 전용 단속체계 구축

- 농지총량 유지 지자체 책임관리제 도입
- 도시농업 활성화 및 공공텃밭 확대

5. 공공급식 및 지역순환 먹거리

- 지역별·권역별 식량자급 계획 수립 및 지역순환 먹거리체계 구축
- 먹거리 빈곤 해소 지역사회 공공먹거리 돌봄체계 강화
- 학교·군부대·공공시설 공공급식 확대
- 공공급식 로컬푸드 우선 공급체계 구축
- 어린이집·복지시설 등 친환경 농산물 공급 확대
- 직거래 공공도매시장 확대 및 로컬푸드 직매장 권역별 설치
- 지역농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 종합지원체계 구축
- 기업적 가공과 차별화된 농민가공 활성화 지원

6. 청년 농어민

- 모든 청년 농어업인 10년간 월 50만 원 정착지원금 지급
- 면 단위마다 공공형 청년임대주택 건립, 빈집 리모델링 비용 지원
- 청년 농업인 농지임대료 10년간 지자체 무상 지원(친환경은 20년)
- 농업기술센터 선배농·청년농 멘토-멘티 매칭 시스템 구축
- 영농기술·판로·운영·지역적응 통합 정착 지원
- 청년 어업인 어촌계 진입 지원

7. 여성 농어민

- 지자체 여성 농어민 전담인력 배치
- 농정 위원회 여성 농어민 참여율 의무화
- 농촌지역 각급 단위 성평등 교육 의무화
- 농번기 공동급식 확대
- 청년 여성농민-선배 여성농민 멘티-멘토 사업
- 여성농민 거주공간·농지 확보 지원
- 여성농민 특수건강검진 및 기본 건강관리 무료 지원
- 여성 친화형 농기계·작업환경 개선 지원
- 여성농민 행복바우처 지급액 인상

8. 산업폐기물·송전탑 없는 안전한 농어촌

- 수도권 일방 희생 강요 송전탑 건설 반대
- 산업폐기물 발생지 중심 광역단위 공공관리 처리체계 구축

- 농어촌 산업폐기물 집중화 중단
- 광역시·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1일 50톤 이상 소각시설까지)
- 난개발·환경오염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정
- 농어촌 난개발 방지 도시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 농어촌 환경피해 주민 건강조사·피해구제 지자체 지원

9. 거버넌스 및 협업

- 지자체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 지원
- 농어민 정책 자문 거버넌스 운영
- 지자체 농산어촌 에너지자립마을(RE100) 조성
- 농어촌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 주민공유형 모델 보급
- 농어업 6차산업화(가공·체험·관광) 통합지원 플랫폼 운영

10. 어업·수산

- 지자체 공익형 수산직불제 시범 도입
- 노후 연근해 어선 기관 교체 지원
- 어촌계 신규 가입 및 청년 어업인 진입 지원
- 수산물 방사능 정기 검사 및 결과 투명 공개
- 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어항 시설 현대화
- 양식어업 친환경 전환 지원사업 확대

예술인 - 예술도 노동, 창작자도 시민인 지역

1. 예술인 노동권 보장

- 지자체 공공예술 사업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 표준계약서 미사용·불공정 계약 강요 점검 및 시정 체계 구축
- 지자체 공립예술단 단원 정규직화 및 공무원 전환
- 공립예술단 평정 의한 해고·임금 삭감 금지 가이드라인 수립
- 지자체 예술노동 권익보호센터 권역별 설치
- 예술인 무료 법률·노무 상담 24시간 운영

2. 예술인 사회보장 및 안전망

- 지역 예술인 창작활동 보장 수당(문화기본소득) 지역화폐 월 지급
- 지자체 예술인 사회보험료(고용·산재) 추가 지원
- 예술인 재도전 연대기금 조성·운영
- 재난 시 예술인 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
- 예술인 마음건강 상담 무료 바우처 확대
- 예술인 가족돌봄·휴식 지원사업 신설
- 예술인 직업성 질환 건강검진 지원

3. 창작 공간 및 주거

- 유휴공간 활용 예술인 무상 작업실(창작공간) 공급 확대
- 예술인 특화 공공임대주택 권역별 공급
- 폐교·폐산업시설 활용 마을 문화 창작소 조성
- 자치구별 예술인 공유 작업·전시 공간 운영
- 예술인 작업실 임대료 안정 지원사업

4. 창작의 자유 및 검열 방지

- 지자체 예술지원기관 독립성 보장 조례 제정
- 예술지원 심사 정치적 개입 차단 가이드라인 수립
- 결과·홍행 아닌 기획 참신성 중심 ‘실험예술 공공투자제’ 도입
- 예술인 표현의 자유 침해 신고·구제 통합 창구 운영

5. 지역 문화 진흥 및 거버넌스

- 지자체 예술청 설립 및 예술인 직접 참여 거버넌스 운영

- 자치구별 문화재단 운영 강화 및 예술인 참여 확대
- 공공 문화시설 대관·지원 예산 비주류·독립예술 30% 할당
- 지역 서점·작은도서관 운영비 지원 확대
- 마을 단위 생활문화공동체 활동 지원사업 확대
- 지역 예술축제·문화행사 정기 개최 지원
- 지역 예술인 작품 공공구매·전시 사업 확대

6. 특정 직종 노동권

- 학교 예술강사 무기계약직 전환 및 법적 지위 보장
- 학교 예술강사 사업 상시 지속사업 전환
- 도서관 사서 표준임금 가이드라인 마련
- 도서관 사서 인력 확충 및 감정노동 대책 수립
-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수립
- 공연장·전시장 기술스태프 표준계약·산재 보호 강화

7. 저작권·신기술 대응

- 지자체 발주사업 창작자 저작권 보호 가이드라인 수립
- 영상저작물 ‘수익 비례 보상권’ 지자체 발주사업 우선 적용
- 지역 창작자 저작권 무료 상담 창구 운영
- 생성형 AI 무단 학습 피해 창작자 법률지원 사업
- 지자체 발주사업 AI 산출물 표기 의무화 가이드라인

8. 예술인 양성 및 교육

- 청년 예술인 정착지원금 신설
- 신진 예술인 발굴·지원 프로그램 자치구별 운영
- 예체능 학생 실습비·재료비 지원 확대
- 지역 예술교육 강사 양성 및 처우개선
- 예술인 평생교육·재교육 프로그램 무상 운영

03 지방정치의 약속

지방자치 — 시민이 주인되는 풀뿌리 자치

지방재정 — 시민이 함께 만드는 재정 민주주의

지방자치 - 시민이 주인되는 풀뿌리 자치

1. 지방의회 운영 혁신

-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및 실효성 강화(검증 결과 임용 반영)
-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폐지
- 지방의회 회의·심의 시민 방청·중계 전면 확대
- 의회 입법예고 시민 의견수렴 절차 강화
- 지방의회 정책지원 인력 확충

2. 풀뿌리 주민자치 및 직접참여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시범 도입
- 주민자치회 위원 주민 직접선출제 시행 및 실질 예산 결정권 부여
- 온라인 시민입법 플랫폼 운영 및 일정 동의 도달 시 의회 자동 부의
- 주민참여예산제 실효성 강화 및 시민감시 체계 구축
- 발전소·폐기물시설 등 시설 입지 결정 시 주민 동의권 제도화

3. 시민 거버넌스 및 위원회 개혁

- 지자체 산하 위원회 정비 및 회의록 전면 공개
- 위원회 청년·여성·장애인·이주민 등 다양성 의무화
- 시민 공론화 절차 의무화(주요 정책·대규모 개발사업)
- 시민 정책배심원제 시범 도입

4. 행정 투명성 및 반부패

- 단체장·기관장 업무추진비 매일 공개
- 의회 소속 독립적 감사위원회 설치
- 비리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정착 및 시민이사제 도입
- 공익제보 보호 조례 강화 및 포상금 기준 상향
- 지자체 발주사업 입찰·계약 투명성 강화

5. 자치경찰 및 시민 안전

- 자치경찰위원회 인권·시민사회 전문가 참여 확대
- 자치경찰 시민감시 거버넌스 운영

지방재정 - 시민이 함께 만드는 재정 민주주의

1. 재정 투명성 및 시민 통제

- 단체장·기관장 업무추진비 매일 공개
- 1억 원 이상 사업 사전·사후 공개 의무화
- 지방재정 통합공시 강화 및 시민감시 거버넌스 운영
- 지자체 발주사업 입찰·계약 투명성 강화
- 의회 소속 독립적 감사위원회 설치

2. 주민참여예산 실질화

- 주민참여예산제 실효성 강화 및 시민감시 체계 구축
- 5억 원 이상 주요 사업 주민 모바일 투표 도입
- 자체 예산 100억 원(광역 300억 원) 이상 신규사업 주민공청회 의무화
- 주민참여예산 모범 지자체 인센티브 제도 운영
- 어린이·청소년 참여예산 별도 편성

3. 자치구·기초단체 재정 형평성

-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정방식 개선 및 사회복지 수요 반영 강화
- 재정자립도 낮은 자치구·기초단체 균형발전 재정 지원
- 광역-기초 재정협의체 운영 강화

4. 지역순환경제 재정

- 지역재투자기금 조성·운영(지역 중소기업·사회적경제 지원)
- 지방세 납부 지역화폐 환급·적립 연계 시스템 구축
- 사회적금융·사회혁신기금 운영 강화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및 지방세·공공요금 납부 연계

5. 기후·성평등 예산 시스템

- 생태한계인지 예산제 도입 및 기후영향 분석서·기후결산 시민 공개
-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강화 및 시민감시 체계 구축
- 지자체 모든 정책 성별영향평가 의무 시행 및 결과 공개
- 인권영향평가 시범 도입(주요 정책·대규모 개발사업)

6. 정부 국회 요구 사항

- 지방교부세 법정률 22~24.24% 단계적 인상
- 사회복지 목적세 신설 및 사회복지교부금 도입
-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영유아보육·장애인연금 등 4대 복지 100% 국고 부담
- 포괄보조금 확대 및 국고보조사업 매칭 부담률 완화
-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제도화
- 특별교부세 폐지 및 재난안전교부세 전환
- 지방재정 부담 정책 사전 협의 의무화

04 지역별 공약

서울
전남광주
인천
대전
부산
대구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세종
제주

서울특별시

“이제, 같이 삽시다! 같이 갑시다!”

① 노동소득만으로 살 수 있는 서울

1. 기본서비스 보장 — 주거·먹거리·교통·의료는 시정이 책임진다

제도적 기반

- 서울특별시 보편적 기본서비스 보장 조례 제정
- 기본서비스 특별회계 신설 및 직영 운영 원칙 수립
- 시민 주도 기본서비스 추가 지정 위원회 설치

[주거] 공공임대 확대 + 임대료 통제

- 공공임대주택 20% 확보(공공토지 공공주택 원칙 + 공공선매제 도입)
- 다주택 투기 재산세 강화·1주택 실거주자 감면
- 서울형 표준임대료·표준관리비 조사·공표
-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 조례 제정 및 세입자 계속주거권 보장
- 서울형 주거·에너지 안심바우처 통합 확대
- 세입자 보호형 녹색 리모델링 지원

[먹거리] 공공조식·공공식당 + 도시 먹거리 보장

- 도시 먹거리 보장 조례 제정
- 서울형 공공조식 기본서비스 도입(취약계층 무상)
- 공공조식 참여시설(사업장·아파트·대학·지역시설) 지원
- 동네밥상·마을부엌 자치구별 조성
- 서울 먹거리 이음터 구축(푸드뱅크-복지관-식당 연계)

[교통] 대중교통 무상화 + 공영제

- 대중교통 무상화 단계적 실시(어린이·청소년·어르신·장애인 우선, 2030년 전 시민 확대)
- 서울시 버스 완전공영제 전면 도입
- 호출비 0원 서울시 공공택시 플랫폼 구축
- 골목 사각지대 친환경 ‘우리동네 이음버스’ 도입

[의료] 주치의제 +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 서울형 아동·청소년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어르신·중증·만성질환자 단계 확대)
- 만성질환 관리비·필수 약값 지원(어르신부터 시작)
- 공공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민간 확산
- 서울형 동네 주치의제 도입(어린이·청소년·장애인·어르신 포함)

2. 노동권 보장 — 법 밖의 노동자부터, 공공부문부터**[법 밖의 노동자]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메우기**

- 서울시 노동권 보장 조례 제정(5인 미만·초단시간·특고·플랫폼 노동자 적용 확대)
- 쪼개기 사업장·쪼개기 계약 실태조사 및 적발·공표
- 서울형 공정 단가 도입(특고·프리랜서·플랫폼 건당 최저임금 보장)
- 서울 노동 표준 협의회 구성 및 표준 단가 인증제
- 서울 노동자 지원센터 강화 및 맞춤형 복지카드 제공

[공공부문] 진짜 사장 서울시장

- 산하 공공기관 노조와 단체교섭형 노정교섭 실시
- 민간위탁 노동조합 원청교섭 응대
- 공공운수노조 정례 정책협의 추진
- 서울시 산하 위원회 산별노조 대표자 참여 보장
- 3대 나쁜 일자리 퇴출(쪼개기·기간제 남용·외주용역)
- 생명안전·상시지속 업무 직고용 정규직 전환

[노동권 주체화]

- 초기업교섭 촉진 조례 제정
- 노동권 우수기업 공공조달·민간위탁 우선권 부여
- 서울지역 노조 조직률 20% 달성 추진(중소영세·불안정 노동자 조직화 지원)

[노동 중심 시정 체계]

- 서울시 노동부시장 신설 및 노동정책실 격상
- 노동착취 악덕사업장 서울시 공공조달·지원 원천 배제
- 서울 노동안전감시단 상설 운영
- 나쁜 일자리 신고센터 운영(노무사·변호사 현장 조사·구제)

3. AI 시대 고용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 AI 도입 시 노동영향평가제 조례화 및 사전 노사 교섭 의무화
- 알고리즘 이의신청권·인간검토요구권 보장
- 빅테크 'AI 전환기금' 의무화 — 서울형 전환 일자리보장제 재원
- 서울형 전환 일자리 보장제 도입(생활임금·4대 보험)
- 자치구별 일자리 전환 지원센터 운영(1:1 직무전환 교육)
- 전환기 소득보장제 도입(고용보험 사각지대·실업급여 종료자)
- 서울형 청년 '스스로' 직업훈련제(개인계좌제)
- 주민 주도 지역산업·일자리 전환 계획 수립

4. 시민이 기술을 통제하는 도시

- 일터 내 AI 통제 및 플랫폼·알고리즘 노동권 보장
- 쿠팡 등 플랫폼 입점상인 권리 보장
- 시민 정보인권 및 디지털 방어권 강화
- 블랙박스 알고리즘 해체 및 시민 데이터 주권 확립
- 디지털 전환 아날로그 접근·선택권 병행 보장
- 읍면동 디지털 동행지원단 운영

5. 노동시간 단축 — 생산성을 시민의 휴식으로

- 서울시·산하기관 주 4일제(주 35시간제) 선도 도입
- AI 도입 기업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유지 의무화
- 포괄임금제 공공부문 즉각 폐지 및 근로감독
-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 노동시간 단축 전환지원금 신설(임금보전·신규채용·근무체계 개편)
- 노동시간 단축 선도기업 인증 및 공공조달 우대

6. 떠밀리지 않는 골목, 흔들리지 않는 일터

- 골목상권 보호 진입 규제·복합쇼핑몰 의무휴업 확대
- 공공배달 플랫폼·공공임대상가 운영
- 자영업자 불공정거래 신고·구제 통합 지원센터
- 생계형 자영업자 3대 사회안전망(상병수당·고용보험·산재보험)
- 고용보험 미가입자 실업급여 확대
- 농어촌 기본소득 활용 서비스 확대(서울 외곽·도농지역)

7. 함께 사는 동네 — 돌봄 경제

- 자치구별 공공돌봄센터(사회서비스원) 설치
- 1인가구 병원동행·응급 연락망 구축
- 마을활동·가족·이웃돌봄 참여소득 지급
- 편의점·약국 등 생활시설 ‘돌봄 보안관’ 역할 강화
- 초등·청소년 마을학교 확대
- 일자리보장제 연계 지역 통합돌봄 인력 육성
- 서울 내 지역격차 해소 종합대책
- 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② 지역과 상생하는 서울

1. 에너지 자립 도시 — 자산지소(自産自消)

- 서울 에너지 자기책임률 30% 목표 단계적 상향
- 1가구 1태양광 + 공공건물 태양광 의무화
- 서울 에너지공사·에너지거래소 설치
- 시민참여형 에너지 협동조합 육성
- 폐기물 외부이전 상생기금 조성

2. 부수지 않고 다시 쓰는 서울

- 순환형 리노베이션 — 부수기 전 다시 살리기
- 재건축·리노베이션 시 에너지 1등급 의무화
- 건축자원 순환체계 및 자재 재사용 시장 구축
- 마을 리필·수리 스테이션 확충
- 일회용품 단계적 전면 금지 로드맵

3. 지역과 함께 결정하는 서울 — 상생 거버넌스

- 수도권-지역 상생협의체 상설화
-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및 RE100 이행 강화
- 공공기관·기업 수도권 집중 완화 및 기능 분산
- 대기업·유통기업 지역기여금 의무화
- AI·디지털 전환 공공환원 및 지역 전환 투자

4. 시민이 결정하는 서울 — 직접 민주주의

- 무작위 추첨 기반 상설 시민의회 도입
- 주민영향평가 전면 의무화(환경·교통+삶의 영향)
- 주민참여예산 가용 예산의 10% 이상 확대
- 시민 참여 수당 및 유급 공가 보장
- 기후시민회의 — 기후 의제 시민 속의 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모든 시민이 특별하게, 삶이 빛나는 노동특별시

[5대 공약]

‘모두의 노동기금’ 설치 - 정의로운 노동전환

• ‘일자리보장’, ‘적정임금’, ‘안전한 일터’ 실현, 일하는 시민을 통합 지원하는 특별시 기금, 모두의 노동재단 설립과 지원센터 운영으로 운용

‘지역공공은행’ 추진- 지역순환경제 도입

• 지역순환경제 시스템의 금융기능을 담당하는 은행으로 지자체 100% 출자로 설립, 시금고로 지정 운영, 지역기업·서민 대출 및 지역특화산업·지역투자 지원

‘권역별 상급병원’ 확충 - 공공의료시스템 구축

• 대학병원 설치·권역별 거점병원 운영

‘녹색에너지공사’ 설립 -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출자, 특수목적법인 출자,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기여

‘대자보 광역교통망’ - 60분 생활권 완성

• 광역철도망·광역버스망 구축, 복합환승센터 건립, 간선급행버스체계(BRT)와 수요응답형교통체계(DRT) 도입 등으로 60분 생활권 완성

[노동] 삶이 빛나는 노동특별시

- ‘모두의 노동기금’ 설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노동국, 노동감독관 등 편제
- ‘모두의 노동지원센터’ 설립
- 노동안전보건센터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 단체교섭형 노정교섭 보장
- 권역형 노동권익센터 설치
- 노란봉투법 지원단 운영
- 노동자조식센터와 작업복세탁소 확대
- 전남광주형 주4.5일제 도입
-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확대

- 화물노동자 쉼터 설치
- 이동노동자 쉼터 및 숙소 설치
-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지원

[돌봄] 사각지대 없는 생애주기 통합돌봄

- 공공 돌봄 인프라 확충
- 돌봄노동자 노동권 보장 · 처우개선
- 맞춤형 돌봄 특구 및 기금 조성
- 민주적 통합돌봄 거버넌스 구축

[경제] 모두를 위한 지역순환경제

- 지역공공은행 설립 추진
- 모두의시민펀드 운용
- 지역순환경제진흥원 설립
- 지역순환상생기 및 소상공인진흥기금 설치
- 지역순환경제 기본조례 제정
-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 지원

[지역균형] 함께 사는 상생특별시

-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 전남광주형 기본소득 확대
- 인구감소지역 반값여행 및 섬지역 반값여행

[기후] 탈핵으로 RE100, 2045 탄소중립

- 녹색에너지공사 설립
-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추진
- 해상풍력추진단 운영
- 권역별 수소 생태계 구축 (여수-광양, 신안-진도)
- 계통형 ESS시스템 구축
-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특별회계 설치
- 기후대응기금 설치
- 탄소중립지원센터 및 기후위기적응센터 운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생에너지연구원' 설립

[주민자치] 정의로운 자치특별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회 구성
- 주민자치회 활성화
- 주민자치 발전소 구축
- 369 장기정주패키지 지원
- 고령주민 활력 지원
- 자치 참여수당 지급

[문화예술] 5.18정신 계승, 시민중심 문화도시

- (시립) 전남광주형 문화예술센터 건립
- 5·18 국제예술관 건립
- K-디즈니 조성
- 시립예술단 민주적 운영

[교통] 편리함 가까운 60분 생활권

- 녹색교통공사 설립
- 광주~목포간 광역철도 건설
- 광주~광양만권간 광역철도 건설
- 광주선 (광주역~광주송정역) 복선화
- 신경전선 건설 (노안~신보성, 신보성~순천)
- 모두의 패스 (버스~광역철도망~지하철)
- 대자보 도시 (타랑계 공공자전거, 광역교통버스, 무장애정류소)
- 광주 고속터미널, 광주송정역 인근 이전
- 권역별 광역복합환승센터 구축

[의료] '지역 완결형' 공공의료 대전환

- 권역별 대학병원급 거점 의료망 완성
- 통합 권역의료시스템 구축
- 통합 의료협력 시스템
- 광역 통합 돌봄 브릿지
- 보건의료 행정체계 개편
- 아동·청소년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인천광역시

돌봄특별도시로, 녹색발전도시로!

[돌봄] 통합돌봄시대에 맞는 돌봄특별도시

- 인천의 돌봄 사업을 전담할 ‘돌봄부시장’ 신설 : 2026년 1월 출범한 인천시 외로움돌봄국을 포함해 여성가족부, 보건복지국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돌봄 관련 행정과 돌봄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운영.

- 돌봄노동자의 상호부조와 지원을 위한 ‘돌봄노동자 공제회’ 지원

[교통] 교통비 걱정없는 사회로, 공공성 강화

- 인천시민 월 1만원 대중교통 기후패스 도입
- 청소년 전면 무상교통

[기후] 기후위기 극복, 생태환경도시

- 영흥석탄화력발전소 2030년 조기 폐쇄 : 인천 온실가스 배출의 49%를 차지하는 영흥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2026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드시 편입, 영흥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민관대책위 구성, 재생에너지 목표 수립과 조기 달성을 위한 전략 제출

-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인천을 생태환경 도시로!

[평화] 하늘길, 바닷길, 땅길로 여는 평화수도

- 서해 접경 수역 평화조성과 정착을 위한 법률 제정, 조직 신설
- 서해 남북 해양수산 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 : 접경 수역내 남북공동 해양 자원과 생태계 실태 조사 국가 지원, 남북 해조류 양식 공동학술조사 지원
- 인천 통일+센터를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 활동의 거점으로 운영

[노동] 불평등 해소와 노동 존중 도시

- ‘구’ 별 노동권익센터 설치
- 일하는 시민을 위한 노동공제회 설립 지원
- 이동노동자를 위한 노동자 쉼터 대폭 확충
- 안전한 일터, 산업안전 보건센터 설립
- 비정규직, 비임금 근로자, 무늬만 프리랜서인 개인사업자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

[의료] 공공의료 강화로 건강평등 도시

- 제2인천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추진 : 인천의 공공의료기관 비중 4%에 불과, 공공병상수도 5% 수준으로 공공의료원 부족히 심각한 상황
- 인천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위탁금지 방안 제도화
- 국립인천대학교에 공공의대 설립
- 공공병원 간호 인력의 임금 및 처우개선 정책 마련
- 관문 도시 인천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대전광역시

송전탑 없이, 함께 잘 사는, 과학수도

[초고압 송전선 막아내고, 에너지 생산도시로!]

송전탑 방지 4대 조례

- 갈등유발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 환경피해 예비조사 및 주민 지원 조례
-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 주차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의무 확대

1. 과학수도 대전 — 시민과 함께하는 R&D

- 대덕특구 녹색혁신·기후 R&D 거점화 정부 협력 추진
- 녹색혁신 그린벤처 육성 및 창업 지원
- 대전 IT 노동자 권익보호센터 설치
- 우리동네 과학센터 자치구별 설치
- 초·중·고 연계 과학 놀이터 프로그램 운영
- 청년 연구자 지역 정착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대덕특구 퇴직 과학기술인 지역 환원 일자리 운영

2. 기후정의와 생태 대전

- 갑천 국가습지보호구역 준설 반대 및 보전·관리 강화
- 갑천 습지 사유지 매입 예산 확보
- 월평공원 생태보전 중심지 조성
- 보문산 개발사업 중단 및 생태자연화 추진
- 3대 하천(갑천·유등천·대전천) 자연성 회복 사업 추진
- 1가구 1태양광 보급 사업 확대
- 공공건물·유휴부지 태양광 의무화
- 대규모 복합화력 등 화석연료 발전 증설 금지
- 시민참여형 에너지 협동조합 육성
- 대전 에너지공사 설립 검토

3. 핵 안전 및 재난 대응

- 원자력연구원 안전 정보 공개 의무화 추진

- 대전 원자력안전협의회 권한·시민 참여 강화
- 핵시설 인근 주민 건강조사 정례화 및 피해구제
- 핵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정부 촉구
- 재난 피해 공동체 회복 지원제도 도입
- 재난 피해지역 주민 심리상담센터 운영

4. 교통 — 무상교통과 공영제

- 월 1만 원 대전 기후패스(버스·도시철도·타슈 통합) 도입
- 어린이·청소년·어르신·장애인 우선 무상교통 단계적 시행
- 대중교통 무상화 단계적 추진
- 버스 완전공영제 전면 도입
- 대전 대중교통공사 설립
- 골목 사각지대 친환경 마을버스 도입
- 저상버스 의무도입 이행률 제고

5. 주거 — 세입자 보호와 청년 주거권

- 전세사기 피해자 ‘선구제 후구상’ 대전형 지원
- 대전 원도심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빈집 활용 청년 천원주택 공급
- 청년 월 20만 원 주거수당 지급
- 대전형 표준임대료 조사·공표

6. 공공의료와 돌봄

- 대전의료원 공공직영 운영 보장 및 2029년 정상 개원 지원
- 대전의료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 병상 적용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지원 강화
-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병원비 연 100만 원 상한제 시범 실시
- 어르신·중증·만성질환자 단계적 확대
- 대전형 동네 주치의제 도입
- 읍면동 24시간 통합돌봄센터 설치
- 자치구별 공공돌봄센터 운영
- 마을돌봄 참여소득 지급
- 1인가구 병원동행·응급 연락망 구축

부산광역시

정치를 바꿔야 부산이 확 바뀝니다!

[4대 공약]

- 기후위기 시대, 무상대중교통이 답!
- 지역에서 창출한 부, 지역에서 순환!
- 노동자의 권리, 평등하게 보장
- 위험한 도시에서 안전한 도시 부산

1. 기후위기 시대, 무상대중교통이 답!

- 민간 버스 업체 돈 주는 준공영제 폐지, 대중교통 공공이 책임
- 공공교통 친화적인 도로 환경과 안전한 보행로 확보 : 자동차 도로 확장보다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 교통 소외지역 투자 확대 : 고지대 마을버스로 생활권 중심의 지역 거점 촘촘하게 연결
- 마을버스부터 무상대중교통 실시
- 청소년과 65세 이상 무상대중교통
- 월 1만원부터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

2. 지역에서 창출한 부, 지역에서 순환!

- 지역공공은행 설립, 지자체 금고를 지역공공은행으로 지정 의무화
- 지역 재투자 의무화, 지역재투자기금 조성
- 일회성 지역화폐에서 지역 내 순환 확대를 통한 지역 소비 활성화
- 지역 본사제 등을 통한 지역 산업 생태계 구축
-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지역기업제품 구매 의무화

3. 노동자의 권리, 평등하게 보장!

-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 5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제외 삭제
- 불안정 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 : 4대 보험 등 지원
- 공공부문 민간위탁사업 직영화
- 공공부문 비정규직 완전 폐지
- 공공부문부터 '알고리즘·AI 노동영향 점검 기준' 마련

4. 위험한 도시에서 안전한 도시 부산

-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 고리 2·3·4호기 폐쇄
 -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 금지 및 관리 정책 재수립
 - 지역 친화적인 에너지 전환 사업 기획 및 실행 책임질 부산에너지공사 설립
- 가덕신공항 백지화

대구광역시

일할 맛 나는 생태도시, 시민이 주인 되는 대구

1. 정의로운 전환과 좋은 일자리

- 대구 자동차부품산업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역 지정 정부 협력
- 대구형 정의로운 전환기금 조성 및 노동자 교육·소득·전직 지원
- 탈탄소 자동차부품·미래모빌리티 산업 클러스터 조성
- 시 예산 활용 태양광 발전 확대 및 일자리 창출
- 노후 주택 그린 리모델링 단계적 추진
-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지역대학 출신 채용 비율 단계적 상향
- 대구시 노동정책실 격상 및 노동부시장 신설
- 노동권익보호센터 권역별 설치
- 생활임금 정착 및 자영업자 상병수당 시범 실시
-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

2. 공공의료와 돌봄 책임제

- 제2대구의료원 동구·동부권 건립 재추진
- 대구의료원 공공직영 운영 보장 및 통합외래진료센터 조속 완공
-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정부 협력
-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병원비 연 100만 원 상한제 시행
- 대구형 동네 주치의제 도입
- 시민돌봄보장조례 제정
- 읍면동 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복지·의료·돌봄 원스톱)
- 자치구별 공공돌봄센터 운영
- 마을돌봄 참여소득 지급
- 1인가구 병원동행·응급 연락망 구축
- 장애인 시설 인권침해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지원주택 권역별 확충
- 최종증·발달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지자체 추가지원

3. 생태 대구 — 하천 재자연화와 녹색 인프라

- 신천 자연성 회복 및 보 개방 추진
- 낙동강·금호강 자연성 회복 정부 협력
- 산업단지 수질 개선 및 무방류 시스템 도입 협력

- 1가구 1태양광 보급 사업 확대
- 공공건물·유휴부지 태양광 의무화
- 시민참여형 에너지 협동조합 육성

4. 교통 — 무상교통과 공영제

- 월 1만 원 대구 기후패스 도입
- 청소년·어르신·장애인 우선 무상교통 단계적 시행
- 대중교통 무상화 단계적 추진
- 버스 완전공영제 추진
- 대구형 공유자전거 시스템 도입
- 도로 다이어트 및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 저상버스 의무도입 이행률 제고
- 장애인 콜택시 법정 대수 2배 확충

5. 교육·청년 — 기회의 평등

- 친환경·로컬푸드 학교급식 비중 확대
- 청년사회상속제(만 20세 3,000만 원 기초자산) 도입 단계적 추진
- 보증금 없는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청년 사회주택 공급 확대
- 청년 월 20만 원 주거수당 지급
- 청년신용회복기금 조성

6. 대구 지역 현안

-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재정 부담 검토 및 추진 재논의
- 대구 취수원 이전 대신 낙동강 수질 개선 우선
- 대구·경북 행정통합 시·도민 공론화 및 주민투표 의무화
- 대구백화점 부지 공공·시민 활용 방안 마련(e스포츠·청년센터 복합문화공간)
- 경상북도청 후적지 공공 활용(경북대 제2캠퍼스·R&D 지구)
- 중앙로 단계적 ‘차 없는 거리’ 전환 및 예술인 공연 무대 활용
- 김광석길 문화관광 거점 육성

7. 금융 정의 및 시민 권리

- 대구 금융복지상담센터 자치구별 설치
- 채무자 무료 법률·금융상담 통합창구 운영
- 고금리 피해 시민 저금리 전환 지원사업

울산광역시

사남매를 꼼꼼하게 챙겼듯이, 울산의 행복한 미래를 확실하게

1. 정의로운 산업 전환과 노동권 보장

- 울산시 공공 부문,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사업장의 정규직화 추진 및 이행계획으로 울산시 및 구·군에서 다양한 의제로 논의할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
- 울산 노동자가 일하며 행복한 노동특별시로 전면 추진
- AI 등 기술 발전이 불가피하다면 노·사를 뛰어넘는 종합적인 제도 마련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대규모 재건축에 따른 원청 및 협력사 노동자 고용안정 대책 마련(울산시·북구청·해당 노사단체 협의체 구축)
- 울산지역 장기간 방치된 노사갈등 사업장 특단의 대안 마련(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현대차 이수기업, 자일 상용차(옛 대우버스) 등)

2. 탈핵과 녹색 에너지 전환

- 신규 원전 건설 반대
-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반대 및 폐쇄 촉구
- 울산 원자력안전 시민감시 협의체 설치
- 핵발전소 안전 정보 시민 공개 의무화
-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부지 내 건설 반대
- 핵시설 인근 주민 건강조사 정례화 및 피해구제
- 공공·시민 참여형 부유식 해상풍력 추진(어민·환경단체 협의 우선)
- 1가구 1태양광 보급 사업 확대
- 공공건물·유휴부지 태양광 의무화
- 시민참여형 에너지 협동조합 육성

3. 공공의료 확충 및 돌봄 책임제

- 울산의료원 설립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 산재전문공공병원 정상 개원 및 운영 안정화
- 울산 공공의료 네트워크 구축(울산의료원·산재전문공공병원·보건소 연계)
- 울산의대 및 울산의대대학원 울산지역으로 완전한 환원
- 자치구별 보건소 내 재택의료센터 설치
- 울산형 동네 주치의제 도입
-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 24시간 공공아이돌봄센터 권역별 설치

- 친환경·로컬푸드 학교급식 비중 확대
- 자치구별 공공돌봄센터 운영
- 1인 가구 병원 동행·응급 연락망 구축
- 장애인 콜택시 법정 대수 2배 확충 및 24시간 운영
- 발달장애 가족 경조사 바우처 돌봄 체계 운영
-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지원주택 권역별 확충

4. 기후위기 대응과 공공교통 혁신

- 대중교통 단계적 무상화 추진
- 시내버스 단계적 친환경(전기·수소) 전환
- 우리 동네 이음버스 생활권 중심으로 지역 내 이동 지원
- 동남권(부산·울산·경남) 광역교통망 구축
- 어르신·임산부·영유아·장애인 대상 택시비 지원
- 청소년·어르신·장애인 우선 무상교통 단계적 시행
- 저상버스 의무 도입 이행률 제고

5. 안전한 산업도시와 생태 환경

- 울산 산단 위험 화학 물질 지도 완성 및 시민 공개
- 노후 산업단지 안전 리모델링 추진
- 산업단지 사고 대비 법적 대피소 확보
- 환경 감시 결과 시민 공개 및 오염 배출 기업 처벌 강화
- 태화강 국가정원 보전·관리 강화
- 그린벨트 해제 사업 재검토
- 대곡댐 안정적 식수원 확보 및 수질 관리
- 장생포 돌고래 자연 방류 및 고래생태체험관 운영 전환

6. 청년·여성·소상공인 지원

- 보증금 없는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시장 직속 성평등정책관 신설 및 성주류화 컨트롤타워 강화
-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센터 자치구별 확충
- 대기업 쇼핑몰 입점 제한 및 골목상권 보호구역 지정
- 공공배달앱 구축·운영 및 수수료 인하
- 영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자체 추가 지원

경기도

같이 살자, 누구나 마음놓고 사는 경기!

① 우리의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

[지역 현안 및 산업 안전]

-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망 구축** : 언어 장벽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국어 안전 매뉴얼 제작 및 보급, 이주노동자 맞춤형 안전 교육 의무화, ‘이주노동자 산재 전담 지원팀’ 설치, 지자체 차원의 노동 안전 점검 정례화.
- **주거 환경 개선** : 비닐하우스 등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인간다운 주거 기준(경기도형 이주노동자 숙소 기준) 마련 및 지원.
-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강화 및 실효성 확보** : 법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포함하여 경기도 내 모든 사업장에 대한 노동 안전 점검을 전면 확대, ‘경기도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
- **실질적 ‘작업중지권’ 보장** : 위험 상황 발생 시 노동자가 즉각 작업을 멈출 수 있는 ‘실질적 작업중지권’을 조례로 명시하고, 작업 중지로 인한 임금 손실이나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는 보상 체계 마련.

[노동권 확대 및 체계 개선]

- **고용 보험** : 저소득 플랫폼/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50% 지원
- **주 4일제 시행** : 공공부문 시범 도입 및 민간 지원(인센티브 제공)
- **민주적 운영** : 지방정부별 노동이사제 도입 (이사회 안건 상정권 부여)
- **인프라 및 편의** :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한 급행열차 노선 확대
- **운수 노동자 안전망** : 택시 완전월급제 시행 및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 정착으로 공공교통의 서비스 질과 노동권 동시 확보

[경제·일자리 평등]

- **성별임금격차 해소** : 지역형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및 성평등 노동정책 수립
- **일자리 확대** : 지역 맞춤형 여성 창업 지원, 돌봄·사회 서비스 공공 일자리 확대

[돌봄 및 일·생활 균형]

- **슈퍼우먼방지조례** : 전국민 육아휴직제, 대체인력지원센터 설립, 유연근무제 활성화
- **양육 지원** : 비혼모·부 양육비 지원 조례 제정, 한부모 가족 지원 강화

[기후일자리 확대]

- 재생에너지, 탈탄소 공공교통, 탄소제로 건물, 돌봄 분야 일자리 창출
- **청년 기후일자리 창출** : 기후·의료·생명안전·돌봄·노동인권 감시 분야 정규직 일자리 제공

[성평등 노동·돌봄·사회경제 의제 실현]

- **노동권 보호** : 민간 고용 평등 상담실을 31개 시·군으로 확대하고, 성평등 임금 공시제를 민간기업까지 넓혀 격차를 실질적으로 개선
- **공공 책임 일자리** : 기후·돌봄·노동인권 등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자체 책임 정규직 일자리 제공
- **노동권 보호** : 청소년 노동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 보장 및 교육 실시
- 돌봄 노동자 월급제 도입 및 생활임금 보장
- 방문 돌봄 ‘2인 1조 근무제’ 도입으로 안전 확보

② 각자도생이 아닌 모두가 함께 사는 경기!

[공공의료 강화]

- **지지방의료원 중심 공공의료 체계 구축**, 제2 공공병원 및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확대
- **지역의원 정상화** :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 철회, 시민 참여 경영 정상화, 지방의료원 법 위탁 관련 조항 개정으로 정상화, 부천시의료원 설립 추진

[돌봄 시스템 혁신]

- **돌봄부총리제** 신설 및 **사회복지세** 도입
- 읍면동 통합돌봄센터 설치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실현
- 사회서비스원(공단) 설립을 통한 돌봄 공공성 강화

[생애주기별 맞춤 돌봄]

- **아동/청소년** : 아동주치의제, 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 24시간 긴급돌봄
- **노인** : 국공립 요양시설 확충, 의료 결합형 공공실버주택 제공
- **장애인** : 24시간 활동지원 도입, 탈시설 및 자립 지원 로드맵 추진

[무상교통 실현]

- **대중교통 완전 공영제**
- **청소년 교통비 현실화** : 청소년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비 지원금을 월 약 4.6만 원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생활비 부담 경감
-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저상버스 확대, 장애인콜택시 확대

[접경지역 긴장 완화 및 안전 보장]

- **심리전 중단 및 법 개정** :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확성기 방송을 전면 금지하고, 충돌의 불씨가 되는 대북전단 살포를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신속한 개정 추진
- **주민 생존권 우선** : 군사적 마찰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이 불안 없이 일상과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도시 전략의 패러다임 전환]

- **평화 기반 도시 전략** : 기존의 군사시설 및 규제 중심 도시 계획에서 탈피하여, 평화 생태계

와 남북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평화 중심 도시 발전 전략으로 전환

- **군사 규제 완화와 상생** : 국가 안보와 주민의 재산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 및 평화 거점 조성

[상호 신뢰와 주권 강화]

- **평화협정 추진 토대 마련** : 남북 간 상호 신뢰를 구축하여 장기적인 평화협정 체결을 지향하고, 이를 통해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상생 방안 마련
- **평화 주권 확보** : 지역 차원의 평화 선언 및 교류 협력을 통해 중앙 정부에만 의존하지 않는 능동적인 평화 관리 역량 강화

[농어촌 기본소득]

-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 대상 월 30만원 기본소득 지급
- 읍면단위 기본 생활서비스 강화로 삶의 질 향상

[먹거리 기본권 보장]

- 지역별 권역별 식량자급 계획에 따른 지역순환 먹거리체계 수립
- 지역사회 공공먹거리 돌봄체계 강화, 공공급식 확대
- 기업적 가공과 차별화된 농민가공 활성화

[농지는 농민에게]

- 대중교통비농민 소유 농지는 공공재로 관리하고 경작권 보장
- 정기적인 농지전수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 마을별 농지위원회 구성 및 심의 기능 강화를 통한 실질적 관리 강화
- 휴폐경지 및 유휴농지 강제 처분 및 농지은행 위탁유도
- 청년, 소농 농지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농지은행 협력강화

[청년 농어업인 지원]

- 모든 청년농어업인에게 10년간 월 50만원 정착지원금 지급
- 승계농이 아닌 청년들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

[성평등한 농어촌 실현]

- 경기도 여성농어민 전담부서 설치, 시군구 여성농어민 전담인력 배치
- 농어업 정책의 수립 과정에 여성 농어민의 참여보장
- 농촌지역 각급 단위 성평등 교육 의무화, 성평등한 마을 규약 만들기

- 농번기 공동급식 확대, 찾아가는 마을교육 실시

[청소년, 청년의 자립과 노동]

- **경제 안전망** : 월 단위 청년기본수당 확대 및 실업 청년 대상 현금 지원 강화
- **생활임금 보장** : 청년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임금 전면 적용 및 지역 맞춤형 공일자리 확대

[공교육 책임제]

- **무상 교육 실현** : 지자체 예산 확대를 통한 대학 무상등록금 단계적 추진
- **학습권 강화** : 근거리 배정 원칙의 통학 편의 개선, 지역 거점 학교 클러스터 프로그램 확대
로 과목 선택권 보장
- **격차 해소** : 기초학력 보충 프로그램 예산 지원 및 학생 주도형 또래학습(Peer Learning)
시스템 구축
- **사각지대 보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 확대 및 실질적인 문화·직업 연계 프로그램
제공

[도시 전략의 패러다임 전환]

- **다주택 규제** : '1가구 3주택' 보유 금지 법제화를 통한 투기 수요 억제
- **공공임대 확대** : 녹색 공공임대주택(친환경 에너지 적용 등) 대폭 확충
- **토지 공공성** : 부동산 부양 정책을 종식하고, 공공토지 확대를 통해 실질적인 주거 안정 실현

[주거 취약계층 및 세입자 보호]

- **전세사기 대책** : 전세사기 피해자 실질적 구제 및 '깡통주택'을 공공임대로 전환하여 주거
권 보장
- **청년 주거권** : '청년 주거권 보장 조례' 제정, 보증금 제한 및 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주거비
부담 경감
- **상생형 개선** : 노후 주택 리모델링 지원을 통해 청년(입주자)과 임대인이 함께 이익을 얻는
상생 구조 설계

[안전도시 경기]

- 생명·안전도시 전담 실행기관 '시민안전센터' 설치
- 정책 만들기 전, 취약계층에 미치는 '안전영향평가' 의무화
- 일상 안전시설 정비 및 공공질서 확립 예산두 배 확대

③ 혐오와 차별없는 경기!

[경기도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 **조례 정비 및 개정** :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 및 성평등 정책 사업 지원
- **행정 체계의 명확화** : 도 및 31개 시·군 담당 부서 명칭에 ‘성평등’을 명시로 정책 정체성 강화
- **포용적 안전망** : 여성, 노인, 빈곤, 해소와 생애 주기별 건강 지원 등 소외 없는 복지 체계를 구축
- **차별금지법 조례 제정** : 보편적 인권과 평등권 보장을 위한 지역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

[젠더 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 체계의 질적 전환]

- **통합 대응 역량 강화** : ‘경기도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의 기능 강화로 시·군을 아우르는 거점 플랫폼 역할 수행
- **신종 범죄 대응: 딥페이크(AI 기반) 성폭력** : 처벌 강화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 거점 확대
- **민관 거버넌스** : 성매매·성착취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과 행정의 소통하는 경기도형 거버넌스 구축

[혐오와 차별 없는 경기도]

- **경기도 인권조례 제정** : 인권 보호관 지정, 인권센터 설치 및 모든 도정 사업에 ‘인권영향평가’ 의무화
- **증오표현 금지** : 인권조례를 근거로 공공장소 및 기관 내 “헤이트(혐오표현) 스피치 금지” 조례 제정
- **인권교육 의무화** : 도 산하 인권교육원 설치, 공무원 및 공공기관 대상 성평등·성소수자 인권교육 필수화

[성평등 노동·돌봄·사회경제 의제 실현]

- **새로운 가족 형태 지원** :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등 변화하는 가족 구조에 맞춘 사회 보장 혜택과 사후 자기 결정권 지원 도입
- **주거 및 데이터베이스** : 여성, 노인 특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실버 복지주택 공급의 근거 마련
- **성인지 관점의 확장** : 도시계획, 산업경제, 디지털 환경 등에 성인지 관점 확장

[여성 안심 주거]

- **비혼·1인 가구 안심 주거 실현** :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정으로 1인 가구 대상 종합 지원 체계 마련
- **주거지 안전 시스템 강화** : 여성 홈 방범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업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 범

죄 예방 시설(CCTV, 안심벨 등)을 신설·확충

- **안심 인프라 구축** : 무인 택배함 설치 확대, 안심이 앱과 연계된 안심 귀가 택시 및 지역 안심 통합 플랫폼 구축

[안전 및 건강권]

- **폭력 근절** : 젠더 기반 폭력 실태조사,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지원센터 확대
- **주거 안심** : 비혼 여성 1인 가구 주거환경 개선, CCTV·안심벨 등 안심거리 구현
- **재생산권** : 지역건강안전센터 설치, 월경용품 지원(만 9~24세) 및 생리대 보편 지급

[다양한 가족 구성권 보장]

- **생활동반자 관계 인증** : 경기도 차원의 조례를 통해 행정, 주거, 복지 혜택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지방정부형 생활동반자 제도’ 시행

[성소수자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강화]

- **트랜지션 의료비 지원** : 호르몬 치료 등 트랜지션 과정에 대해 연간 100만 원 상한제 및 바우처 지원
- **청소년 진료권 보장** : 부모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청소년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립 의료원 내 강제 규정 및 가이드라인 신설
- **공공 의료 확충** : HIV/AIDS 감염인을 위한 도립 요양병원 설립

[사각지대 없는 인권 안전망]

- **위기 청소년 쉼터 운영** : 성중립 공간(화장실, 상담실 등)을 확보한 청소년 성소수자 전용 쉼터 설치
- **안심 콜센터 설치** : 도 내 성소수자 군인, 여군 성폭력 상담 및 청소년 위기 대응을 위한 전용 상담 채널 구축
- **청소년 법률 지원** :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에 노출된 성소수자 청소년을 위한 전문 법률 지원단 운영

[장애인 권리 중심 정책 추진]

-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 활동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만 65세 연령 제한 없이 24시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자립 생활을 보장
-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 지원** : 장애인 거주 시설을 폐쇄하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소득, 돌봄 지원체계 구축
- **권리 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 :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친화적인 공공일자리 창출

- **장애인권리보장법 및 관련 법제화** : UN 장애인권리협약 기반의 법 제정과 장애인복지법 제 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폐기 추진
-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 발달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 및 돌봄 체계 강화

④ 주민이 주인되는 경기!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경기!

[당당한 시민으로서의 권리 보장]

- **성다양성 교육 혁신** : 성교육 시 ‘퀴스처닝(정체성 탐색)’을 포함하고, 연령별 체험형 성교육 자료 및 성소수자 교육 콘텐츠 보급
- **성건강 검진 확대** : 청소년 건강검진 연령을 하향하고, 성병 검진 및 치료비 적극 지원
- **문화 및 실태조사** : 도 차원의 성소수자 실태조사 정례화 및 도내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시민 직접 참여 및 권한 강화]

- **주민직접참여제도 실효성 제고** :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수렴요건을 완화하고, 제도적 실행력을 대폭 강화
- **읍면동장 직선제 도입** : 행정 편의주의를 벗어나 지역 주민이 거주지의 행정 책임자를 직접 선출하는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

[대의기구의 민주성 및 비례성 강화]

- **지방의회 비례성 확대** :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 비중 확대
-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 자치단체장 선거 시 과반의 지지를 얻은 대표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민주적 정당성 확보

[정치적 다양성 및 지역 정당 활성화]

- **지역정당 합법화** : 거대 양당 위주의 구조를 깨고 지역 밀착형 정당이 활동할 수 있도록 설립요건 완화 및 법적 지위 보장
- **정치 참여 보장** : 지역 내 다양한 소수 정치 세력과 시민사회의 참여 통로를 확장하여 정치적 다양성 확보

⑤ 기후 위기 해법을 실현하는 경기!

[기후 정의]

- 용인 반도체산단 전면 백지화
- 경기국제공항 건설 전면 백지화 및 수원 군비행장 폐쇄
- 탄소세 도입 및 대기업 감축 의무 강화
- 평화경제특구 사업 폐기, 개발 중심 관광정책 중단, 생태공정관광으로의 전환

[에너지 전환]

- 공공기관 옥상 및 공영주차장 태양열 패널 의무 설치 및 지원 확대
- **교통 복지 강화** : ‘더+경기패스’ 혁신: 이용 대상 확대, 월 60회 이용 제한 삭제, 납입 금액 인하로 체감 비용 절감
- **무상교통 도입** : 교통약자(장애인, 노인 등) 대상 무상교통 우선 도입 및 대중교통 완전 공영화 추진

[자원 순환]

- 식당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
- 공공배달앱 연계 **다회용기 배달/포장** 지원.
- 다회용 커피컵 수거 및 재활용 시스템 구축 (서울 모델 벤치마킹)

[기후정의조례 제정]

- 실질적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 실행을 위한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강원도

사람, 녹색, 평화가 공존하는 강원

① 노동 - 일하다 다치지 않는 강원

① 강원 노동인권센터 설립 및 노동안전 현장점검단 운영

- 전국 비정규직 비율 1위 지역임에도 임금체불, 산재 등을 상시 상담, 구제하는 거점 기구 부재
- 거점 기구 설립 : 임금체불, 산재, 부당해고, 휴게시간a 등 노동 문제 상시 상담 및 구제
- 점검단 운영 : 학교, 공장, 농장, 건설현장 등 노동 현장 출동 및 위험 작업 즉시 중단·조사

② 강원 중대재해 독립조사위원회 설치

- 조사위 가동 : 산재 사망사고 발생 시 도 차원의 즉각적인 독립 조사 실시
- 책임 행정 : 도지사의 현장 방문 및 재발방지 대책 보고 조례 의무화

③ 도청 주4일제 시범사업 및 노동이사제 도입

- 주4일제 : 강원도청 및 출자·출연기관부터 시범 도입하여 과로 사회 탈피 실험 시작
- 노동이사제 : 도 산하기관 내 노동자 대표의 경영 참여 의무화

④ 18개 시·군 생활임금 확산 및 원청 책임 조례 제정

- 생활임금 확대 : 춘천·원주 중심의 생활임금 조례를 강원 전 시·군으로 확산
- 사용자 의무 : 강원도청 및 산하기관 하청·용역 노동자 교섭에 도가 사용자로서 참여 의무화

⑤ 삼척·폐광지역 정의로운 전환 추진

- 고용 보장 : 삼척 블루파워 폐쇄 과정 내 해고 노동자 전원 재고용 보장
- 기금 조성 : 폐광지역 녹색일자리 창출 및 강원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 추진, 국비 매칭

② 농민 – 농민과 함께 사는 강원

① 월 30만 원 강원형 농민기본소득 도입

- 단계적 지급 : 5개년 로드맵을 통해 전 농민 대상 월 30만 원 지급 달성
- 직불금 확대 : 강원도 특성에 맞춘 경사지·고랭지 밭직불금 확대 병행

② 공공급식·로컬푸드 100% 강원산 친환경 전환

- 공공기관, 지역기업 등에 로컬푸드 공급을 권고가 아니라 사회적 조달 시스템으로
- 판로 확보 : 학교·공공기관·복지시설 급식의 강원산 친환경 농산물 비율 100% 추진
- 선순환 구조 : 농민에게는 안정적 판로를, 아이들에게는 안전한 밥상 보장

③ 강원 농지은행 설립 및 투기 농지 환수

- 현행 중앙 주도, 시장 중개 방식에 치중된 농지 은행을 개혁하여 (청년)농민 중심 제공
- 전수조사 : 외지인 소유 농지 및 불법 임대차 행위 전수조사 및 근절
- 공공임대 : 환수한 농지를 청년·여성 농민에게 우선 공급하는 강원 농지은행 설립

④ 농어촌 버스 완전 무료화

- 이동권 보장 : 인제군 모델을 강원 전역으로 확산하여 어르신·학생 교통 복지 실현
- 시스템 고도화 : AI 수요 분석 기반 최적 노선 도입 및 마을 공유차량 시스템 결합

③ 평등 - 차별 없이 평등한 강원

① 강원형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 **대상 확대** : 도 산하 공공기관뿐 아니라 예산 지원·조달 참여 민간 기업까지 공시 확대
- **인센티브·시정** : 격차 적은 기업에 조달 가점 부여 및 격차 기관 시정계획 제출 의무화

② 공공돌봄센터 18개 시·군 의무 설치

- 수혜자 뿐만 아니라 돌봄 노동자와 돌봄에 종사하는 가족구성원 등에 대한 공적 지원
- **책임 돌봄** : 시·군별 공공돌봄센터 및 면 단위 종합돌봄센터 설치로 밀착 서비스 제공
- **처우 개선** : 돌봄노동자 월급제 도입 및 처우 개선 조례 추진

③ 강원 동반자관계 인증제 전국 최초 도입

- **다양성 인정** : 혼인 외 다양한 삶의 형태를 도 차원에서 공식 인증
- **권리 보장** : 인증 대상자에게 도 차원의 공공서비스 접근권 보장

④ 농촌·접경지역 성폭력 대응 강화

- **인프라 확충** : 사각지대인 농촌·접경지역에 원스톱 성폭력 지원센터 설치
- **맞춤형 상담** : 이주·장애·고령 여성 대상 상담 접근성 제고 및 디지털 성폭력 대응 강화

④ 진보정치 – 지방정부 감시는 정의당

① 도정감시 집중 의정 수행

- 권력 견제 : 도지사에게 집중된 환경영향평가 및 특별자치 특례 권한 상시 감시 및 질의
- 균형 회복 : 일당 독점 구조를 견제하고 도민의 삶을 지키는 진보 의원의 역할 수행

② 강원특별법 전면 개정 추진

- 생태평화 전환 : 난개발 특례조항 삭제 및 생태평화 특별자치도로의 재구성
- 진짜 특별한 민주주의 : 주민발의·주민참여예산·주민소환제 강화를 통한 도민 주권 회복

③ 강원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

- 주민 결정권 : 흥천 양수발전소 등 정책 결정 시 주민참여 및 주민투표제 도입 의무화
- 이익 환원 :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 수익의 지역 사회 환원 원칙 조례 명문화

④ 혈세 낭비 예산 바로잡기 조례 발의

- 예산 재편 : 홍보성·선거성·치적성 행사 예산 일괄 삭감
- 민생 우선 : 삭감된 예산을 노동·농민·돌봄·청년 등 실질적 민생 예산으로 전환



충청북도

노동·생태·돌봄이 살아있는 충북

1. 노동 중심의 민생 경제

- 도지사 직속 노동정책실 격상 및 노동부지사 신설 검토
- 충북 노동권익보호센터 권역별 설치
- ‘우리동네 노동상담소’ 시군별 운영
- 생활임금조례 제정 및 공공부문 적용 확대
-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구조조정·폐업 사업장 노정협의체 구성 및 노동자 생존권 지원
- 시군별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
- 시군별 노동자건강센터 및 노동자종합복지관 설립 지원
- 5인 미만 사업장·플랫폼·특고 노동자 노동권 보장 조례 제정
- 충북 자영업자 부채 통합상담·신용회복 지원센터 운영
- 영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도 추가 지원
- 충북 지역화폐 발행 규모 확대 및 지방세·공공요금 납부 연계

2. 기후위기 대응 및 환경·에너지

- 정의로운 녹색전환위원회 설치(기후 당사자 참여 보장)
- 2035년 충북 탄소 감축 목표 70% 상향
- 청사·공공건축물 신축 시 에너지 자립률 2등급 이상 의무화
- 충북에너지공사 설립 타당성 조사 추진
- 1가구 1태양광 보급 사업 확대
- 시민참여형 에너지 협동조합 육성
- 청주·음성·충주 신규 LNG 발전소 건설 재검토 및 주민 동의 의무화
- 기존 추진 발전소 환경영향평가 강화
- 민간 소각장 증설 인허가 강화 및 주민 동의 의무화
- 산업단지 미세먼지 총량제 도입 및 협약 체결
- 시멘트 공장 환경영향평가 의무 시행 및 주민 건강조사
- 단양·제천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 건강 피해 구제

3. 공공의료 및 전생애 통합돌봄

- 충북 공공의대 설립 정부 협력 추진
- 지역 인재 의무 채용 비율 단계적 상향

- 권역별 공공병원 설립 및 청주의료원 기능 강화
- 청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지원 강화 및 권역 확대
-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병원비 연 100만 원 상한제 시행
- 충북형 도민 주치의제 도입
- 읍면동 통합돌봄창구 개편 및 돌봄 플래너 배치
- 자치구별 공공돌봄센터 운영
- 마을돌봄 참여소득 지급
- 어르신 가정방문 건강관리사업 전 시군 확대
- 1인가구 병원동행·응급 연락망 구축
- 도서지역(괴산·단양 등) 공공의료·응급 이송 강화

4. 친환경 농업 및 식량 주권

- 충북형 농어민 기본소득 월 30만 원 시범 도입
- 소농·고령농 농민수당 추가 지급
- 괴산 유기농업 등 친환경 농업 전환 소득보전 확대
- 학교·공공시설 친환경 지역 농산물 100% 사용 추진
- 권역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 충북 친환경농업 거점단지 조성(미래첨단농업 결합)
- 농작물 재해보상제도 도입 및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도 추가 지원
- 청년 농어민 정착지원금 지급
- 여성 농어민 전담인력 배치 및 농정 위원회 참여 의무화

5. 교통 및 지역 균형발전

- 월 1만 원 충북 기후패스 도입
- 어린이·청소년·어르신·장애인 우선 무상교통 단계적 시행
- 2030년 대중교통 무상화 단계적 추진
-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추진
- 농어촌·마을버스 저상버스 이행률 제고
- 농촌 지역 1,000원 택시·공공형 버스 확대
- 광역철도(CTX) 청주 도심 통과 노선 재검토 및 BRT 강화
- 청주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 환경영향평가 강화 및 주민 의견 수렴
- 오송-충주-제천 바이오산업 벨트 조성
- 청주공항 기반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6. 거버넌스 및 청년·여성 권리

- 단체장·기관장 업무추진비 매일 공개
- 의회 소속 독립 감사위원회 설치
- 비리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 도민 참여 도정운영 시민 거버넌스 운영
- 주민참여예산제 실효성 강화
- 충북 청년사회상속제(만 20세 3,000만 원) 도입 단계적 추진
- 충북형 청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보증금 없는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청년 월 20만 원 주거수당 지급
- 여성 안심주택 공급 확대
- 비혼·1인 가구 여성 종합지원센터 설치
- 도지사 직속 성평등정책관 신설

충청남도

같이 살자, 같이 가자, 충남

[생태] 재생에너지 수도 충남

- 조직개편(기후부지사 신설, 기후에너지실 설치)
- 충남재생에너지공사 설립(해상풍력 발전소 설립, 방조제 해수유통을 통한 조력발전소 추진, 시민햇빛발전소 확대)
- 공공기관부터 re100 추진
- 정의로운전환위원회 행정조직화
-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지역에 국가 재생에너지공사 유치와 재생에너지 연구단지 조성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와 ‘재생에너지 확대와 폐기물 해결을 위한 광역협의체’ 구성
- 호남-수도권 송전선로 건설사업 중단과 용인반도체국가산단 정책전환 촉구를 위한 범도민 추진단 구성 운영

[공공] 모두를 위한 충남

- 대도시에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충남개발공사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20% 보급)
- 공공의대 설립과 무상의료 실현(무상의료 연100만원 상한제)
- 충남공공은행 설립으로 지역순환경체제 구축
- 충남교통공사를 설립해서 거점형 광역교통망을 철도로 구축하고 버스공영화를 통한 대중교통 무상화 추진
- 충남사회서비스원 독립으로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통해 서비스질을 높이고 무상돌봄 추진으로 돌봄의 공공성 확대
- 농어촌기본소득 확대와 기후생태직불제 도입

[노동] 노동자가 살만한 충남

- 조직개편(노동부지사 신설, 노동실 설치)
- 노사민정협의체를 정의로운전환위원회로 개편(석탄발전, 화학, 자동차, 철강, 서비스유통, 공공, 문화예술 분과 설치 운영)
- 노동감독관 채용과 교육, 현장배치, 운영을 노동단체, 전문가들과 협의하여 추진
- 노조밖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 충남노동권익센터를 시군에 확대설치 운영(시군과 협의)

[주민주권] 주민중심 충남

- 충남대전통합추진 중단
- 충남, 대전, 세종, 충북 광역협의체 운영 내실화
- 읍면동장 주민직접 선출제 도입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범도민추진단 구성 운영
- 시군간 연계협력사업 촉진을 위한 사업단 운영

[인권] 차별없는 충남

- 충남인권조례, 충남학생인권조례 개정
- 중증장애인 24시간 돌봄 실현
- 장애인,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저상버스 보급 확대
- 청년기본소득제 실시, 공공기관부터 지역청년고용할당제 실현

전라북도

정의로운 전환으로 같이 사는 전북

새만금 개발사업 생태적 전환

- 더 이상 매립은 중단
- 새만금호 전면 해수유통
- 기후위기와 생태 보전을 위한 사업 전환
- 서해안 수산업 및 서비스업 복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송전탑 및 송전선로 건설 사업 전면 재검토

- 현 정부의 주민 동의없는 초고압 전력망 정책 전면 재검토
- 재생에너지 지산지소 원칙 실현
- 전력망 공공성 확보

노동존중 전북특별자치도 실현

- 노동정책기본계획 실현을 위한 예산 전액 확보
- 취약노동자 보호 및 지원 강화
-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생활임금제 확대 강화

지역소멸 위기 대응 비전

- 재생에너지, 농생명, 돌봄 중심 공공·녹색 일자리 확대
- 청년 정착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및 정착지원금 실현
- 농산어촌 살리기 국가책임제 요구

농어민 기본소득 확대 및 필수농자재 지원 현실화

- 전북지역 특성에 맞는 기본소득 확대 추진
- 농촌지역 돌봄 및 생활 서비스 사업 결합 추진
- 전북 농업 특성에 맞는 필수농자재 실질적 지원 현실화

경상북도

핵발전소 없는,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경북

1. 탈핵 및 친환경 에너지 전환

- 월성 2·3·4호기 수명연장 반대 및 단계적 폐쇄 정부 촉구
-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정부 촉구
-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정부 촉구
- 월성원전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추가 건설 저지
- 경북 원자력안전 시민감시 협의체 설치
- 핵시설 인근 주민 건강조사 정례화 및 피해구제
- 경북에너지공사 설립 타당성 조사 추진
- 공공·시민참여형 동해안 해양풍력단지 조성(어민·환경단체 협의 우선)
- 1가구 1태양광 보급 및 농촌 마을 햇빛연금 사업
- 시민참여형 에너지 협동조합 육성
- 경북 기후정의 기본 조례 제정
- 쓰레기·폐기물 자원순환 체계 구축

2. 노동 중심의 경제 정의 및 산업 전환

- 포항 철강산업·구미 전자산업 정의로운 전환 거버넌스 구성
- 경북형 정의로운 전환기금 조성 및 노동자 교육·소득·전직 지원
- 산업전환기 노동자 임의해고 금지 가이드라인 수립
- 원·하청 직접고용 구조 확립 및 다단계 하도급 근절
- 친환경 자동차부품·미래모빌리티 산업 클러스터 구축
- 경북 노동기본조례 제정
- 필수노동자 권리보장 조례 제정
- 5인 미만 사업장·플랫폼·특고 노동자 노동권 보장 조례 제정
-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경북 노동권익보호센터 권역별 설치
- 경북형 공공일자리 확대 및 생활임금 보장
- 지역 대학 연계 직무전환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 청년 노동자 지역 정착 지원 강화

3. 공공의료 확충 및 전생애 통합돌봄

- 경북 남부권 지방의료원 신설 추진 및 국비 확보

- 안동·김천·포항의료원 기능 강화 및 시설 현대화
- 도내 공공병원 6개소 확충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시행
-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병원비 연 100만 원 상한제 시행
- 경북형 도민 주치의제 도입
- 경북 공공의대 설립 정부 협력 추진
- 도서·산간 지역 응급의료 24시간 체계 구축 및 닥터헬기 운영 강화
- 경로당 연계 마을 공공돌봄센터 설립(주야간 보호·24시간 돌봄)
- 경북사회서비스원 기능 강화
- 읍면동 통합돌봄창구 개편 및 돌봄 플래너 배치
- 어르신 가정방문 건강관리사업 전 시군 확대
- 1인가구·독거노인 병원동행·응급 연락망 구축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조례 강화
- 최중증·발달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경북 추가지원
-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지원주택 권역별 확충

4. 농업 주권 및 청년·교육 복지

- 경북형 농어민 기본소득 월 30만 원 단계적 확대(영양·예천 등 시범 모델)
- 소농·고령농 농민수당 추가 지급
- 친환경·생태농업 전환 소득보전 확대
- 학교·공공시설 친환경 지역 농산물 100% 사용 추진
- 권역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 농작물 자연재해 피해 보상 현실화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도 추가 지원
- 청년 농어민 정착지원금 5년간 월 100만 원 지급
- 청년 농어민 농지·시설 장기 저리임대 리스제 도입
- 친환경·로컬푸드 무상급식 비중 확대
- 미취업 청년·신규 청년 농어민 청년수당 도입
- 지역 사립대 위기 대응 정부 협력 및 도 지원

5. 경북 지역 현안 — 재난·환경·자치

- 낙동강 보 전면 개방·철거 정부 촉구 및 생태계 복원
- 낙동강 자연성 회복 및 수질 개선
- 포항 지진 피해 제도적 보상 추진 및 공적 기금 활용(시립병원·산재병원 건립)
- 2025년 경북 산불 피해 안전한 복원 및 재발 방지 종합대책

- 산불 피해 지역 주민 차별 없는 긴급 생계비 지원
- 산불 피해지역 주민 심리상담센터 운영
- 재난 피해 농어민 경영안정 자금 지원 확대
- 재난 대응 산림 관리 인력 상시 운영

6. 거버넌스 및 지역재정

- 경북 지역재투자 조례 제정(지역 자금 수도권 유출 방지)
- 경북 지역화폐 발행 규모 확대 및 지방세·공공요금 납부 연계
- 도 출자 지역공공금융기구 설립 검토
- 단체장·기관장 업무추진비 매일 공개
- 의회 소속 독립 감사위원회 설치
- 도민 참여 도정운영 시민 거버넌스 운영
- 주민참여예산제 실효성 강화
- 대구·경북 행정통합 시·도민 공론화 및 주민투표 의무화
- 대구·경북 회생법원 설치 정부·국회 촉구

7. 청년·여성·소상공인

- 경북 청년사회상속제(만 20세 3,000만 원) 도입 단계적 추진
- 보증금 없는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청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도지사 직속 성평등정책관 신설
- 비혼·1인 가구 여성 종합지원센터 설치
- 농촌 여성 안심주택 공급
- 영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도 추가 지원
- 자영업자 부채 통합상담 및 신용회복 지원

경상남도

사람이 우선인, 자립경제 경남

1. 지역순환경제 3대 조례 입법

경상남도 지역재투자 활성화 기본 조례

- 경남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업체 우선 조달 비율을 30% 이상으로 의무화
- 지역내 조달 비율이 높은 기업에게 도 조달 사업 우선 참여 혜택 제공

경상남도 지역공공금융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시중 은행의 지역 예금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지역 중소기업인과 사회적 경제 조직에 저리 용자를 실행하는 전담 금융 기구 설치

경상남도 도시·농어촌 상생 촉진 및 먹거리 선순환 기본 조례

- 경남형 로컬푸드 구독 서비스 도입. 복지시설, 공공기관 급식에 지역 농수축산물 공급체계를 직거래화

2. 대중교통 무상화

대중교통공사 설립 조례

- 시군별로 파편화된 버스 준공영제 통합관리
- 인구소멸지역 완전 공영제 전면도입
- 도시지역은 민영제와 공영제가 공존하는 혼합형 운영

경남형 0원 패스 시행 : 어린이, 청소년, 운전면허 반납 노령층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전 도민 무상 시내버스 실현

광역교통망 혁신 : 경남 전역 시외버스 요금 K패스에 포함

3. 지역통합돌봄 실현

읍면동별 돌봄SOS센터 설치

- 긴급돌봄, 가사 간병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

공공의료 강화 : 기존 보건소 100% 활용

- 서부경남 공공병원 조기 완공
- 동부경남 공공병원 건립 : 김해, 웅상
- 보건진료소를 마을건강돌봄센터로 개편 : 진료 중심에서 예방 및 돌봄 관리 중심으로 전환
- 우리동네 돌봄팀 구성 : 보건진료소장을 중심으로 마을 복지사, 주민 봉사자가 참여
- 방문 간호 및 재택 의료 강화 : 보건진료소의 핵심업무를 찾아가는 방문 건강관리로 전면 개편
- 보건진료소 운영위원회 노동자, 농민단체 등 주민 참여 보장

4. 무장애도시

도내 모든 신축 공공건축물 및 도로 정비 시 무장애 설계 적용 의무화

저상버스 100% 도입 : 2030년까지 도내 모든 버스를 저상버스로 교체하는 로드맵 수립

5. 주민수익형 태양광 발전소 건립

경남 에너지 공유기업 설립

- 공단 공장 지붕, 공유지, 공공건물 옥상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소 건립 시 지역 주민 주주로 참여
- 태양광설비 유지보수 경남 퇴직 노동자 재취업

햇빛 연금 지급 : 발전 수익을 지역 주민들에게 배당

6. 모두의 노동기본권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확대

- 현행 100인 이상 공사에서 30인 이상 공사로 확대
- 직원 투표로 선출된 1위 후보자를 즉시 임명토록 명문화
-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 도내 기업에게 도 조달 사업 우선 참여 혜택

아파도 걱정 없는 경남 : 상병수당 경상남도 책임제 도입

- 경남형 유급병가 지원제 신설 : 소규모 공장 및 영세 자영업, 플랫폼 노동자 대상 연간 최대 20일 유급병가 수당 지급
- 경남 노동복지기금 조성 :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지자체의 책임 강화하기 위해 도, 시군, 기업이 부담하는 기금 설치
- 보건진료소 인증제 : 농어촌 소규모 공장 인근의 보건진료소에서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 시 별도 서류 없이 즉시 수당 신청 가능하도록 행정망 통합

7. 지역 자생 사업

기존 1회성 재생사업을 넘어 지속 가능한 마을 자생 사업 진행

- 긴급돌봄, 가사 간병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

경남형 마을자산화 기금 조성 : 도내 방치된 빈집을 지자체가 매입하거나 장기임대하여 마을기업에 저렴하게 제공하는 자원 마련

마을관리소의 공공위탁 확대 : 마을도로청소, 주차관리, 공원가꾸기 등 공공사무를 마을기업(관리소)에 위탁하여 안정적인 일자리와 수익원 보장

1시군 1특색 마을호텔/공방 브랜드화 : 마을의 스토리에 걸맞는 맞춤형 사업 도입 (서부경남은 치유, 농촌 유학. 남해안 어촌은 해양 레저 워케이션 등)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를 넘어, 삶의 질 1위 생태도시 세종

1. 행정수도 완성 지원 및 자치분권 선도도시

- 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 조기 완공 지원 및 행정협력 강화
-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촉진 및 공공기관 정주환경 개선
- 주민자치회 전면화 및 시민참여예산 확대를 통한 자치분권 모델 구축
- 세종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촉진 및 입지 지원

2. 금강 생태복원 및 탄소중립 선도도시

- 금강 자연성 회복 및 수변 생태벨트 조성
- 금강-호수공원-국립수목원-생활권 녹지 연결 도시 생태축 구축
-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자립도시 추진
- 공공건물 RE100 및 제로에너지건축 확대
- 생활 유해물질 관리 및 실내환경 안전관리 체계 구축

3. 대중교통 혁신 및 단계적 무상교통 도시

- BRT 중심 대중교통 체계 고도화 및 배차 간격 단축
- 읍면지역 수요응답형 교통 확대 및 교통 공공성 강화
- 기후패스 도입 및 단계적 무상교통 추진
- 자전거·보행 중심 친환경 교통 인프라 확대
- 교통약자 이동권 24시간 보장 체계 구축

4. 아동·돌봄·1인가구 통합복지 도시

-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 및 공공돌봄 인프라 확대
- 아동 무상의료 및 공공 어린이 의료체계 구축
- 공공 실내놀이터 및 아동친화 공간 확대
- 읍면동 돌봄커뮤니티 센터 구축
- 1인가구 지원 통합센터 설치 및 사회적 고립 대응
-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 설치 및 노동권 보호 강화

5. 공정경제 및 도농상생 지역경제 구축

- 공공임대상가 확대 및 소상공인 임대료 안정화 정책 추진
- 소상공인 영업권 보호 및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 개발사업 주민참여제 및 개발이익 공유제 도입
- 농지 투기 근절 및 공공농지 관리 강화
- 로컬푸드 유통체계 강화 및 도농상생 지원체계 구축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및 노동권 보호 정책 확대

제주특별자치도 생태평화의 섬, 도민이 주인 되는 제주

1. 기후정의와 생태보전

-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 백지화 및 현 공항 확충 추진
- 비자림로 확장 등 생태파괴 사업 중단
-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재검토 및 공공 매입 전환
- 환경보전기여금(녹색입도세) 도입
- 환경영향평가 조례 강화 및 사전고지 의무화
- 신규 가스발전소 건설 백지화 추진
- 공공·도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모델 확대(추자도 해상풍력 등)
- ‘대한민국 환경수도 제주’ 선언 및 환경자치 거버넌스 강화
- 기후위기 대응 부지사급 컨트롤타워 신설
- 꽃자왈·오름·습지 등 생태 보전지역 관리 강화
-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시범 도입

2. 제주 4·3의 정의로운 해결과 평화의 섬

- 제주 4·3 정명(正名) 운동 지자체 차원 추진
- 4·3 추가 진상규명 및 배·보상 확대 정부 촉구
- 4·3 평화·인권 교육 정규 운영 및 청소년 평화캠프 확대
- 4·3 평화기념관·유적지 보존 및 관리 강화
- 알뜨르 비행장 스포츠타운 추진 중단 및 도민 주도 평화대공원 조성
- 미군기지·해군기지 환경·건강 영향조사 및 피해구제
- 군사시설 주변 지역 지원 조례 강화
- 평화의 섬 국제연대 네트워크 참여

3. 자치분권 및 도민 참정권

- 기초자치단체(기초의회·시장직선제) 부활 도민 공론화 추진
- 도지사 인사청문회 제도 실효성 강화
- 도민 참여예산제 실효성 강화 및 시민감시 체계 구축
- 온라인 도민입법 플랫폼 운영 및 일정 동의 도달 시 의회 자동 부의
- 발전소·폐기물시설 등 시설 입지 결정 시 주민 동의권 제도화
- 단체장·기관장 업무추진비 매일 공개

4. 대중교통 및 이동권

- ‘1만 원 제주 기후패스’ 도입
- 어린이·청소년·어르신부터 단계적 무상버스 실시
- 버스 준공영제의 완전공영제 전환 추진
- 제주 대중교통공사(가칭) 설립 검토
- 도서지역 공공교통 확충 및 운영비 지원
- 저상버스 의무도입 이행을 제고 및 보조금 확대
- 장애인 콜택시 법정 대수 2배 확충 및 24시간 운영
- 무장애 도시 디자인 조례 제정 및 신축 공공건축물 의무 적용

5. 민생경제 및 지역순환

- 지역화폐 ‘탐나는전’ 발행 규모 확대
- 탐나는전 공공배달앱·택시 호출 종합 플랫폼 연계
- 도서 지역 물류비 경감 및 산지경매제 시범 도입
- 제주형 직불제 도입 및 단가 인상
- 제주형 농어민 기본소득 도입 및 단계적 확대
- 농어민 공익수당 어업인 확대
- 친환경·생태농어업 전환 소득보전 사업 확대
- 학교·공공급식 제주산 친환경 농수산물 우선 공급체계 구축
- 도내 소상공인 부채 통합상담 및 신용회복 지원센터 운영
- 도 출자 지역공공금융기구 검토

6. 공공의료 및 돌봄

- 도내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추진
- 제주 동·서 권역별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 제주 아동전문병원 설립
-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병원비 연 100만 원 상한제
- 도서지역 응급의료 24시간 체계 구축 및 닥터헬기 운영 강화
- 마을 단위 통합돌봄센터 설치 및 원스톱 서비스
- 마을별 돌봄 전담 공공일자리 1,500명 이상 확보
- 어르신 가정방문 건강관리사업 전 읍면동 확대
- 치매안심센터 기능 강화

7. 장애인 자립생활

- 최중증·발달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도 추가지원

- 활동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도 보전
-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지원주택 확충
- 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신설 및 생활임금 지급
- 장애인 콜택시 24시간 운영 및 도서지역 이동 지원

제9회 지방선거 정의당 정책공약집

내란 너머, 회귀가 아닌 전환
공존을 위한 5대 사회계약으로
누구나 마음 놓고 사는 지역

만든날 2026년 5월 11일

만든이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원회 의장 : 김진석

정책위원회 : 이수연, 김상우, 한영섭, 박인희, 윤재설

편집 : 황혜준

발행인 김영진

발행처 진인진

등 록 제25100-2005-000003호

주 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92, 101동 1818호

전 화 02-507-3077~8

팩 스 02-507-3079

홈페이지 <http://www.zininzin.co.kr>

이메일 pub@zininzin.co.kr

이 정책공약집은 「공직선거법」 제138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내란 너머, 회귀가 아닌 전환
공존을 위한
5대 사회계약으로
누구나 마음 놓고 사는 지역

- 제9회 지방선거 정의당 정책공약집 -